KOTRA자료 15-037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전략 추진방안 연구

KIEP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提 出 文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전략 추진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4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 일 형

研 究 陣

〈研究責任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 형 곤

〈研究陣〉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강 준 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나 승 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 구 원	이 보 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 구 원	이 민 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 구 원	이 성 희

- 목 차 -

제1장 추진배경 및 목적 ····· 1

제2장 추진 여건 검토 ····· 3

1. 기존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전략 평가 ····· 3

가. 추진배경 ····· 3

나. 추진 목적 및 방향 ····· 4

다. 성과 및 한계점 ····· 5

2. 대내외 환경 변화 ····· 7

제3장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2.0 기본방향 ····· 10

1. 정책방향의 전환 ····· 10

2. 고려 요인 ····· 11

3. 전략의 기본방향 ····· 13

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개념 ····· 13

나. 발전 컨셉 ····· 14

다. 세부 추진방향 ····· 15

4. 동북아비즈니스 허브 2.0 성공위한 선결 과제 ····· 15

제4장 산업별 거점화 추진방향 ····· 19

1. 식품 ····· 21

가. 현황 ····· 21

나. 기본 방향 ····· 26

다. 추진과제 ····· 28

2. 화장품・패션 ····· 33

가. 현황 ····· 33

나. 기본방향 ····· 36

다. 추진 과제 ····· 37

3. 문화컨텐츠 ····· 39

가. 현황 ····· 39

나. 기본방향 ····· 40
다. 추진과제 ····· 42
4. 부품소재 ····· 44
가. 현황 ····· 44
나. 기본방향 ····· 46
다. 추진과제 ····· 48
5. 신재생에너지 ····· 51
가. 현황 ····· 51
나. 기본 방향 ····· 55
다. 추진과제 ····· 57
6. ICT 융복합 ····· 59
가. 현황 ····· 59
나. 기본 방향 ····· 63
다. 추진과제 ····· 65
7. 금융 ····· 66
가. 현황 ····· 66
나. 기본방향 ····· 68
다. 추진과제 ····· 69
8. 물류 ····· 73
가. 현황 ····· 73
나. 기본방향 ····· 77
다. 추진과제 ····· 78
9. 복합레저 ····· 83
가. 현황 ····· 83
나. 기본 방향 ····· 86
다. 추진과제 ····· 87
10. R&D ····· 92
가. 현황 ····· 92
나. 기본 방향 ····· 97
다. 추진과제 ····· 98
11. 오일 허브 ····· 104
가. 현황 ····· 104

나. 기본방향 ····· 106
다. 추진과제 ····· 107
12. 의료관광 ····· 111
가. 현 황 ····· 111
나. 기본방향 ····· 119
다. 추진과제 ····· 120
13. 법률회계 ····· 124
가. 현황 ····· 124
나. 기본 방향 ····· 127
다. 추진과제 ····· 128
14. 교육 서비스 ····· 131
가. 현황 ····· 131
나. 기본방향 ····· 134
다. 추진과제 ····· 134

제5장 관련 제도적 · 물적 인프라 구축 ····· 137
1. 인센티브 제도 ····· 137
2. 규제개선 ····· 140
3. 외국인투자 유치 및 지원체계 개편 ····· 143

- 표 목차 -

<표 3-1> 한국와 주요 허브국가 비교 ····· 14

<표 4-1> 국가별 식품 시장규모 순위 ····· 22
<표 4-2> 품목별 가공식품 세계시장 규모(2013) ····· 22
<표 4-3> 한국 농수산식품의 중국 수출 동향 ····· 24
<표 4-4> 한국 가공식품의 대중 주요 수출 품목 ····· 25
<표 4-5> 주요국의 화장품 시장 규모 ····· 34
<표 4-6> (2009-2013) 진료유형별 외국인(실)환자 현황 ····· 113
<표 4-7> (2009-2013) 주요 국적별 외국인환자 현황 ····· 114
<표 4-8> (2009-2013) 진료과별 외국인환자 현황 ····· 115
<표 4-9> (2009-2013) 지역별 외국인환자 현황 ····· 116
<표 4-10> (2009-2013) 진료비 구간별 외국인환자 현황 ····· 117
<표 4-11> 한미 FTA 법률・회계 서비스 분야 주요개방 약속 ····· 126
<표 4-12> 외국인력 고용 특례제도 개선방향(예시) ····· 140

- 그림 목차 -

<그림 4-1> (유형 1) 유망분야 도출 ····· 19
<그림 4-2> (유형2) 유망분야 도출 1 ····· 20
<그림 4-3> (유형2) 유망분야 도출 2 ····· 20
<그림 4-4> 중국 (가공)식품 소비전망 ····· 23
<그림 4-5> 중국 (가공)식품 교역전망 ····· 23
<그림 4-6> 환적허브 전략 모델 ····· 75

제1장 추진배경 및 목적

□ 2002년 참여정부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

○ 이를 위해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물류허브, 금융허브, R&D 허브 구현 및 전략적 외투유치를 추진하였고,

○ 경제자유구역, 전략적 외투유치제도(Cash Grant 제도도입 IK설치 등) 도입 등 다양한 외국인투자유치 기반을 구축

□ 그러나, 전반적인 성과가 미흡하고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전략의 추진동력 또한 상당히 약화된 상황

○ 금융허브 전략의 경우 관련법 제정, 기본계획 수립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허브전략에서 사실상 산업경쟁력 강화정책으로 후퇴한 상황

○ 물류허브 전략 또한 상해 등 중국항만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중국발 역내 환적물동량에 기초한 기존 허브구상의 성과 도출이 힘든 여건

○ 제조업 측면에서는 일부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제외하고 세계화의 영향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로 국내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지속

○ 더불어 허브전략의 핵심 정량지표인 외국인 직접투자액 (Inward FDI)은 한국 경제규모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수준

□ 동북아지역은 북미. EU에 이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중국 경제 급성장*으로 인해 비중이 계속 확대

* 구매력 기준 GDP 세계 1위(17조 6천억$), 경제성장률 7%대, 14억 내수시장 등

○ 이에, 기존 홍콩, 싱가포르 이외에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각국은 자국을 국제 비즈니스 중심이 되기 위해 노력 중

* (일) 글로벌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아시아거점화 법률시행(‘12.11월), (중) 상하이 자유무역시험지구 지정(‘13.9월), (대만) 타이페이항 등을 자유경제시범구역 지정 등

□ 한국은 한중 FTA 체결로 FTA플랫폼이 완성됨으로써 기존 산업기반, H/W 및 S/W 인프라*와 결합되어 동북아 경제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

* 산업기반(제조업 기반, IT 등), H/W인프라(각종 특구, 물류 기반, 지리적 위치 등), S/W인프라(FTA 플랫폼, 지적 재산권, 한류 등), 생활 및 경영여건 등

○ 특히, FTA플랫폼은 제조, 서비스,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전세계 기업들에게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예시) 중국기업이 한국식품산업에 투자 → 한국 프리미엄을 활용 중국에 수출, 미국기업에 생산거점구축 → 국내 부품소재기반 활용 생산 → 중국 수출

□ 따라서, 우리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 기존 전략의 성과·문제점 검토를 바탕으로 新비즈니스 허브 전략을 수립·추진할 필요

○ 기존 허브전략을 통해 하드웨어 인프라가 개선되고 규제완화 등 일부 제도·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인프라 개선된 것은 성과

○ 그러나, 기존 허브전략의 성과가 미진하고, 10여 년간 국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새로운 전략 모델 제시가 없는 현재와 같은 허브전략은 실패로 귀결될 것

○ 특히, 최근 FTA 플랫폼 구축, 국내 비즈니스 환경 개선, 중국에 어필하는 Korea 프리미엄과 한류열풍, ICT 산업기반 등 역내 경제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다양한 기회요인이 부상

○ 대내외 경제여건의 빠른 변화를 고려할 때, 이러한 한국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거점화 전략이 적기에(신속히) 수립·추진되는 것이 중요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의 비즈니스 허브전략의 문제를 진단하고,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회요인을 고려한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2.0”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제2장 추진 여건 검토

1. 기존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전략 평가

가. 추진배경

□ 중국의 부상 및 동북아 경제권 성장 잠재력의 활용

○ 동북아지역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그 위상이 제고되면서, 세계 3대 교역권(EU · NAFTA · 동북아)의 하나로 비중이 계속 확대

○ 또한 풍부한 인적자원과 광대한 잠재시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이자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우리경제의 위협요소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중요한 기회로서 대두될 것이라는 기대 및 우려 제기

○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성장의 엔진인 동북아지역에 위치해 있어 발전과 성장의 측면에서 많은 가능성을 가질 것으로 전망

○ 그런 가운데, 각 국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화 노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바, 한국이 주변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의 육성계획을 본격화

□ 한국의 "Nut-Cracker 상황" 우려에 따른 신산업 육성 필요성

○ 국제적 컨설팅 사인 부즈-앨런&해밀턴(Booa Allen & Hamilton)은 한국의 상황에 대하여 "제조업 기반은 광대한 내수시장과 저임 노동력의 중국에, 첨단기술은 일본에 밀리는 Nut-Cracker의 상황"이라 지적

○ 이에 따라 신산업 거점 육성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IT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우수한 인력/기술의 활용을 위한 전략 수립 필요성 제기

□ 국내 서비스 산업의 전략적 육성

○ 한국경제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심화 및 후발국가의 추격에 따른 일부 산업공동화 현상 및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에 따라 미래의 신성장동력확보의 필요성이 제기

○ 한국경제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조선 등과 같은 중화학공업과 반도체, 휴대폰 제조 부문은 세계적으로 설비와 공급이 과잉상태에 있는 상황으로 보다나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설계하기위해서는 한국의 지리경제적인 입지조건을 상품화하는 전략이 필요

○ 특히 높은 대외의존도 및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국내경제는 대외적 여건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내수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업의 확대 및 발전의 필요성 제기

□ 세계적인 공항/항만 보유 여건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물류허브

○ 지리적 잇점과 더불어 인천공항, 부산/광양항 등 경쟁력을 갖춘 국내 물류 인프라의 효과적 활용 필요성 제기

○ 이에 따라 인천공항, 부산·광양항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동북아 중심공항 및 항만으로 개발하고, 국내외 물류 네트워크의 구축 및 국제 물류지원 센터 설립 등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동북아 물류 중심지화 전략을 추진

나. 추진 목적 및 방향

□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전략의 기본방향

○ 한반도의 지정학적 입지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국을 동북아지역의 물류중심지로 만드는 한편 기업과 금융활동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

- 동북아의 물류허브 육성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계속 확대개발하고,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북아의 '메가 허브항구'로 개발

- 한국경제 전 분야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하고, 이에 맞게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 세제를 비롯한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금융시장의 제도와 관행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외국인들이 큰 애로를 느끼고 있는 의료와 자녀교육, 주거환경을 개선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

○ 동북아 경제중심이라는 국가정책의 실현을 위한 거점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및 개발되었으며,

○ 경제자유구역은 이러한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특히 물류 중심지인 인천, 부산, 광양 등을 중심으로 지정 및 육성

○ 경제자유구역은 특히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극 도입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인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개방화의 물결에서 우리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

다. 성과 및 한계점

□ (주요 성과) 인프라 구축, 동시다발적 FTA 체결 등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

○ 물류 인프라(항공, 항만 등) 및 신산업 거점 클러스터(일부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 거점화 추진을 위한 기초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

○ 2003년 금융허브 전략 추진 이후 금융중심지 구축을 위한 금융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추진

- '03.12월,「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드맵 1단계 전략('04～'07년)에 따라 금융허브 기반 구축 추진

- 두 차례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수립으로, 금융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및 서울·부산 금융클러스터 구축의 제도적 기반 구축

○ FEZ를 중심으로 각종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추진 성과 도출

- 인허가 의제처리 확대, 기반시설 국고지원 강화를 도모하였고, 기타 개발 및 운영규제 완화를 추진

- 또한 조세감면대상 확대, 임대주택 공급제도 개선, 외국대학 운영비 지원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 (한계점) 금융 및 물류허브 등 동북아비즈니스 허브에 대한 전략 FDI 유치 등 실질적 성과가 미흡하고, 제도개선 측면에서도 한계점 노정

○ 물류허브전략의 경우 중국항만과의 경쟁 심화에 따른 역내 환적화물수요 감소로 기존 허브전략의 효과적 실현이 어려운 상황

- 기존 물류허브 전략은 항만의 환적 물동량 확대에 기초한 거점화 전략에서 출발

- 그러나 예상보다 중국 항만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환적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축소, 기존의 물류허브전략을 통한 성과 도출은 더 이상 어려운 상황

○ 금융허브의 경우도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실상 금융허브 보다는 금융산업 선진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변화된 상황

- 자산운용업 등 특화금융 중심지화 전략의 경우 사실상 동력을 잃은 상태이며,

-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등 관련정책 또한 허브구축 보다는 국내 금융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상황

○ 경제자유구역 또한 지속적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규제철폐 미흡, 지원·조정역량의 제약, 과다 지정 등으로 경제특구로서의 매력도 저하 문제 제기

2. 대내외 환경 변화

□ 2000년 초반 정책 환경

○ 중국의 고도성장과 동북아역내 경제적 역동성에 따른 한국의 지리적 이점 극대화 필요

○ 한국의 “Nut-Cracker"상황에 대한 우려: 신산업 거점 육성 필요성 대두

○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 대두: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 서비스산업 육성 등 제기

□ 정책추진 환경의 변화

[대외환경]

○ 한국의 “Nut-Cracker 상황” 지속, 중국의 경제적 위상 증대로 위협과 기회요인 상존

○ 생산중심의 글로벌화의 흐름이 R&D와 인재의 글로벌화로 변화

○ 중국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으로 인한 역내 소비시장의 다변화

○ 제조업 전반에서의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의 심화

○ 세계화의 진전으로 생산요소 등의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짐 ⇒ 경제적 측면에서 국경개념이 사라지고 국경 내에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능력의 중요성이 확대

[대내환경]

○ 동시다발적 FTA 체결로 FTA 허브국가*가 되었으며, 2000년 초 대비 개방여건 및 투자환경 개선

- FTA 플랫폼 구축: 한중 FTA에 따라 한국은 미국, EU, 중국 등 3대 경제권과 동시에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로 부상

- FTA 플랫폼은 중국시장*으로 인해 그 가치를 더하는 상황

*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구매력 기준 GDP 세계 1위 국가가 되었고, '세계의 공장'에서 14억 인구를 가진 최대 소비 시장으로 변화

○ 역내 거점 투자지로서의 한국시장에 대한 관심 제고

- 중국 기업은 한국에서 Made in Korea 프리미엄, 한류열풍, FTA 특혜관세 등을 활용, 글로벌 시장이나 자국의 내수시장으로 재진출 하는 기회 포착

- 지재권 보호 등으로 중국 진출을 주저하던 미국·EU 등 선진국 기업은 한국의 지리적 장점, 한중 FTA를 통해 중국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 제고

○ 국내 주요 기업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사업환경 개선

- 제조업과 ICT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에 기반한 벤처기업의 혁신 노력도 높은 평가를 받는 상황

- 세계은행의 '사업하기 편한 국가'에서 세계 5위를 기록할 만큼 선진국 수준의 사업 환경과 정주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

- 경제자유구역, R&D 특구 등 공간적 기반을 지속 구축, 위안화 청산 결제 등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적 기반도 형성

○ 다만, 내수침체, 투자부진, 수출의 부가가치 하락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따른 성장 잠재력 저하 문제 또한 지속 제기

[강점/기회]

□ 한국은 홍콩, 싱가포르 등에 비해 외국어 활용환경, 규제수준 등에서 열위에 있으나 **탄탄한 산업기반 등 다양한 강점과 인프라를 보유**

○ **(강점)** 급성장하고 있는 경제대국인 중국과 인접성, 탄탄한 산업기반, 우수한 인력, 아시아에서 한국 프리미엄 형성 등의 강점 보유

○ **(인프라)** 경제자유구역, 새만금 등 특구제도와 외국인투자촉진법, 금융중심지촉진법 등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

□ 특히 최근 한미·한EU에 이은 한중 FTA체결로 **FTA 플랫폼이 완성**됨에 따라 **한국이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호기**가 조성

○ FTA 관세효과를 활용하여 한국을 거점으로 중국 및 글로벌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기업의 투자 수요 확대 가능

○ FTA 플랫폼 활용한 제조업 분야 글로벌기업 투자는 금융, 물류, 법률·회계 등 서비스 분야 파생수요를 창출

제3장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2.0 기본방향

1. 정책방향의 전환

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과 治外法權적 위상 부여를 통한 과감한 규제 free 지역으로 비즈니스 허브 실현위한 정책 의지 필수

○ 전 분야에 대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정책이 아닌 선택과 집중에 따른 실현가능하고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초점

② 동북아비즈니스 허브에 대한 핵심개념에 대한 재인식 필요

○ Attraction: 기술, 자본, 인력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곳이 HUB 임을 재인식하고 이를 위한 최상의 제도적 조건을 갖추어 국내외 기업들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하고,

○ Accessibility: 신속하고 저렴한 공항, 항만, 육상교통, 통신, 물류기반시설의 보완을 통해 접근성을 제고해야 하고,

○ Amalgamation: 협조적 노사관계 정착, 외국인 수용태세 개선, 다국간 문화교류 및 경영능력 배양을 통하여 외국인과 외국기업을 국내사회에 정착시키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

③ '동북아비즈니스 허브'는 실패한 정책으로 새로운 작명으로 정책의 수용성 제고

○ FTA HUB의 platform을 활용하여 동북아에서 가장 선진화된 제도와 투자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지식산업의 허브를 만들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생산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업이 강력히 뒷받침 되는 지역으로 개발

○ 상기 개념들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정책 Title의 작명 필요

○ 새로운 여건에서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지식서비스 중심', '소프트웨어 중심' 등과 같은 기존 비즈니스 허브와의 차별화가 부각되는 정책대응 필요

○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입지여건이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측면에서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의 출발 필요

④ 총괄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중앙집권적 추진체계 및 예산 절실

○ FEZ 등 특구의 발전전략이 산업정책 및 기업정책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주도적 노력 필요

○ 종합적인 거점화 전략 추진을 위해 각 유관부처를 아우르는 일원화된 추진체계 확보 필요

2. 고려 요인

□ '선택과 집중' 실현을 위한 거점 입지 및 산업 재설정 필요

○ 각종 특구 및 지역개발 사업 등의 여건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국가차원의 특화된 입지를 재검토하되,

○ 각종 인프라 및 산업집적화 등 기반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입지에 한정하여 거점화 전략을 추진할 필요

□ 홍콩, 싱가포르 등 기존 동북아(동아시아) 허브와의 차별화 전략 필요

○ 홍콩의 경우 자유로운 경영환경 및 입지여건 등을 기반으로 오랜기간 동북아 지역내 금융허브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어, 후발주자로서 동일한 허브 경쟁은 쉽지 않을 것

○ 싱가포르 또한 물류 및 서비스산업 허브로서 역내 확고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어, 차별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됨.

○ 특히 기존의 역내 비즈니스 허브지역이 대부분 도시국가로서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므로, 한국의 제조업 및 IT 경쟁력, 자체 시장규모 및 FTA 허브국가로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접근 필요

□ 중국요인을 고려한 전략 수립 필요

○ 생산 거점이 아닌 소비거점으로서의 중국의 변화, 해외투자 확대 등의 여건을 고려한 비즈니스 허브 전략 필요

○ 특히, 한중 FTA 체결에 따라 대중국 시장 진출환경에서 비교우위를 갖출 수 있는 분야를 역내 허브전략의 핵심으로 설정

□ 기존 산업거점의 효과적 활용 필요

○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등 다양한 특구정책 추진과정에서 상당 수 거점지역은 물적·제도적 인프라 측면에서 일정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

○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으나, 송도 등 일부 지구의 경우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발전가능한 기반을 어느정도 갖추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이러한 기반여건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여건을 갖춘 기존의 거점지역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

□ 특히 GVC 측면에서의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필요

○ GVC 차원에서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품소재 산업을 분류하여, 해당 분야에 IFDI 유치활동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 통관, 원산지업무, 위생검역 절차 등 무역비용의 간소화를 통해서 관련 기업 유치환경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

3. 전략의 기본방향

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개념

□ (개념)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의 핵심활동이 한국을 중심으로 전개됨으로서 전 세계 투자, 물류, 인력 등이 한국에 집중되는 것을 의미

- 경제허브 국가는 국내 경제자원뿐만 아니라 외부 경제자원을 적극 활용함으로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가능

□ (필요요소) 동북아 비즈니스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외국어 활용 여건, 글로벌 수준에 맞는 제도적 기반 구축, 과감한 규제철폐, 우수한 주변시장 접근성, 자유로운 무역환경 등의 요건이 필요

비즈니스 허브의 개념 및 분류

□ 비즈니스 허브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그 특징은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음.

- 국내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경제기회까지도 이용하여 전세계의 유수한 기업 및 우수 인력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의 고부가가치화 및 선진화를 추구하는 전략

- 이는 한국이 그 동안 추진하였던 수출지향적 발전전략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개방주의적 사고에 기초를 두는 개념

□ 이와 관련하여, 이창재(2002)는 기존의 사례(홍콩, 싱가포르, 상해, 네덜란드, 아일랜드)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요 비즈니스 거점을 유형화

- 지역적 포괄성에 따른 유형화

○ 대표적 비즈니스 허브 사례 중 네덜란드, 아일랜드, 싱가포르는 국가이며, 홍콩은 특별행정구, 상해는 도시로 구분

○ 그러나, 대부분의 비즈니스 허브는 도시국가 혹은 특정 도시이거나, 기타 공항 및 항만 등 특정입지에 집중적으로 형성

- 산업적 포괄성에 따른 구분

ㅇ 산업면에서 가장 포괄적인 비즈니스 허브는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로서, 초기 중계무역항에서 출발하여, 제조업, 물류,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 R&D, 교육 및 의료 등의 거점도 지향

ㅇ 홍콩의 경우 사실상 제조업은 사라지고 있고, 서비스에만 특화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네덜란드의 경우 유럽의 물류거점으로 특화된 후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서비스 거점화를 추구하고 있음.

- 아일랜드의 경우 IT 중심의 제조업에서 시작하여 제약, 의료기기 등의 제조업 분야 및 금융 및 국제서비스 분야로의 확대를 위해 노력

- 상해의 경우 제조업, 무역, 물류 뿐만 아니라 금융중심지의 위상까지 확보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종합적·포괄적 비즈니스 허브가 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음.

나. 발전 컨셉

□ (산업) 홍콩, 싱가포르와 달리 다양한 산업기반을 가진 우리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 포함한 폭넓은 산업을 대상으로 추진

□ (지역) 도시국가인 홍콩, 싱가포르와 달리 기존 인프라를 갖춘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지역별 특화발전하는 전략을 추진

〈표 3-1> 한국와 주요 허브국가 비교

구분	홍콩·싱가포르	한국
산업	금융, 물류 등 특정산업 중심	제조업·서비스업의 다양한 유망산업을 대상
지역	모든 지역을 대상	지역별 특화

다. 세부 추진방향

□ (유망산업 중심) FTA 플랫폼 구축에 따라 우리의 강점 및 인프라와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

□ (전략분야 선정) 경쟁국과 비교분석 등을 통해 유망분야 중에서도 실현가능하고 경쟁국 대비 비교 우위가 있는 전략분야를 발굴하여 정책역량을 집중

* (예시) 금융 → 위안화 허브, 물류 → 전자상거래 등

□ (비즈니스 중심) 전략분야별로 FTA를 활용한 대표적인 비즈니스투자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중심으로 규제제도 개선, 인센티브, 인프라 구축 등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추진

□ (기존 인프라 활용) 기구축된 경자구역, R&D 특구 등 물적·제도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정책추진을 통해 성공 가능성 제고

4. 동북아비즈니스 허브 2.0 성공위한 선결 과제

1 규제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

○ 자유로운 경영환경은 외국인 투자가가 꼽는 제일의 조건

-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가 높은 곳은 불필요한 규제의 철폐를 통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이 가능도록 하며 다양한 비즈니스의 기회를 보장하는데 더 큰 가치 부여

○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규제를 제외하고는 무규제 원칙 적용

○ OECD의 투자환경점검 10개 분야 (투자정책, 투자촉진 및 원활화 정책, 무역정책, 경쟁정책, 조세정책, 기업지배구조 등) 평가를 제도화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 주요 규제완화 이슈

- (외환거래 규제 완화) 최소한 역외시장간 거래에 대한 외환규제는 더욱 과감히 완화할 필요

※ 여수지역 등을 대상으로 원유 저장·거래에 초점을 맞춘 오일허브 전략을 추진하였으나, 활성화 수준이 미진한 이유 또한 외환거래 규제 때문

- (지재권 문제) 중국과의 차별화 측면에서 한국내 지재권 보장제도 강화 필요

※ 중국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는 하나 미국 등 선진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

2 FTA 활용을 통한 외자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 최근 타결된 한중 FTA는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가에게도 시장의 확대를 의미

○ 중국투자가가 한국에 투자하여 우리가 체결한 FTA를 활용한다면 자국에서 진출하는 것 보다 훨씬 수월

○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나 지적재산권 문제 등으로 중국진출을 꺼려하는 선진국들 역시 한국이 중간 거점으로 적절

○ 이를 위해 국내 투자환경 및 시장매력도를 높이는 노력 필요, 지적재산권(IPR) 보호강화 및 외환거래의 규제완화 등 필요

3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M&A 형 투자유치는 기업의 대형화를 통한 비용절감효과가 있으며, 국내기업들의 생산성 향상 및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체계에 편입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

○ 최근 전세계 FDI 증가세의 80%이상이 국경간 M&A인 점을 감안, 우리도 부분적으로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단, 글로벌 독과점 기업의 활동이 우리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M&A 등은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

4 지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외국 전문인력의 아웃소싱 등 활성화

○ 공공기관 영문서류 제출 활성화 등 영문행정 서비스 강화

- 제도적으로 FEZ내 영어 공문 제출이 허용되어있는 바,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 영어 공문처리가 가능하도록 외국변호사 및 번역인력을 정부차원에서 확보할 필요

○ 영어가능 전문인력 확보차원에서 해외 유학인력의 효과적 활용방안 또한 제시 필요

※ 해외 유학인력이 국내에서 유학경험(언어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일례로 미국에서 활동하였던 유능한 한국의사들을 국내 병원에서 경영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고려 가능

○ 향후 역내 허브기능 수행을 위해 중국어 등을 포괄하는 언어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필요

○ 영어활용이 가능하고 비교적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인력의 효과적인 활용 여건 마련

- 유휴노동력인 주부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를 위해 영어 가능 필리핀 가정부 등 단순 노동력 수입도 제한적으로 허용

- 영어행정 서비스 활성화와 관련 단순 행정인력 또한 해외노동력 활용이 가능한 여건 마련 필요

5 외국인 투자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조세특례 제도 수정

○ 외국인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조세특례 등 각종 인센티브는 국내투자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

○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특혜는 축소·폐지되는 반면 첨단산업 등 선도 분야 및 지역운영 본부에 대한 특례는 상대적으로 강화

○ 외국인에게 지원되었던 특혜를 전략 산업별 우대정책으로 전환하고 국내외 기업에 동일한 특혜를 보장할 필요

- 이 경우 국내기업의 국외투자 일부를 국내로 돌릴 수 있고 이와 연계된 외국인 투자 유치도 용이

제4장 산업별 거점화 추진방향

□ 다음과 같이 FTA 허브 여건 조성, 한국의 비교우위 및 미래성장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14개 거점화 중점분야가 선정된 바, 본 장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한 분야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유형별 비즈니스 모델: 개요>

□ (유형1) FTA 관세혜택 + 우리의 강점

○ 부품소재, 오일허브, 화장품 의류 등 제조업의 경우 우리의 강점과 FTA 관세혜택 결합을 통한 새로운 투자 모델이 가능

○ 특히 한국을 거점으로 중국 등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형태가 유망

〈그림 4-1> (유형 1) 유망분야 도출

대표적 비즈니스 모델							
	FTA	관세철폐 및 비관세 장벽 완화 혜택					
	우리의 강점, 인프라	한류 프리미엄, 한국식품 신뢰성, 기술력 등	튼튼한 산업기반, 기술력 등	한류 프리미엄, 생산기술, 디자인 역량 등	한류, 우수한 컨텐츠 역량 등	Made in korea에 대한 신뢰, 신재생 기술력 등	IT 인프라, IT 기술 등
	관련 주요 시장	중국	글로벌	중국	중국	미국 유럽	글로벌
유망분야		①식품	②화장품 의류	③문화 컨텐츠	④부품 소재	⑤신재생 에너지	⑥IT 융복합
중요도		☆☆☆	☆☆☆	☆☆☆	☆☆☆	☆	☆

□ (유형2) 글로벌기업 투자확대에 따른 파생수요 + 우리의 강점

○ FTA 관세혜택을 위한 글로벌기업의 투자가 확대될 경우 이에 따라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여 산업별 강점을 활용하는 경우 금융 물류 등에 있어 서비스 산업 분야 새로운 투자 모델이 가능

〈그림 4-2> (유형2) 유망분야 도출 1

대표적 투자 모델					
	FTA	글로벌 기업 한국진출 확대에 따른 관련 파생 서비스 수요 확대			
		+			
	우리의 강점, 인프라	위안화 직거래, 중국 주요 교역국	전자상거래 관련 물류, 항공 인프라	한류 관광, 경자구역 등 인프라	우수한 R&D 인력, 적극적 R&D 투자 등
		↓	↓	↓	↓
유망분야		⑦금융	⑧물류	⑨복합레저	⑩R&D
중요도		☆☆☆	☆☆☆	☆☆☆	☆☆☆

〈그림 4-3> (유형2) 유망분야 도출 2

대표적 투자 모델					
	FTA	글로벌 기업 한국진출 확대에 따른 관련 파생 서비스 수요 확대			
		+			
	우리의 강점, 인프라	입지, 자연환경, 운임, 정제비 등	한류, 우수한 의료수준 등 중국과 인접, 실물수요	풍부한 중재경험, 中·美간 중간지점 이점 등	높은 교육열, 우수한 학생 등
		↓	↓	↓	↓
유망분야		⑪오일허브	⑫의료	⑬법률회계	⑭교육
중요도		☆☆	☆☆	☆	☆

1. 식품

가. 현황

1) 산업트렌드

□ 글로벌 식품 시장 동향

○ 2013년 기준 지역별 가공식품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미주지역이 1조 585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34%를 차지, 규모가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유럽,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중동 순

- 다만, 아시아-태평양과 아프리카-중동 지역은 최근 5년간 시장규모가 꾸준히 성장해 온 반면, 유럽과 아메리카는 시장규모가 소폭 감소

- 최근 5년간 유럽과 아메리카는 세계 가공식품시장 연평균 성장세(3.6%)보다 낮은 2.5%와 3.3%의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연평균 성장률 5.0%를 기록

○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6,366억 달러로 전 세계 시장의 20.4%를 차지, 세계 시장규모 1위를 기록, 그 다음으로 중국(15.1%), 일본(7.7%), 독일(5.9%), 브라질(5.8%) 순으로 차지

- 시장규모 상위 20개 국가들의 시장규모는 세계 시장규모의 86.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특히 상위 10개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

- 상위 20개국의 최근 3년간 성장세를 살펴보면 미국(21.0→20.4), 일본(8.1→7.7), 독일(6.1→5.9) 등 선진국의 세계시장 비중은 감소세인 반면 중국(14.0→15.1), 브라질(5.6→5.8) 등 신흥국은 성장하는 추세

<표 4-1> 국가별 식품 시장규모 순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11		2012		2013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1	미국	611,438.5	21.0	623,152.8	20.7	636,613.6	20.4
2	중국	408,899.2	14.0	437,642.5	14.5	469,807.9	15.1
3	일본	234,820.8	8.1	237,004.4	7.9	239,200.0	7.7
4	독일	177,123.3	6.1	180,575.0	6.0	183,406.1	5.9
5	브라질	164,248.9	5.6	171,728.0	5.7	179,222.3	5.8
19	한국	31,736.8	1.1	32,556.5	1.1	33,626.6	1.1
상위20개국 합계		2,526,700.4	86.8	2,615,372.5	86.8	2,705,321.9	86.8

자료: DATAMONITOR Interactive Consumer Database. 2014.2 재인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2013년 식품산업 분석 보고서" p. 30.

○ 품목별로 살펴보면 2013년 냉장식품(Chilled food)이 7,488억 달러(전체 31.4%)로 1위를 기록, 다음으로 빵 및 시리얼(Bakery & Cereals), 유제품(Dairy food) 순으로 시장규모가 큼.

- 최근 성장세가 가장 높게 나타난 품목은 유지품(Oil & fats, 6.2%), 스낵류(Savory snacks, 5.1%), 건조식품(Dried food, 5.1%) 순임.

<표 4-2> 품목별 가공식품 세계시장 규모(2013)

품목	시장규모	비중	연평균 성장률('09~'13)
Chilled food	748,767	31.4%	2.6
Bakery/Cereals	372,036	15.6%	3.5
Dairy food	359,117	15.1%	3.9
Dried food	182,097	7.6%	5.1
Confectionery	159,593	6.7%	2.9
Frozen food	119,896	5.0%	3.1
Savory Snacks	89,511	3.8%	5.1
Sauces, dressings/condiments	98,149	4.1%	3.2
Oils & fats	70,978	3.0%	6.2
Canned food	71,400	3.0%	3.0
Ice cream	60,581	2.5%	4.2
Spreads	21,511	0.9%	3.5
Soup	18,863	0.8%	4.2

Baby food	11,781	0.5%	4.7
합계	2,384,278	100.0%	3.5

자료: DATAMONITOR Interactive Consumer Database. 2014.2 재인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2013년 식품산업 분석 보고서" p. 32.

□ 중국시장

○ 중국의 가공식품시장은 중국의 소득 증가 및 대형 식품 소매업 성장에 힘입어 지속 성장하고 있음.

- BMI(2014)에 의하면 중국 식품소비는 2013~18년 기간 동안 연평균 9.4% 성장률을 기록, 2013년 4조 8,572억 위안(7,809억 달러)에서 2018년 7조 5,928억 위안(1조 2천억 달러)의 소비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

- 동기간 중국 가공식품 무역수지 적자폭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

<그림 4-4> 중국 (가공)식품 소비전망

<그림 4-5> 중국 (가공)식품 교역전망

자료: BMI(2014) China Food & Drink Report Q3 2014

○ 중국가공식품 시장규모는 향후 5년('14~'18년) 연평균 11.3%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2018년 3,47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Euromonitor 2013).

- 단, 지난 5년('09~'13년) 12.3%의 연평균 성장률 대비 다소 성장률은 낮아짐.

○ 중국 가공식품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유제품(약 20% 비중 차지)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10.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가장 높은 성장세가 예측되는 품목은 영유아식품, 즉석식품류(냉장식품, 건조가공식품), 유지품 등임.

○ 다만 최근 안전문제 관련 중국산에 대한 불신(멜라닌 파동 등)과 식생활의 고급화로 수입제품 및 콜드체인 상품들의 수요가 급증

□ 한국의 대중교역 현황 및 여건

○ 한국의 식료품 수출은 대중국 지역에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한국 농림수산식품 대중 수출액은 13억 달러로 전년대비 3.1% 증가하였으며, 가공식품 부문의 경우 대중수출 총액은 7억 7천만 달러로서 전년대비 1.5% 증가

<표 4-3> 한국 농수산식품의 중국 수출 동향

(단위: 천톤, 백만불, %)

구분	2012년(A)		2013년(B)		증감률(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수산식품	857.8	1,278.5	901	1,3717.9	5	3.1
- 신선농산물	66.1	149.7	67.4	179.4	2	19.8
- 가공식품	665.5	756.7	690.4	768.1	3.7	1.5
- 수산식품	126.2	372.1	143.2	370.4	13.4	-0.5

자료: 농림수산식품 수출입 동향 및 통계(2013)

- 중국은 현재 한국의 제2위 식품수출시장(제1위는 일본)이며, 2020년 최대 식품수출시장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 가공식품의 주요 대중 수출품목은 커피조제품, 분유, 대두유 등으로 나타남.

<표 4-4> 한국 가공식품의 대중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2011년		2012년		2013년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가공 전체	762.9	가공 전체	756.7	가공 전체	768.1
1	설탕	142.8	설탕	146.8	설탕	128.7
2	커피조제품	50.7	커피조제품	54.2	조제분유	56.4
3	대두유	32.9	조제분유	39.1	커피조제품	52.1
4	라면	26.5	대두유	32.2	음료	37.9
5	조제분유	23.8	음료	31.4	비스킷	37.8

자료: 농림수산식품 수출입 동향 및 통계(2013)

○ 한-중 FTA 체결에 따라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한 식품 수출 활성화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한·중 FTA : 수산물통조림·사료·잼·해삼 등은 관세(5%)가 즉시 철폐되며, 한·미 FTA : 미국 식품의 일반관세는 4~20%이나, 우리나라는 무관세

2) 한국의 비교 우위

□ 약점

○ 원재료 공급 경쟁력 및 내수시장 규모 측면의 여건 미진

- 현재 식품 수출산업은 대량 공급이 어려운 원재료 공급시장의 한계로 인해 신선식품 보다 가공식품 중심

- 중국시장의 특성상 통관 및 운송, 유통·물류 등에 있어 중국시장 접근 곤란

□ 강점

○ 한국은 가공기술력을 활용한 원가절감 및 경쟁력 확보능력 보유

○ 식품안전, 생명공학, 미용분야에서 Korea Premium 부각

- 중국 등 아시아지역 고소득층 증가로 웰빙 및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 고조

- 한국은 안전한 원료와 가공기술력, 중국시장 인접성 등에서 비교우위

- 식품안전 관련 어린이 기호식품, Inner-beauty* 관련제품과 메디푸드(Medi-Food)분야가 새로운 강점으로 부각

  * 이너뷰티는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근본적인 피부문제 해결 용어

- 한류 확산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인지도 및 인기 상승 중

나. 기본 방향

1) 중점추진 세부분야 및 유망 투자 모델

□ 전략분야 : 프리미엄 푸드(안전・건강・미용 등)

○ 중국의 소득수준 증대에 따른 소비의 고급화로 인한 시장기회 요인 존재(식품안전에 민감한 중국 고소득층 대상)

- 저급 중국산, 방사능 일본산 대비 강점이 있는 유제품, 유아식품, 인삼가공식품, 신선편의식품(냉동/냉장 제품, 간식 및 기호제품 등) 등에서 콜드체인, 생명공학 기술과 선진화된 인증시스템을 연계한 비즈니스 창출

□ 유망 투자 모델

① 콜드체인 허브 구축

○ 최근 중국의 콜드체인* 시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콜드체인 인프라*** 낙후 → 한국을 동북아의 콜드체인 허브화하여 중국시장 진출

- 유제품・영유아식품 등 **가공식품**, 곡물・해삼 등 **농수산 원재료 식품**을 한국의 콜드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중국의 유통기업과 연계하여 현지 판매

* 콜드체인(cold chain) : 농수축산물을 비롯한 식료품, 의약품 등 온도 민감성 제품의 생산, 저장, 운수, 판매, 소비에 이르기까지 유통 전 과정에 걸친 저온유통 시스템

** 2017년 중국 콜드체인 시장규모는 약 761억 달러 전망(Roland Berger, 2014): 프리미엄급(유기농) 육류, 생선류 및 과일류, 생착즙주스, 김밥/도시락/음료, 커피 등 완성품에 대한 수요 증가

*** 중국의 냉장냉동 창고 및 운송수단 부족, 소프트웨어의 낮은 수준 등으로 중국의 식료품은 유통과정에서 적정온도 유지 실패로 중도폐기되는 식품이 40%에 달함

② 기능성 바이오식품 허브 구축 : BT+Korea Premium 활용 투자 모델

○ 중국의 노령화 진행, 의료・건강 관심 증대로 관련 산업의 급속 성장 추세

* 딜로이트 투쉬 토마스(Deloitte Touche Tohmatsu) 조사(2014년, 텐진 다보스 포럼)에 따르면 중국 건강식품 시장규모는 2009년 911억 위안에서 2013년 5000억 위안으로 5배 이상 신장

○ 건강기능식품, 식품소재, 메디푸드 등 對중국 사업화가 유망한 바이오식품 분야에 대해 한국기업과 중국 유통기업을 연계해 비즈니스 가능

* 천연물추출농축 식품, 천연자원(동백, 송이 등) 이용 기능성 식품, 지역특산물(산약, 인삼, 콩 등)을 활용한 발효 및 가공식품, 해양 심층수 및 해양생물이용 기능성 식품 등

* (외투사례) (中) 위해쯔광생물과기개발: 건강기능식품제조('14.5, 익산), (日) Nihon BeRM : 유산균 및 장내세균 관련식품 생산시설 및 연구소 설립('14년, 원주)

2) 특화 육성 지역

□ (콜드체인 허브) 경자구역(부산・진해), 자유무역지역(인천신항 배후) 등을 활용한 콜드체인 벨트 구축

○ 현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2018년까지 인천에 추진되는 인천신항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여, 콜드체인 허브화

* 인천지역은 대중국, 부산·진해 FEZ는 대일본 시장에 특화하여 차별화

□ (바이오식품 허브) 전북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Food Polis)를 중심 거점으로 기 구축 산업부 산하 전국 23개 바이오 특화센터와 네트워크 추진**

* Food Polis는 수출형 첨단식품기술 관련 한중합작 복합단지로 건설할 예정이며, 2016년까지 부지조성 완료 후 2020년까지 국내외 식품기업·연구기관 등 160개 유치 목표

** 중국과 합작 투자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전국바이오특화센터 입주기업의 원부재료 활용(지역별 특화식품 연계)

다. 추진과제

(투자 모델 1) 콜드체인 허브 구축

○ 외투기업이 국내 콜드체인 기술보유 식품 업체에 투자하여 제품 생산하고, 콜드체인 물류허브를 활용, 중국 현지 판매

□ (인프라) 콜드체인 공동 물류시설 및 정보센터 구축

○ (현황) 비용 리스크, 물량 리스크 등의 문제로 중소중견물류기업 뿐만 아니라 대형물류기업조차 콜드시장 진출 미흡

○ (개선) 콜드체인 물류기업들의 해외진출 거점화가 가능한 공동물류창고* 및 정보센터**" 구축 필요

* 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창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기업 공동지분투자 방식 또는 임대방식(초기단계 임대료 경감 등 인센티브 지원) 검토

** 콜드체인 물류기업들의 화물정보 공유를 통해 배송비용 절감(복운 가능) 등 지원

- 중국 거점지역에도 공동 물류센터 건립

  * 금융권, 물류관련 공사, 화주단체, 화주기업 등이 공동으로 중국 현지에 냉동냉장 창고를 확보(기금 혹은 투자법인 설립 등)

□ (인프라) 콜드체인 물류/유통 사이버거래소 설립

○ (현황) 중국 물류시장 진출시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은 현지 사정에 어두워 화물배송시 높은 공차율 문제 등 발생

○ (개선) 한국의 콜드체인 제품을 선호하는 중국 유통기업과 국내 콜드체인 전문 물류기업들을 연결하여 수출-현지 배송 및 관련 서비스 제공

□ (인프라) 화주-물류기업간 콜드체인 기업협의체 설립

○ 화주기업, 물류기업, 유통기업 등으로 구성된 콜드체인 기업협의체를 설립하여 공동 물류센터 건립, 외투기업과 조인트 비즈니스 등 논의

□ (인프라) 페리항로 확대 및 국제물류 복합운송 네트워크 강화

○ (현황) 물류기업 진출 1순위인 화동지역에 한중간 콜드체인을 연결하기 위해 한국과 상하이항을 연결할 수 있는 페리항로 확보 필요

○ (개선) 현재 일부구간만 활용하고 있는 한중간 페리항로를 콜드체인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확대(한국-상하이항 등 개설 등 한중 해운당국 협조)

- 국내 냉동냉장차량들이 중국 현지에 직접 배송이 가능하도록 콜드체인과 연계된 국제복합운송체계 확대 및 해외 네트워크 강화

  * 피견인 트레일러 상호주행이나 완성차 상호주행과 같은 신속한 한중간 복합운송체계를 확대・신설(한중교통물류장관회의 등에서 협의)

□ (규제개선) 콜드체인 제품의 통관간소화 및 현지배송 애로 완화

○ (현황) 한국의 냉동・냉장 차량이 중국시장으로 바로 운행이 가능할 경우 인허가 문제 등 현지 애로 해소 필요

○ (개선)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시 한중간 콜드체인 화물에 대한 상호 보증을 통해 콜드체인 화물에 대한 통관 간소화 적용

- 중국 현지 창고시설 규정, 트럭배송 등에 대한 각종 인허가권 협조 등

□ (기타) 유럽, 중국 지역 투자상담회 개최 등 콜드체인 해외 IR 실시

□ (인센티브) 수산물가공품 관련 콜드체인 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 실시

○ (현황) '원양산업발전법'은 외국인과 합작하여 수산물관련 해외에서 운반·가공·유통·판매 등을 하는 사업에 대해 물류 유통시설 투자시 2%대의 저리 융자를 지원하나, 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국한

○ (개선)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제품과 함께 이용하는 콜드체인 상품군들을 공동으로 취급할 수 있는 시설 건설 등에 융자 지원 신설

□ (인센티브) 농산물분야 콜드체인 관련 자금 지원 실시

○ (현황) 농산물 분야에서 해외농업개발협력법에 의거 해외농산물 확보를 위해 필요한 유통 및 곡물환적 사업에 대해 연 2%대의 저리 융자 지원

* 해외에서 농축산물 개발 경우만 적용, 우리나라나 해외에서 국내에서 해외로의 농축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수출을 위한 규정 없음.

○ (개선) 농축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해외수출시 유통 및 물류사업 지원 대상을 추가하여 외투기업의 중국 콜드체인 시장 진출 촉진

(투자 모델 2) 기능성 바이오식품 허브 구축

○ 외투기업이 국내 바이오 식품 업체에 투자하여 제품 생산 → 국내 인증을 거쳐 중국 현지 유통

□ (인프라) 바이오식품 전문단지 조성

○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바이오식품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바이오식품 지원센터 설치, 새만금 등 연계 국내외 바이오벤처 유치**

* (종자) 씨드밸리(김제) → (농업생산) 전국 주산지・새만금・영산강・화옹 → (식품개발・가공) 국가식품클러스터 → (수출) 군산항・새만금신항

** 웰스프링(미), 칭화즈광과학원(중), 골드락인터내셔널(케) 등 외국인투자기업 투자희망

- 전국 23개 바이오 특화센터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장비 공동 활용, 공동 비즈니스 촉진 등 지원

* (예시) 안동의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발효분야 이너뷰티식품을 개발하여 공급

* (예시) 양배추, 파프리카 분말 가공하여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사업화(BT특화센터에서 원재로 제조 → 식품클러스터에서 최종 제품 개발)

□ (인센티브) 한중간 기능성식품분야 상호인정시스템(GMP, HACCP) 개발

○ (현황) 중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제공인 기관 실험결과를 인정하나, 중국은 과다서류 요구

* 보건식품 등록신청시 CFDA에서 과다한 서류(효능평가보고서 등 총 22건 서류)를 요구하고, 자국기관(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재평가 → 심의비용 및 기간 추가 발생

○ (개선)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상호인증된 GMP, HACCP시스템(전략적인 독자 식품위생안전시스템구축)으로 수출입시 신속 진행

□ (규제개선) 국내 입주 중국기업의 대중국 식품 수출시 신속 검역 지원

○ (현황) 중국은 식품 수입 통관시 위생증명서 발급 요구(수출국 인정 않고 자국 것만 인정), 미국・일본・EU에 없는 젓갈, 조미김 등 특정 식품에 대한 세균규격 및 시험절차 규제로 수출 장애 요인 발생

○ (개선) 중국 검역관리기관 분원의 국내 설치 등을 통한 국내 사전검역으로 중국내 수입시 신속통관 보장

* 국내 입주 식료품 가공분야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대중국 수출 시 검역 간소화 추진

□ (인센티브) 바이오식품분야 연구개발 및 인증지원 강화

○ (현황) 건강·미용 등 고부가 건강기능 식품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효능연구 등을 통한 인증 여부가 중요하나, 인지도 미흡

○ (개선) 품질안전센터, 기능성평가센터, 패키징센터 등 3대 R&D 지원시설과 인증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신속한 제품개발 및 수출지원('16.6월)

* 수출유망 품목 선정·육성 및 혁신형 연구 지원 확대 등(농림부,해수부,산업부 등)

□ (규제개선)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등록되는 인삼류 제품 등 식품등록 지원

○ (현황) 해외에서 인삼 및 홍삼 제품이 의약품으로 인식되어 의약품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아 수출에 어려움이 많음.

○ (개선) 식품산업 분야 CODEX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에도 국제적인 규격화 작업 및 관련 국제기준 제정을 통해 식품등록 지원

* (예시) 홍삼캔디와 같이 홍삼 및 인삼의 성분 함량이 일정량 이하인 경우, 식품으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완화

□ (인센티브) 바이오식품 분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 (현황) 인삼, 발효 식품 등 기능성건강식품에 대해 특화지역별로 현지투자가 필수적이나, 바이오식품 관련 입지지원 등 인센티브 부재

○ (개선) 권역별 바이오식품 특화 지역 거점에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고, 외투기업에 대한 입지지원 및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 (인프라) 식료품가공 수출지원센터 설립

○ (현황) 중소규모 기업의 경우 라벨링 등 제품수출을 위해 필요한 고정투자에 대한 부담이 크고, 기타 지원서비스 이용에 어려움

○ (개선) 국내외 기업의 수출 및 원자재 조달활동 지원을 위한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중소규모기업의 수출여건 개선

* 對중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외투기업의 통관·검역 간소화,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 등 추진

□ (인센티브) 외투기업에 고급 원료 농수산물 확보 지원

○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 관리시스템 활용 입주기업에 안정적인 고급 원료 농수산물 정보 제공 및 조달 지원

* 국산 농수산물 원료 주산지 정보제공, 산지-기업간 원료 조달 매칭 서비스 지원 등

* (사례 : 中 장자도 그룹) 진도군에 해삼종묘시설을 투자('13.2월, 170억원)하여 '15.6월부터 종묘생산 개시 → 어촌계 공동양식 → 가공시설 설치 예정

2. 화장품·패션

가. 현황

1) 산업 동향 및 여건

가) 화장품 산업

□ 산업 동향

○ 2013년 세계 화장품 시장규모는 2,495억 달러로 전년대비 3.9% 증가

○ 지역별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2.5% 증가한 유럽이 936억 달러로 가장 크며, 이어서 아시아/태평양 786억 달러, 북미/중남미 708억 달러 순

○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379억 달러로 전체 시장에서 15.2%를 차지했고 그다음은 중국 243억 달러, 일본 233억 달러 순

- 우리나라의 2013년 화장품산업 시장규모는 71억 달러로 세계시장 10위에 올라있으며 전 세계 시장의 2.8%를 차지

<표 4-5> 주요국의 화장품 시장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시장규모	점유율	시장규모	점유율	시장규모	점유율
1	미국	36,346	15.7%	37,108	15.5%	37,871	15.2%
2	중국	20,346	8.8%	22,219	9.3%	24,289	9.7%
3	일본	22,691	9.8%	23,033	9.6%	23,277	9.3%
4	독일	14,609	6.3%	14,820	6.2%	15,136	6.1%
5	브라질	12,805	5.5%	13,739	5.7%	14,748	5.9%
10	한국	6,631	2.9%	6,831	2.8%	7,102	2.8%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4) p4.

○ Skincare 시장이 788억 달러(31.6%)로 가장 큰 규모이며, 그다음으로 Haircare와 Personal hygiene 시장이 각각 20.1%, 16.8%의 비중을 차지

- Skincare 중 Facial care(21.2%) 시장이 가장 크며, 그다음은 Female fragrances(8.4%), Shampoo(7.9%), Deodorants(6.1%) 등의 순

○ 美, 佛, 日 등이 글로벌 100대 브랜드의 약 60%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액 기준 세계시장 규모의 약 40%를 차지

* 글로벌 100大 브랜드(美전문저널 WWD, '15.1월): (美)31개, (佛)15개, (日)13개

□ 한국 시장 여건

○ 한국의 경우 2013년 현재 화장품 시장규모가 7조 6,242억원으로 전년대비 8.6% 증가하였음.

○ 수출은 1조 4,122억원으로 전년대비 17.5% 증가한 반면, 수입은 1조 643억원으로 전년대비 3.4%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흑자 추세를 보임.

□ 패션산업

○ (패션) 글로벌 분업화가 심화됨에 따라, 유럽(브랜드 가치창출), 아시아(생산 기지)로 양분화

* 글로벌 브랜드: (1위)佛 루이비통 (2위)스웨덴 H&M, (3위)伊 Gucci 등

** 생산기지 현황(월 최저임금, '13년): 인니($108), 캄보디아($66), 베트남($50) 등

□ 화장품·패션 산업 허브로서 한국의 비교우위

○ (약점) 생산측면에서는, 신규투자가 미흡하여 해외브랜드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고부가가치를 결정짓는 브랜드 가치 취약

- (규제) 특히, 화장품 및 연관 서비스업의 경우 법·제도가 여전히 산업 진흥보다 규제적 관점에서 적용되고 있어 성장에 애로

* 국내 탑 패션브랜드 톰보이·쌈지 부도('10), 아가방 中기업에 인수('14) 등

** 화장품(화장품법), 스킨케어 등 뷰티 서비스업(공중위생관리법) 적용

○ (강점) 한류 열풍에 따른 코리아 프리미엄, 미·EU·중국 등 주요 소비 시장과의 FTA*에 따른 사업 기회 확대

* 예: (한중 FTA) 아웃도어 등 기능성의류, 유아복 관세(14~17.5%) 10년내 철폐, 기초화장품, 색조제품 등 화장품 관세인하(6.5~10% → 5.2%)

- (기획력/기술) 한국은 IT 기술과 얼리 어답터 소비 성향이 확산되어 있어, 고기능성, 융합 제품의 개발 및 사업화에 유리한 여건

- (인프라) '10년부터 국가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클러스터*를 조성하였으며, 활용의 질을 높이면 추가 재원없이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

* (패션) 동대문·대구('11), 경기북부('12) (화장품) 경기오산('10), 오송('12) 등

나. 기본방향

1) 중점추진 전략분야 및 유망 투자 모델

□ 중점추진 전략분야

○ 클러스터 활용 고기능성 제품 개발 및 수출 거점 확대

○ 한류 열풍을 활용한 서비스형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 유망 투자 모델

① (고기능성 제품 개발·수출形) 글로벌기업이 R&D센터 설립 또는 국내기업과 합작 → 고기능성, 융합제품 생산 → 수출

- 드라마, 방송* 등 한류 컨텐츠를 활용한 시제품 테스트, 사업화 비용 절감 및 코리아 프리미엄, 제품 안전성 확보 가능

* 예: 한국의 뷰티전문프로그램 '겟잇뷰티(CJ E&M, 신제품 블라인드 테스트 및 활용법 소개)'는 중, 동남아 등에서 연간 50회 이상 방송편성

- 중, 미, EU 등 주요 시장에 FTA를 활용, 수출 거래비용 절감 가능

② (연관 서비스 외투形) 외국자본이 국내 아울렛 등 유통기업, 뷰티 서비스업에 투자하여 국내,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 공동진출

* 中 관광객 쇼핑품목중 화장품·의류가 75%이며, 아울렛쇼핑, 스킨케어 등 연관 서비스를 체험한 관광객 58%가 본국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기를 희망(中 은련카드, '14.8월)

2) 특화 육성지역

□ (패션) 대구*를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신소재 등 고기능성 제품 개발 거점으로, 동대문**을 글로벌 브랜드 창출지로 육성

* 대구 이시아폴리스 조성('11년): 개발, 생산 및 판매, 유통(롯데아울렛), 연구·인력양성(한국폴리텍섬유패션대학) 등 원-스톱 비즈니스 단지 구축

** 첨단의류기술센터('11), 주얼리 기술혁신지원센터('12) 등 건립

□ (화장품) 경기 오산*('10년, 화장품 글로벌화 종합지원센터 조성)을 R&D 센터 집적지로 육성하고, 명동을 패션·뷰티 서비스 특화 지역으로 발전

* 국내 화장품업계 집적지(약 40%), 화장품 글로벌화 종합지원센터 건립('10)

다. 추진 과제

(투자 모델1 : 고기능성 제품 개발·수출形) 글로벌기업이 국내기업과 합작투자 또는 R&D센터 설립 → 고기능성 제품을 개발·제조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등 시장성 확보 → FTA 네트워크를 활용 수출

□ (규제완화) 한국이 다양하고 새로운 기능성 화장품의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도록,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를 유연화할 필요

○ (현행) 기능성 화장품을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3가지로 제한하고 있어(법§2조), 다양하고 새로운 상품 개발에 장애

○ (개선) 일반적인 정의는 법에서 규정하고, 기능성 화장품의 구체적인 유형은 식약처 고시로 위임

□ (인센티브) 한류의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한시적으로 패션·화장품 분야 글로벌 R&D센터 인정요건을 완화* 또는 외투 심사시 Cash Grant 우선 지원 등을 통해 집중 유치

* 기준완화: (현행) 연구원 5인, 1억원 투자, 외투비율 30% → 3인, 5천만원 투자, 20%

<투자 사례>

● 로레알 한국 R&D센터('99): "한국은 한류 프리미엄을 토대로 중, 동남아인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성공시킨 노하우 보유, 아시아지역 R&D센터로서 가치 높음

□ (합작지원) 우리의 기획력(디자인, 상품개발)과 외국 자본이 합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지원

○ (마케팅) 국내 우수한 고기능성 의류, 신진 디자인 등을 소개하는 K-패션쇼*, 국제 전시회 등을 개최

* 'K-패션 프로젝트 인 밀라노('14.10월)' 후속으로, K-패션 인 차이나 등 개최

○ (유턴-외투 합작)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해 국내로 돌아오는 의류·주얼리 등 유턴 기업의 외투지역 입주를 허용

□ (인프라 보완) 특화 지역별 비교우위, 기능에 따라 인프라 보완

○ (패션) 대구에 스마트 공장*을 확대하고, 동대문 첨단의류기술 센터 등에 국내외 디자이너간 창조 협업 공간 등을 마련

* '15~'17년간 75개사 선정·지원,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마련

○ (화장품) 오산의 화장품 글로벌화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외국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뷰티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 등 투자 유인의 홍보처로 활용

* 예) 헝가리 와비뷰티센터 : 뷰티·관광·의료 서비스 등을 복합한 체험기회 제공

(투자 모델2 : 패션·화장품 연관 서비스 외투형形)

▲해외자본과 결합하여 중국내 유통시장에 진출하고, 현지 수요에 맞는 SPA* 브랜드 창출 ▲외국기업이 국내 뷰티 서비스업에 투자하여 중국, 동남아의 프리미엄 뷰티 서비스 시장 공동 진출

□ (유통) KOTRA 무역관 등을 통해 합작, 자본투자 수요를 발굴하여 국내기업과 연계하고, 성공사례 투자 모델 홍보·확산

○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 사업*과 연계하여, SPA 브랜드화 지원

* 브랜딩, 현지화 마케팅, 글로벌 네트워킹 등 지원('09~, 연간 약15억원)

<투자 사례>

- 국내 패션 제조·유통업체 오렌지 팩토리는 中 신다그룹(자본투자, 총2조원)과 공동으로 '20년까지 중국내 300개 아울렛 매장 개설·운영 예정('15.3월)

□ (규제완화) 뷰티 서비스업에 대규모 자본 투자가 가능하도록,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완화할 필요

○ 헤어, 스킨케어 등의 1인 1영업소 개설 제한을 폐지하고, 현실적 용도를 반영하여 미용기기에 대한 기준도 보다 폭넓게 개편

* 현행 공중위생법은 미용사, 피부관리사 등에 대해, 의료시설과 동일한 기준인, 국가자격소지자 1인 1영업소로 제한하여 규모있는 서비스업 운영은 불가능

** 예) 고주파 및 저주파 치료기: (美, EU, 日) 미용기기 vs (韓) 의료기기

3. 문화컨텐츠

가. 현황

□ 문화콘텐츠 시장 현황

○ (세계) '13년 기준,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4.9% 성장한 1.7조달러를 기록했고, '18년까지 연평균 5%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중국) '12년 기준, 세계 3위 콘텐츠시장으로, 중국정부의 문화산업 지원·육성정책 등으로 인해 지속 성장 중인 글로벌 콘텐츠 핵심 시장

* '18년까지 연평균 10.9%의 독보적인 속도로 성장할 전망

- 다만, 진입규제, 불법유통 등 높은 진입 장벽을 형성하여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에 장애

○ (한국) '13년 기준, 세계시장의 2.8%를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인도 등 미성숙시장을 제외하면 북미 다음으로 빠르게 성장(성장률 4.2%)

- 최근 한류열풍에 따라 포트폴리오 투자, 공동제작, M&A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가 증가

□ 문화콘텐츠 허브로서 한국의 비교 우위

○ (약점) 글로벌 콘텐츠 강국에 비해 낮은 인지도 및 부족한 기획·창작 역량, 콘텐츠기업의 영세성, 전문인력 부족 등 한계 노정

○ (강점) 한류 확산으로 브랜드 가치가 상승 중이며, 다수 국가와의 FTA 체결 등의 강점 보유

- K-pop, 한국 드라마 등 한류에 대한 선호 및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며,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긍정적

* 싸이, 별에서 온 그대, 괜찮아 사랑이야 등 전세계적으로 한류 확장세

-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로 중국 및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제3국의 투자를 선제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회요인 충분

나. 기본방향

1) 중점추진 전략분야 및 유망 투자 모델

□ 중점추진 전략분야 : 동북아 콘텐츠 제작 허브 구축

○ 콘텐츠산업의 중심축이 아시아, 특히 중국으로 이동함에 따른 기회를 활용하여 동북아 콘텐츠 투자 활성화

- 한중 FTA로 조성된 여건 및 여타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활용하여 콘텐츠 분야에 대한 해외 자본 유치 확대

⇒ 한중 FTA 효과를 활용하여, 급성장하는 중국 등 아시아권 콘텐츠 시장을 겨냥한 동북아 진출의 콘텐츠 관문으로 육성

□ 유망 투자 모델

① 공동제작 및 지분투자

○ (공동제작) 제3국 영화 관련 기업이 한국에 투자 → 한국과 중국의 영화 공동 제작 → 외화쿼터 적용 제외를 통한 중국 시장 진출

* 중국은 외화를 연간 20편까지만 상영 가능하나 한중FTA에 따라 합작영화의 경우 중국자본이 20% 이상이면 중국산으로 인정받아 외화쿼터 적용 제외

○ (지분투자) 제3국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한국에 투자 → 중국내 합작·합자 기업에 지분 투자를 통한 중국 시장 진출

* 공연장 경영업, 공연 중개업(티켓, 무대 장비 판매) 등

② 방송포맷 수출 및 PPL·협찬 활성화

○ (방송포맷) 제3국 또는 미국*의 방송채널 사업자가 한국에 투자 → 중국 및 아시아에 방송포맷 수출**

* 한미 FTA 따라 '15년부터 방송사업자에 대한 미국기업의 100% 지분 투자 허용

** 한중 FTA에 따라 방송콘텐츠 보호기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 기술보호조치 및 인터넷상 반복적 침해 방지 등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저작권 강화

○ (PPL·협찬) 제3국에 한국 콘텐츠의 PPL·협찬 광고 상품 판매

* 천송이 코트가 중국에서 방영된 드라마에서 노출되어 완판

2) 특화 육성 지역

□ 서울 상암 지구에 조성 중인 상암DMC와 일산 신도시에 조성 중인 한류월드를 문화콘텐츠 중심지로 육성

○ (상암DMC) 첨단 콘텐츠 개발·생산·유통 단지로 육성하여 동아시아와 세계를 이을 교두보 역할 수행

* 서울시가 추진하는 택지개발지구로 56만m2 규모, 콘텐츠산업, IT 제조업 등 유치

○ (한류월드)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는 인프라로 아시아인들이 모여서 서로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 구축

* 고양시 일대의 99만m2 규모의 도시개발사업구역, 호텔, 방송미디어시설 등 집적

다. 추진과제

❖ **투자 모델 1**
- ▶ 제3국 영화 관련 기업이 한국에 투자 → 한국과 중국의 영화 공동 제작 → 외화쿼터 적용 제외를 통한 중국 시장 진출
- ▶ 제3국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한국에 투자 → 중국내 합작·합자 법인에 지분 투자를 통한 중국 시장 진출

□ (자금지원)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 펀드('15년말까지 2천억원 조성 예정),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영화·방송 공동제작 지원(문화부)

* 영화의 경우 한·중 공동제작물로 인정되어 중국의 영화수입 쿼터면제 가능

* 방송의 경우 현재 중국은 외국 드라마에 대해 전편(全篇) 제작이 완료된 이후 사전검열하여 국내방송을 허용 → 공동제작시 완화효과 기대

□ (입지지원) 상암DMC와 한류월드에 중국투자 전용공간(가칭 한·중 미디어 센터)을 마련(지자체)

○ 임대료를 지원하고 국내 콘텐츠기업과의 투자·파트너쉽 지원

□ (한류엔터 지원) 한류스타 양성, 공연 매니지먼트, 공연장 운영 등 분야에서 합작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문화부)

* 투자자간 매칭, 투자정보 제공, 공연 R&D 지원, 금융지원 등

○ 외국 기획사, 제작사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엔터테인먼트 사업 관련 포맷에 대한 개발 지원

□ (프로젝트 소싱) 부산국제영화제(매년 10월), 콘텐츠진흥원 해외사무소,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를 활용하여 영화제작 등 합작 프로젝트 발굴

❖ **투자 모델 2**
- ▶ 제3국 또는 미국의 방송채널 사업자가 한국에 투자 → 중국에 방송포맷 수출 등 중국 시장 진출
- ▶ 제3국에 한국 콘텐츠의 PPL·협찬 광고 상품 판매

□ (저작권 보호 지원) 중국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률 컨설팅 지원 및 권리 침해 발생 시 경고장 발송 등 피해 구제조치 지원(문화부)

○ 해외저작권센터를 통해 해외 저작권 법제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 컨설팅 지원, 온라인 상담 서비스 제공

○ 특히, 북경 센터를 통해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 발생 시 경고장 발송 등 구제조치 지원

□ (개발지원) 포맷 개발에서부터 제작·유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콘텐츠 포맷 랩 상암DMC·한류월드 내에 설립·운영 지원(지자체)

○ 초기 사업자금 지원, 창의적인 포맷 아이디어 시상 등 직접 지원과 해외 포맷 정보 제공 등 간접 지원 병행

□ (자금지원) 외투 기업이 한국 콘텐츠의 PPL*·협찬 광고 상품 구입시 외투비율, 기능·일반노출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자금 지원(방통위)

* Product Placement의 약어, 영상매체 등에 상품·브랜드를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소비자의 무의식속에 이미지를 심는 마케팅 기법

** (예시) 기능노출 50%, 일반노출 20% 지원을 기준으로 외투비율에 따라 차등

4. 부품소재

가. 현황

□ (글로벌 시장 동향) GVC(Global Value Chain) 심화로 경쟁력이 있는 부품·소재의 조달이 중요, 각국이 부품·소재 허브를 위한 정책적 노력 추진 전망

- 특히, 전세계 소재산업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다기능 고부가가치화, 환경·에너지 중시, 기술 융·복합화로 패러다임 변환중*

* 인간친화, Green 환경·에너지 등 지식·혁신형 복합 다기능 소재 개발 등

□ (국내 현황)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첨단소재 경쟁력 취약, 對日 무역역조 현상, 對中 수출의존도 심화

○ 소재·부품은 제조업 생산의 45%(681조원), 부가가치의 61.6% (296조원), 고용의 51%(138만명)를 차지('11년)

- '12년 全산업 수출의 46%(2,535억불), 무역흑자 910억불을 달성하는 등 세계 수출 5위권에 진입

* 세계시장 점유율 順('11년): (中)17.8%, (獨)10.4%, (美)9.6%, (日)7.4%, (韓)4.7%

○ 산업경쟁력의 원천이 완제품, 부품에서 소재로 전환되고 있으나, 아직 핵심소재 경쟁력은 취약

* 소재·부품 대일의존도는 28%('01)에서 23%('12)로 완화되고 적자규모도 최고 243억불('10)에서 222억불('12)로 개선 추세

* 全산업 대일 무역적자 중 소재비중은 '03년 30.9%에서 '12년 46.7%로 증가

○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높은 수준으로 증가(특히, 전자·전기, 화학소재, 수송기기 등 고기술 분야)

* 소재·부품 대中 수출 비중: ('01) 16% → ('13) 35.3%

* 소재·부품 분야별 對중국 수출 비중('13년, %) : (소재) 화학제품(16.3), 고무·플라스틱(1.7), 섬유(1.1) 등, (부품) 전자(45.2), 전기기계(12.8), 수송기기(6.7) 등 順

□ 한국의 비교 우위

○ **(약점)** 부품산업에 비해 소재산업의 경쟁력 향상 미흡

- 단기적으로 Catch up하기 쉬운 부품산업에 치중한 결과 산업생산성, 시장수요, 산업구조, 기술역량에서 비교열위에 있음.

- 200대 소재·부품의 국내 기술수준은 선진기술을 모방·개량하는 정도여서 소재·부품분야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한 일본·독일에 대한 의존도 심화

* 대일무역역조 100대 품목은 소재·부품의 비중이 높으며, 디스플레이 20개, 철강 17개, 반도체 12개, 비철 9개 등의 順임.

○ **(강점)** 성장세에 있는 중국 내수시장에 대해 접근성이 높으면서, 부품·소재 생산기지로서의 인프라는 비교적 우수

- 중국에 비해 행정·사법적 안정성(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등)이 높고, 우수한 생산 인프라를 보유(중국 직접투자보다 한국에서의 우회생산을 선택 사례)

나. 기본방향

1) 중점추진 전략분야 및 유망 투자 모델

□ 중점추진 전략분야

○ (對일, 對독) 무역역조가 심화되는 100대 소재·부품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투자유치 유망품목을 선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 소재·부품 원천기술 보유국가(일본·독일)의 투자유치를 위해 화학재료부문, 정밀기계 등 국내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되지 아니한 기술수반 분야

* (對일) 유리기판, 카메라렌즈, 액정 등 30개 품목, (對독) 화학재료부문, 정밀기계 등 20개 품목

○ (對중)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유망한 기능성 화학소재, 자동차 재제조부품, 첨단 의료기기부품 분야를 거점화하여 중국투자 유치

- (기능성 화학소재) 한·중 FTA에서 개방된 중국의 고부가가치 기능성 화학소재 분야의 對한국 투자 관심도 확대 전망

* 최근 도레이(첨단소재), BASF(전자소재), 미쓰비시 등 글로벌 화학 소재기업들이 중국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기능성 화학소재 분야 국내 투자 증가

- (자동차 재제조부품)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으로 신흥 재제조시장으로 급부상 중이며, 정부의 적극적 정책 의지, 한국의 기술우위 고려

·한국은 중국 대비 자동차부품관련 제조기술 및 인력이 우수하며, 재제조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제품에 대한 브랜드 파워 우수

* (개념) 재제조부품은 중고부품을 수리해 신품성능을 유지하는 부품으로 만든 것, (시장규모) 韓 7,500억원, 美 63조원, EU 21조원

* 중국의 자동차부품시장 약 490조원 규모(2013년)이며, 재제조산업 급성장중(중국 재제조 업체인 웨이차이동력사의 리펭 사장은 2015년 1,500억위안 생산액 전망)

○ (첨단 의료기기 부품) 한중일 등 역내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의료기기 수요 확대, 한국의 정밀부품분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거점화 전략 추진 가능

* 중국의 의료기기 시장은 2018년까지 연평균 19.2%의 높은 성장을 통해 시장규모가 404억달러로 확대되어 세계 2위 규모로 부상 전망(BMI Espicom, 2013)

□ 유망 투자 모델

① (기능성 화학소재 허브) 對중국 수요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화학소재 부문*의 글로벌·중국 기업 투자 유치

○ 한·중 FTA에서 개방된 고부가가치 기능성 화학소재 부문에 대한 시제품 제작시설, 신뢰성 평가·인증기관, 투자알선기관 등이 집적된 기능성 화학소재 거점화 단지 조성

* (예) PPS 수지(고온에서도 견디는 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일종), 고흡수성수지(중국 내 종이 기저귀 사용('10년 7.0% → '16년 37%) 급증으로, 향후 對中 수출 증가 예상)

② (자동차부품 재제조 애프터마켓 허브) 엔진, 트랜스미션 등 고부가가치 부품 등 유망품목에 중국기업(자본)과 국내 재제조기업(기술) 합작

○ (중국) 재제조 코어 회수 및 제품 유통은 중국기업 담당, 재제조 생산 및 인증은 한국에서 수행(국내 폐차장-재제조기업-자동차부품연구원 연계)

- 등속조인트, 시동전동기, 엔진, 트랜스미션 등 한국 비교우위 품목, 중국에서 운행되는 한국차, 유럽차(폭스바겐, 아우디 등)와 미국차(GM, 포드 등) 등 재제조

* (예시) 중국기업이 A/S 엔진을 한국에서 재제조 후 중국시장과 한국시장에 판매

· 신차의 엔진 고장 시 본국(유럽, 미국)으로 이송된 후 부품 교환 및 재제조 후 다시 중국으로 운송됨에 따라 비용과 시간이 과다 소요되므로 한국의 지리적 인접성, 기술환경 등 강점부각

* (국내 전문기업) 엔진(오성상사), 수입차 자동변속기(삼정오토밋션), 시동전동기(발레오전장), 등속조인트(서한산업, 오토리코) 등 재제조 전문기술 보유

○ (미국, EU) 트랜스미션, 엔진 등 고부가 재제조부품 기업 투자유치

* 미국의 자스퍼(재제조 전문 글로벌 기업), 독일의 ZF사(트랜스미션 재제조 전문 기업) 등의 재제조 전문기업 유치

③ (첨단 의료기기 부품 허브) 중국을 포함, 역내 의료기기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거점지역(대구・경북)을 활용, 투자 유치

2) 특화 육성 지역

□ 관련 인프라가 旣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선별・집중지원

○ (기능성 화학소재 허브) 기초원료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여수 석유화학단지 인접지역(광양만권 FEZ) 거점지로서 조성・집중지원

○ (자동차부품 재제조 허브) 경제자유구역, 새만금 경제특구를 주요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

○ (첨단 의료기기 부품 허브)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주변에 입지한 구미, 영천 산업지구 등을 연계하여 거점지로 육성

다. 추진과제

① 기능성 화학소재 허브 구축

□ (인프라)「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조성

○ 기존 여수 석유화학단지 기초원료 생산기반을 활용,「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조성 추진

- **광양경자구역 內 세풍산단**에 **시제품 제작시설, 신뢰성 평가·인증기관, 투자알선기관** 등을 집적 ('15~'19, 1,310억원)

- 한·중 FTA에서 중국이 개방한 **고부가 기능성 화학 소재**(PPS수지, 고흡수성수지 등)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투자 유치**

* (PPS 수지) 고온에서도 견디는 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금속 대체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 전기전자 분야에서 중국내 수요 증가

* (고흡수성수지) 중국 내 종이 기저귀 사용('10년 7.0% → '16년 37%) 급증에 따라, 향후 對中 수출 증가 예상

□ **(인센티브)** 대규모 외투기업에 대해 안정적 부지 확보, 세제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투자지역(개별형) 추가 지정*('15년중)**

▪ **(기 지정사례)** △ 롯데-베르살리스 외투지역 (여수산단, 5,429억원 투자)
△ 도레이 첨단소재 외투지역 (새만금, 3,054억원 투자)
△ (日테이진) PPS 수지 공장 건설중 (울산, 2,500억원 규모)
▪ **(신규지정)** △ (日스미토모세이카) 고흡수성 수지 공장 건설중 (여수, 1,100억원 규모)

□ **(인센티브)** 한·중 FTA를 통해 **중국시장이 개방된 유망품목***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 투자 유도를 위한 **R&D 지원** 강화**(산업소재 핵심기술개발사업 활용)

* 폴리우레탄(즉시 철폐), PPS 수지(5년내 철폐), 폴리아세탈 수지(5년내 철폐) 등
**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 중 화학공정 분야 예산을 활용·지원 ('15년 54억)

□ **(기타 : 협력수요 발굴)** 일본, 독일 등 주요 글로벌 소재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지 상담회 개최** 등 **전략적 제휴** 기회 제공

* 소재부품 투자 IR(안) : (5월) 獨 드레스덴·뉘른베르크 (6월) 日 오사카· 후쿠오카 (9월) 獨 함부르크·슈투트가르트 (11월) 日 가와사키·나고야

- **대형 컨벤션**(아시아 석유화학회의, 대한민국 화학산업대전, '15.5월)을 활용하여, **CEO 회의, 투자 간담회, 중국 특화 설명회** 등 추진

2 첨단의료기기 부품 허브 구축

□ (인프라) 해외 인허가 지원 시스템 구축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복합단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의 공공기관에서 인허가 컨설팅 및 대행 등 외투기업 지원

* 의료기기 관련 해외 인허가 관련 시험·평가 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행정지원 등

□ (인프라) 의료기기 관련 표준화·인증 지원, 국가간 상호인정

○ 의료기기 표준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술변화로 현실과 맞지 않는 KS 규격 재정비, 의료기기 GMP 인증 등 국가간 상호 인정 추진

□ (기타) 맞춤형 현지 상담회 개최 등 투자유치 촉진

○ 대형 컨벤션을 활용하여, CEO 회의, 투자 간담회, 중국 특화 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 및 IR 추진

3 무역역조 품목 분야

□ (인프라) 히든챔피언 기업 등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국내 테스트베드 지원

○ 외국기업이 국내투자시 대규모 설비투자 전 단계의 국내 테스트베드 설치 관련 입지지원,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

□ (인센티브) 대일, 대독 투자유치 유망 품목 및 기술분야 조세감면

○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규정(기재부 고시)을 개정하여 관련 분야 대상 확대

□ (인센티브) 고부가 소재·부품 분야 외투기업에 대한 R&D 지원 우대

○ 수입대체 유망 소재·부품 기술개발 외투기업에 대해 R&D 지원 가점 부여

□ (기타) 투자유망 외투기업에 정보지원 및 IR 실시

○ 투자유망 히든챔피언 기업 등에 대해 합작투자 유망 한국투자 정보 및 자료 제공, 기술협약, 조인트벤처 등 매칭 지원, IR 실시

5. 신재생에너지

가. 현황

1)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 현황

□ 세계 일차에너지 공급 중 화석연료 점유율은 80% 이상인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여전히 13.2%에 불과

○ 신재생에너지 대부분은 '바이오 및 폐기물'로서 개도국에서 난방용과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재래식 연료

□ 태양광 시장 현황

○ 유럽 태양광발전 시장에서 최근 부각되는 이슈는 태양광발전 과세 추진 논란임.

- 독일의 경우 태양광발전 FIT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전기 사용자에게 6.24유로센트/kWh를 부과하고 있음. 이것이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이 되고있어 정부는 자가용 태양광발전에 대한 과세를 추진 중임.

- 스페인도 자가용 발전에 대한 과세 추진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등 태양광발전 과세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전망임.

○ 중국은 2013년 세계 최대 태양광 시장으로 부상하였음.

○ 일본은 FIT(대규모 설비) 및 잉여전력구매제도(소규모 설비)를 통해 태양광 발전을 지원하고 있음. 일본 태양광발전 시장은 2013~2016년 기간에는 호황, 이후 시기에는 보조금 폐지에 따른 시황 진정 국면이 예상됨.

○ 미국은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 유인이 약화되는 추세에 있음.

- 연방정부의 투자세액공제(ITC) 혜택이 2016년 이후 축소될 예정임.

- 주정부의 전력요금상계제도 도입에 반발하는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역송량을 제한하거나 부과금을 징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풍력시장 현황

○ 2030년 세계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1,319GW로 2013년(319GW) 대비 4배 이상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임. 육상풍력 기술은 성숙기 진입이 임박한 반면, 해상풍력은 高비용, 低점유율 등으로 2030년까지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육상풍력발전은 발전원가 경쟁력이 해상풍력보다 빠르게 개선되어 2030년 풍력발전의 91%를 차지할 전망

○ 중국의 육상풍력발전 설비증가 규모는 2030년까지 세계 최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 해상풍력은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에서 도태될 위험이 큰 것으로 보이며, 유럽의 시장주도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기술발전에 따라 해상풍력은 원가하락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2030년까지 육상풍력, 태양광, 화석연료 발전 대비 가격 경쟁력 열위가 예상됨.

□ 바이오 에너지 시장

○ 미국의 에탄올 생산 마진 및 생산량은 2014년 2/4분기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3/4분기부터 에탄올 가격 하락으로 에탄올 생산 마진이 감소할 전망

○ 유럽의 에탄올 생산 마진은 2014년 2/4분기 평균 0.30달러/리터로 전분기 대비 3.5% 증가하였으나, 2014년 3/4분기부터 0.25달러/리터로 낮아질 전망임.

- 2014년 2/4분기 에탄올 혼합 마진은 평균 0.12달러/리터였으나, 2014년 3/4분기에는 평균 0.13달러/리터로 8.3%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유럽의 2014년 2/4분기 바이오디젤 생산 마진은 0.25달러/리터로 전분기보다 0.01달러/리터 증가하였으며, 바이오디젤 혼합 마진은 평균 －0.05달러/리터로 전분기 평균 －0.04달러/리터보다 악화되었음.

- 바이오디젤 가격이 더 낮아지지 않는 한 바이오디젤 혼합의 역마진 현상은 지속될 전망임.

□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 신재생전력 보급 확대를 위해 규제, 재정적 유인, 공적지원(FIT, FIP), 의무할당, 전력요금상계제도, 세금감면, 보조금, 우대융자, 경쟁입찰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적용

○ FIT 지원을 확대, 강화하는 경우는 대체로 소규모 태양광발전 보급 촉진, 풍력발전 보급 촉진, 국내(역내) 부품 보급 촉진 등에 목적

-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등임.

○ 전력요금상계제도(Net Metering)를 도입한 국가는 43개국에 이르며, 2013년에 5개국이 늘어났음(그리스, 라트비아, 우크라이나, 온두라스, 필리핀).

-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2013년에 전력요금상계제도를 개정하여, 각각 자가용 태양광발전 지원요건을 강화하거나 수혜대상을 확대하였음.

- 미국(캘리포니아 주)은 전력요금상계제도 적용을 연장하고 무제한 전력요금상계제도 적용기반을 확충하였음.

□ ‘14년 세계 신재생에너지산업 투자규모는 **전년대비 22% 증가한 3,100억달러**로, 2년 연속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

○ ‘14년 3,100억달러는 사상 최고치인 ’11년 3,180억달러에 육박하는 수준

○ 원별로는 태양광(1,435억달러), 풍력(974억달러)이 전체 투자의 78%를 차지하며, ‘10년 이후 **태양광 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짐

□ 신재생에너지 주요 투자처는 ‘11년을 기점으로 **유럽·북미지역에서 아시아지역으로 선회**

*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초기 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있으며, 매년 증가 속도가 세계 평균을 넘어서고 있음

2) 국내기업 해외진출 및 지원현황

□ **(프로젝트 수주)**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는 총 42개국 74건(약 93억 달러, ‘14년 8월 기준 누적)

○ 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 풍력이 수주에서 87%, 건수에서 82% 차지

○ 지역별로는 수주건수는 아시아(27/74건), 수주규모는 북미(5797/9381백만불)가 가장 큰 비중 차지

○ 참여형태별로는 수주금액(총 9381 백만불)은 패키지형(8146백만불)이, 수주건수(총 74건)는 부품공급형(23건)이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정부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은 크게 타당성조사지원, 인증획득지원, 시장개척단 파견 등으로 구분

○ 타당성조사지원 : 수주 가능성이 높은 해외 프로젝트 개발 지원

○ 인증획득지원 : 국내 신재생 기업의 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해외인증획득지원

○ 시장개척단 파견 : 유망 국가에 개척단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 미팅 등 지원

□ **한국의 비교 우위**

○ **(약점)**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산업발전에 대한 공감대는 확보되었으나, 관련 **정책 추진여건은 열악**

- 작은 국토면적, 높은 임야비중 등 불리한 국내 환경여건에 따라 재생에너지 부존자원에 근거한 산업화는 불리한 상황

- 내수시장만으로는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민간주도의 산업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

○ **(강점)** ESS, ICT기술을 접목한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선점 가능성 보유 및 미·EU 중심의 **코리아 프리미엄** 旣형성

-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업계를 중심으로 ESS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차별화된 기술·제품** 중심의 해외시장 공략 가능

- 후발국 대비 높은 기술력 및 신뢰도를 기반으로 **브랜드 파워**를 활용하여 선진국 및 개도국 진출 등 타진

나. 기본 방향

□ **전략적 추진 분야 : 태양광 산업**

○ 신재생에너지원 중 **국내 산업기반과 관련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분야는 태양광산업 분야임

* 배터리 부문: LG케미컬,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시스템 부문: LS산전 등

○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코리아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으며, **한EU·한미FTA*** 활용시 특혜관세 혜택 가능

*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관세율: 일반 2.5~3.4%, 우리나라(한·미FTA): 0%

⇒ **태양광 산업을 전략적 추진 분야로 선정**

□ **유망 투자 모델**

① 밸류체인·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활용한 **제조부문 합작투자 유치**

○ **태양광 산업 밸류 체인**상 국내 비교우위 분야(폴리실리콘* 생산)와 중국** 등 해외의 비교우위 분야(셀·모듈 제작)의 합작투자 활성화

* 세계적 수준의 폴리실리콘 생산: OCI(생산규모: ton), 웅진실리콘(ton) 등

** Yingli(생산시설규모: 4GW), Trina Solar(2.8GW), JA Solar(2.7GW) 등

<M&A 사례>

- **우리나라 한화** : 모듈 제조분야 세계 4위인 중국의 솔파펀을 인수('10년), 이어 셀 제조분야 세계1위인 독일의 Q-cell 인수('12년)함에 따라 세계 3위의 태양광회사로 발돋움

<투자계획 사례>

- **중국 태양광 기업 CNPV** : 새만금에 태양광 발전시설 2,800억원, 산단내 태양전지·모듈 제조시설 3,000억원 투자 추진 중('14.7월 MOU 체결)

○ 세계적 기술수준을 확보한 **ESS 및 ICT기반 에너지 신산업, 신재생 하이브리드* 기술** 등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해외시장 공략

* 두 개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융·복합한 전력시스템

② 차별화된 고가 전략상품 중심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 ODA 등 공적원조를 활용한 개도국 진출

○ 코리아 프리미엄 및 FTA플랫폼을 활용한 선진국 수출

* 중국의 태양광 덤핑수출 판정 사례: 美 상무부는 중국산에 26.71%-165.04%, 대만산(중국 우회수출)에 11.45%-27.55%의 반덤핑 관세 부과확정('15.1), 유럽도 중국의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13년)

<우회투자 사례>

- **중국 탄소강 기업 장쑤화청** : 포항 부품소재전용공단에 합작투자로 HC T&P를 설립('11.3월)하여 강관을 생산

다. 추진과제

(투자 모델 1) 밸류체인을 활용한 제조부문 외국인 합작투자 유치

□ 규제 및 제도개선

① KOTRA 글로벌 M&A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합작회사 추진 지원을 위해 관련 법·제도 재정비

② 신기술 개발 및 시장개척을 위한 R&D 우선 지원, 융복합 단지 운영경험 확보를 위한 융복합 사업 확대 등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 태양광 산업 유망지역인 중동을 대상으로 실증단지 구축 및 BM 개발을 위한 R&D 추진중('13.12,「중동지역 사막형 태양광 특수발전시스템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인센티브 구축

① 태양광 제조시설 합작투자시 현금지원, 정책금융(융자) 등 우대

* 신재생분야 국내사업으로 한정된 금융지원을 해외사업까지 확대('15.2)

② 국외기업과의 합작 추진시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추진 자금 및 컨설팅 비용 등 우선 지원 검토

□ **인프라 구축**

① 국외 신재생 프로젝트 추진현황(M&A 등)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정보 등에 대한 DB를 구축하는 등 정보제공 체계 구축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② 합작투자를 기반으로 중동, 남미 등 제3국 시장진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거버넌스 체계 마련

○ 관련 기업, 정부기관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지원협의체 설립·운영

(투자 모델 2) 차별화된 고가 전략상품 위주의 수출 지원

□ **규제 및 제도개선**

① 정부차원의 협력사업 발굴 확대를 위해 국가별 자원협력위의 신재생에너지 그룹 등을 활용하여 ODA 사업 등을 발굴

* 필리핀 도서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공급방안 공동추진(ADB-에관공) : '14년 협약체결 및 타당성조사(3억원), '15년 실증, '16년 본 사업추진

② 유망진출국 현지 사정에 특화한 수출주도형 R&D 과제 확대추진

*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소형 태양광발전 및 배터리 등

□ **인센티브 구축**

① 수출형 외국인투자지역제도의 도입

② ESS, ICT 기반 신기술 기술개발 등에 R&D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운영경험 확보를 위한 융복합 사업 신청시 선정 우대 등

□ **인프라 구축**

① 해외진출사업의 전주기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 가능한 종합지원기반조직 마련 및 추진

○ 신규 유망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 강화 및 해외진출 자문단 등 전담인력 확충('14.11) 등

② 국내 에너지자립섬 사업(신재생+ESS 연계)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의 국외 도서지역 확대를 위한 교두보 마련

○ 말레이시아 등 주요국 대상 협력사업 발굴과 GCF 등 재정확보

* 현재 울릉도 사업을 시작으로 국내 도서지역 내 신재생 보급확대, 해외사업 진출 모색 중(사우디아라비아, UAE, 필리핀 등, '16년 목표)

6. ICT 융복합

가. 현황

□ **추진배경**

○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해 ICT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ICT를 활용한 **산업분야 간 융합 필요성 제기**

- 교육 및 의료는 ICT를 활용하여 이용자에 더 나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대표적인 분야이며, 특히 개인·집단의 유전자 정보, 생체정보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와의 융합이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

- 상거래, 물류 서비스 등도 모바일 인터넷의 활성화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음.

- 제품 차원에서는 자동운전 자동차(self-driving car)와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서비스 차원의 융합에서는 모바일 결제, 산업 차원에서의 융합에서는 연결된 콘텐츠(connected contents) 등을 주요 사례로 들 수 있음.

○ 특히, 최근에는 파편화된 정보 간 융합 및 새로운 가치창출 목적으로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반의 초연결혁명이 진행 중

* 사람들 간의 연결에서 확장하여 모든 사물에 인터넷을 연결함으로써 기존 정보통신 주체가 사람에서 사물로 변화

- 사물인터넷이라는 용어의 사용 범위는 M2M(Machine to Machine), IoT(Internet of Things)를 거쳐 IoE(Internet of Everything)로까지 확장

- 사물인터넷은 물리적인 세상과 디지털이 만들어낸 세상 사이의 거래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줄 것이며, 결국 사물인터넷을 통해 기존 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

※ 향후 10년간('13~'20년) 총 19조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사물인터넷을 통해 창출될 것으로 추정(Cisco, 2013)

- ICT 제품의 소형화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다른 제품들과의 결합이 용이해진 것 또한 주요 배경 중 하나

□ **(주요국 정책현황)** 현재 IoT분야의 지배적 거점 없이 각 국가, 기업 간 치열한 선점경쟁 중이나 **산업특성상 융합생태계 조성**이 중요

○ (중국) "중국 사물인터넷산업 투자기금" 조성·운영 및 사물인터넷 12차 5개년계획 마련

- 중국은 2006년 '국가중장기과학기술 발전계획(2006~2020년)'을 수립하고 스마트 그리드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사물인터넷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투자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

- 2009년 중국 정부는 사물인터넷을 국가과학 연구의 중점분야로 발전시키기 위해 센서 네트워크 정보센터인 '감지중국(感知中國)센터'를 설립함.

- 중국 국무원은 2009년 11월에 강소성 무석시(無錫市)를 사물인터넷 시범 도시(제1호)로 승인하고 9개 분야*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함.

* 공업, 보안, 교통, 환경보호, 빌딩관리, 의료, 전력, 물류, 보세지역 관리 등

- 중국은 2010년 M2M을 10대 유망기술로 선정하고, 2010년 4월 상하이 인근에 '사물지능통신센터'(1,342억원 투입)를 세계 최초로 구축함.
  · 2010년에는 장쑤 '사물인터넷 연구발전센터'를 구축하고, 중국최초로 50억 위안 규모의 '사물인터넷산업 투자기금'을 조성함.

- 2010년에는 사물인터넷이 포함된 '7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함.

*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은 신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신흥정보, 첨단장비 제조업, 신소재 등

- 2011년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12차 5개년(2011~2015년) 계획에 사물 인터넷을 추가한 '사물망 12-5 발전규획'을 수립함.

○ (일본) 경제산업성의 "IT융합에 의한 신산업 전략" 수립

- 일본의 사물인터넷 관련 정책이 다양한 IT발전 전략* 등을 통해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추진

* 2004년 'u-Japan' 전략, 2009년 'i-Japan 2015 전략', 2012년의 'Active Japan ICT 전략' 등

- Active Japan ICT 전략(2012년 7월 발표)에서는 사물인터넷에 의해 정보를 수집, 전송, 해석 등 이활용하여 농업, 도시, 환경, 유통, 의료 등의 생산성을 높이고 신규 서비스와 비즈니스의 창출 필요성을 제시

- 일본 총무성은 2013년 초 'ICT 성장전략 회의'를 발족하고 ICT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동 ICT 발전 전략에는 지역의 안전 및 생활 편리성 제고, 각종 에너지 및 자원관리 등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ICT를 활용한 마을 만들기', 'ICT 생활자원 대책' 등 스마트 ICT 활용 전략을 제시함.

- ‘ICT를 활용한 마을 만들기’는 지역 인프라와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센서, 클라우드, M2M 등 최첨단 ICT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스마트 타운 조성 계획임.
- ‘ICT 생활자원 대책’도 스마트 그리드, 센서 기반 원격 감시 등 사물인터넷 등 최첨단 ICT의 활용 계획을 담고 있음.

○ (EU) ‘09년 “사물인터넷 액션플랜” 수립 및 ‘10년 IERC(IoT European Research Cluster) 설립

- EU는 지난 2006년 지식정보화 사회전략인 ‘i2010 : 유럽정보화사회 2010’ 계획을 마련하고 사물인터넷시대를 대비

- 2009년 7월 EU는 사물인터넷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인 14개의 ‘사물인터넷 액션 플랜(Internet of Things-An action plan for Europe)’을 발표

- 2013년 8월에는 2005년부터 EC를 중심으로 모색해 온 유럽의 사물인터넷 발전에 대한 정책 수립의 연구 결과인 ‘사물인터넷의 역동적이고 신뢰도 높은 발전을 위한 정책 옵션’을 제시
  - EC는 사물인터넷 정책 옵션으로 무조치(No Action), 구속력이 완화된 규범 형태의 연성법, 강력한 규제의 경성법(Hard Law) 등으로 구분함.
  - EC는 사물인터넷 관련 유럽 차원의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

○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는 사물인터넷을 혁신적인 6대 기술 중 하나로 선정

- 2008년 4월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는 사물인터넷을 미국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선정함.
  - NIC는 2025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6대 와해성 기술*(disruptive civil technologies, 2008) 분야 중 ‘사물인터넷(The Internet of Things)’을 선정함.

* 6대 와해성 기술 : 바이오 건강장수기술, 에너지 저장물질, 바이오 연료 및 바이오 기반 화학물질, 청정석탄 기술, 서비스 로봇, 사물인터넷

- 2009년 미국 정부는 2020년까지 스마트그리드, 헬스케어 IT, 광대역망 보급사업 등의 IT뉴딜 정책을 계획

- 2013년 3월에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IoT 관련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칩, 모듈, 단말 및 통신업계가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사물인터넷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활동이 진행

□ **한국의 비교 우위**

○ **(IoT 인프라)** 평균인터넷 속도 1위(전세계 평균치에 약 5.6배), 우수한 인재, 5G·CDN 등 차세대 네트워크 연구 활발

○ **(세계선도 기업)** 삼성, 현대 등 IoT 기술응용, 접목할 제조기업 보유

○ **(FTA 플랫폼)** 미국, EU, 중국 등 거대시장과 FTA 체결하여 사물인터넷 분야 인프라 및 제품 교역 유리

○ **(ICT 활용경험)**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 등 국민들의 ICT 활용 경험 및 신기술에 대한 높은 수용성 보유

○ 다만, 협소한 국내시장, 국제표준 주도 경험 부족, 센서·부품 등 원천기술 취약 등의 약점도 존재

나. 기본 방향

□ **중점추진 세부분야 : 동북아 IoT 테스트베드 허브 구축**

○ 특정지역에 비활성화 사물 간 연결(lv1), 1차적 정보수집·활용(lv2), 정보융합을 통한 신규서비스 창출(lv3)이 유기적으로 가능한 IoT 융합생태계 조성

- IoT 기본 인프라 투자유치, 정부지원을 통해 개방형 제품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목표

□ **유망 투자 모델**

1 **Model 1 :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센터**(Public Cloud Data Center) **설립**

○ **(목적)** 특구 내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하고, **정보유형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판매**하여 IoT분야 사업활성화 모색

- 특구 내 각종 정보(위치, 결제, 교통, 관광, 의료 등)를 데이터센터에 수집하고 이를 정부 관리 하에 공공 데이터 성격으로 처리, 가공 및 분석

○ **(운영방식)** 기본적으로 정부가 데이터관리 및 판매하되, 특구 내 IoT 인프라(디바이스, 플랫폼, 네트워크 등) 투자기업과 수익 공유

* (정부) 정보관리 및 판매, 개인정보 보호 (투자기업) 특구 내 인프라 투자 및 데이터 판매수익 (활용기업) 데이터획득에 따른 제품생산 및 특구 내 실험 가능

2 **Model 2 : IoT 테라포밍**(terraforming) **실증센터 구축**

○ **(목적) 전 세계 환경을 재현**하여 각 국 표준에 맞는 **제품 개발, 테스트를 원스톱(one-stop) 가능한 센터구축** 통해 IoT 분야 비즈니스 거점 구축

- 중국 홈, 오피스와 유사한 구조 재현하여 중국 스마트홈(Smart Home), 스마트 오피스(Smart Office) 진출 기업들에게 실증 테스트 환경 제공

○ **(운영방식)** 제품별 실증환경을 자유롭게 구현하고 실증적 검증에 따른 테스트 수수료 수입 및 센터 내 IoT 인프라 투자기업과 수익 공유

* (정부) 건물, 전기 등 기본인프라 지원 (투자기업) 센터 내 인프라 투자 및 테스트 수수료 수익 (활용기업) 전세계 표준을 한 곳에서 실험가능하여 실증테스트 비용 절약

□ **(특화육성 지역)** IoT 특성상 **정보수집, 기업 간 협업, 실증적 검증**이 가능한 **교통, 인구, 인프라 중심지**를 특화육성지역으로 지정

○ **(판교)** 국내 주요제조기업 접근성 및 주거환경 등 외국유치 유리

○ **(부산)** 최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을 통해 IoT 허브 추진

다. 추진과제 : 투자 모델별, 특화 지역별 제도개선 등을 추진

□ **(규제개선)** 사물인터넷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 규제 보강

○ **(정보수집·관리·처리)** 정보수집 용이성 확보를 위해 특구 내 개인정보 수집규제 완화* 및 수집정보를 공공 데이터 성격으로 가공, 판매 및 무상 배포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 예: 개인위치정보보호제도 완화(위치정보의보호 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9조)
** 예: 데이터가공및제공에관한법률 제정

○ **(테스트 환경)** 특구 내 현실의 실증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규제 완화

* 예: 무인자동차의 통행제한조치 완화(도로교통법 제6조), 드론 등 비행물체 비행금지, 제한구역 완화(비행제한구역에서 150m 이상 비행시 사전허가제도 완화)

□ **(인프라)**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센터(Public Cloud Data Center), IoT 테라포밍(terraforming) 실증센터 건물 확보 및 임대료, 수도·전기료 지원 기본 인프라 제공

* 예: 센터 입주 외국기업에 대해 외촉법상 임대료 지원

□ **(인센티브)** IoT분야 인센티브제도 마련

○ **(정보접근 용이)** IoT 인프라 투자기업에 대해 특구 내에서 수집된 정보 무상제공 및 정보접근권한 우선권 부여

○ **(IoT 표준 제공)** 네트워크 표준 등 변화하는 IT환경을 지속적 제공하여 제품 개발 및 실증 용이

7. 금융

가. 현황

□ 한국의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 성과

○ (경과) ’03년 금융허브전략 추진이후 금융중심지 구축을 위해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중

- ‘03.12월,「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드맵 1단계 전략(‘04～’07년)에 따라 금융허브 기반 구축 추진

-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및 서울·부산 금융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
  - ‘08.8월,「제1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08～’10) 수립: 금융산업 선진화, 금융인프라 선진화, 자산운용시장 육성, 금융회사 집적 여건 조성
  - ‘09.1월, 서울·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여 금융회사 집적을 통한 금융클러스터 형성을 추진
  - ‘11.9월,「제2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1～’13) 수립: 자본시장 고도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인프라 선진화, 금융중심지 조성 가속화

○ (성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성공적 극복, 금융산업 구조개선 및 국가 신인도 상승* 도모, 한국금융의 글로벌화 진전 등

* 국내은행 고정이하여신비율(%) 12.86(’99) → 1.70(’13) / 국가신용등급(S&P) B+(’97) → A+(’13)

○ (문제점) 여전히 낮은 글로벌 경쟁력 등 금융중심지로서의 매력도 미흡

-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독자산업으로서의 부가가치 창출 기능*은 아직까지 미흡

* 자기자본이익률(%) : 세계1000대 은행 20('07)→12('12) / 국내 은행 15('07)→3('12)
*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90년대 중반 이후 6%대 정체 (영국 8%, 호주11%)

- 또한,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보다 국내에서의 안정적 수익 창출에 집중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이 여전히 부족

* 해외점포 수익비중(%, '12) 국내은행 7.5, 국내 증권회사 0.3, 씨티그룹 60.8

-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금융전문인력 배출이 홍콩・싱가포르 등과 비교시 미흡

* 금융관련 취업자들이 상당수가 국내영업, 소매금융 등에 종사하면서 글로벌 금융, IB・자산운용 등 첨단금융분야의 전문성 부족

- 서울・부산 금융중심지에 국내・외 금융기관 등이 입주하고 있으나 지역본부의 유치, 금융연관산업과의 시너지효과 등 금융생태계가 활발하게 조성되어 있지는 못한 상황

□ 주요 금융허브 현황

○ **(런던)** 뉴욕과 더불어 세계 2대 금융시장으로서 3L*을 바탕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세계 외환거래의 30%를 차지

* Language(영어), Law(미국과 유사한 법제도), Labor(유연한 노동시장)

○ **(홍콩)** 세계 100대 금융기관중 70여개 기관이 입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국제 자금조달 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아시아 금융 허브

○ **(싱가포르)** 아시아 제2대 외환거래센터로 풍부한 외환거래 경험과 인재를 보유, 글로벌 PB와 자산관리센터 및 상품거래 중심지

□ 금융허브로서 한국의 비교 우위

○ **(약점)** 금융분야 후발주자로서, 각종 규제, 글로벌 금융 경험 미흡, 제한적 영어사용 역량, 경직적 노동시장 등의 한계

○ **(강점)** 달러화에 대해서는 후발주자이나 신흥시장인 위안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강점을 보유

- 한국은 중국의 5번째 교역국으로써 탄탄한 실물경제가 뒷받침되어 실물경제와 상생 발전 및 다양한 파생시장 형성 가능(실물기반이 약한 홍콩, 싱가포르 대비 비교우위)

- 中·美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확보(홍·싱에 비해 장점)

- 영어에 비해 다양한 중국 동포, 중국 유학생 등 중국어 관련 인적자산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지리적 인접성 확보(런던 대비 비교우위)

- 비중화권 국가중 세계 3번째로 RQFII* 자격을 획득하여 유리한 고지 선점

* 역외에서 조달한 위안화 자금을 이용하여 중국 본토에서 주식, 채권, 머니마켓펀드(MMF) 등 각종 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자격

나. 기본방향

1) 중점추진 전략분야 및 유망 투자 모델

□ 중점추진 전략분야 : 위안화 허브 구축

○ 위안화 시장은 신흥시장으로서 홍콩 등이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고 있는 달러화에 비해 한국이 유리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블루오션

⇒ 한국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위안화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여 위안화 허브를 구축

□ 유망 투자 모델

① **(자금조달)** 해외 금융이관이 국내 투자 → 국내 투자한 중국기업 및 해외 투자가들을 위한 위안화 채권 발행 등 자금 조달 서비스 제공

○ 중국 진출 외국기업은 중국 규정 등으로 인해 중국내 위안화 채권 발행 등을 통한 위안화 조달이 어려운 상황

○ 국내 은행을 통해 국내에서 위안화 채권 발행(김치본드)하는 경우 낮은 금리(중국 5%, 한국 3~4%)로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 가능

② **(파생 금융상품)** 해외 금융기관이 국내투자 → 국내 풍부한 위안화 자산을 활용한 파생금융 상품 개발·제공

③ **(수출입 결제)** 중국 수출입 해외 기업의 홍콩을 통한 결제 → 해외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여 중국에 수출하고 한국 위안화 청산은행을 통해 결제

○ 해외 기업이 기존 한국 장점(FTA 효과 + 한국의 부품소재기반 + 수요기업)에 더하여 결제비용을 경감 가능

* 일본 기업의 경우 홍콩 거래시보다 시차로 인한 불편함 경감 가능

2) 특화 육성 지역

□ 현재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금융 중심지로 지정('08.1월)되어 있는 여의도와 부산을 위안화 허브 중심지로 집중 육성

○ **(여의도 IFC)** 국내투자 글로벌기업 및 금융기관의 역외 위안화 자금조달 중심지이자 위안화 파생상품 거래의 동북아 중심지로 육성

○ **(부산 문현금융단지)** 물류 기반을 활용한 항만물류, 수산, 선박 분야 위안화 금융에 특화 발전

다. 추진과제

(투자 모델 1) 중국기업이 국내에서 위안화 채권 발행(김치본드)을 통해 낮은 금리(중국 5%, 한국 3~4%)로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

□ **(규제개선) 외국은행 지점의 위안화채권 발행 허용**

○ **(현황)** 국내 축적된 위안화 자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은행뿐만 아니라 외국은행 지점의 위안화 채권이 용이해야 하나 현재는 이를 금지 (상법 시행령 제26조, 은행법 제2조)

* 중국기업 - 중국현지조달 보다 한국조달시 금리자 저렴, 중국진출 외국기업 - 외국기업은 중국내에서 위안화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 국내 발행수요 발생

○ **(개선)** 외국은행중 신뢰도가 높은 은행을 선정하여 해당은행 지점이 국내에서 일정한 규모내에서 위안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 **(인센티브) 위안화 채권 공모·발행 지원**

○ **(현황)** 중국기업이 국내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계약서 양식 등 중국과 국내 제도가 달라 다양한 불편이 발생하는 상황

○ **(개선)** 중국기업에 대한 표준사채 관리 계약서 수정적용 인정 등을 추진

□ **(인센티브) 위안화 예금에 대한 조세지원**

○ **(현황)** 위안화 허브로 도약을 위해서는 풍부한 위안화 예금 예치가 필수적이나 한국은 후발주자로서 홍콩 등 기존의 시장과 예금유치 경쟁이 힘든 상황으로 적극적 조세지원 등이 필요

○ **(추진방향)** 여의도 및 부산 금융센타 내 예치되는 위안화 예금에 대해 이자소득세 인하 등 필요최소한의 조세지원을 통해 국제금융 시장에서 예금유치의 명분을 제공

(투자 모델 2) 해외 또는 국내 금융기관이 국내 풍부한 위안화 자산을 활용한 파생금융 상품 개발·제공

□ **(규제개선) 금융상품 투자한도 확대**

○ **(현황)** 현재 국내 은행은 유가증권은 자기자본의 60% 이내, 선물환은 1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위안화 금융상품 투자를 위해서는 기존 자산을 판매하고 위안화 상품으로 재구입해야 하는 문제

○ **(개선)** 위안화 파생상품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규모 제한을 완화

- **(예시)** 위안화 금융상품 투자 결과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허용범위의 50%이내까지 인정(유가증권 90%, 파생상품 225% 이내)

□ **(기타) 원/위안화 해지파생 시장조성 TF 운영**

○ **(현황)** 위안화 파생상품 시장의 조기 조성을 위해서는 파생상품 개발 및 운용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외국계 은행을 적극 활용할 필요

* 현재 외국계 은행의 경우 위안화 자금조달 및 운영 및 해지파생상품 제공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으나 국내 기관은 참여가 저조

○ **(추진방향)** 위안화 시장에 관심이 많은 외국계 은행을 중심으로 위안화 파생상품 선도 은행으로 지정하여 TF를 구성

- 외국계 은행을 중심으로 위안화 파생상품 성공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관의 참여로 이어지도록 유도

□ **(인프라 구축) 위안화 업무관련 기관 신설**

○ **(현황)** 위안화 파생상품 개발 등 위안화 허브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추진방향을 전략적으로 제시할 Think Tank가 부족한 상황

○ **(개선)** 여의도 IFC에 자본시장연구원 산하 위안화허브 센터를 개설하고 관련 전문인력도 양성

(투자 모델 3) 제3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여 중국에 수출하고 한국내 위안화 청산은행을 통해 결제

□ (규제개선) 교통은행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 과도한 외채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외화 채권 발행시 부과하는 부담금(채권액의 0.02~0.2%)

○ **(현황)** 교통은행*이 원활한 위안화 유동성 공급 업무를 위해서는 위안화 채권발행을 통한 위원화 확보가 필수적이나 외환건전성 부담금으로 인해 유동성 확보에 한계

* 위안화 청산결제 업무에 대해서는 중국중앙은행의 국내 지점역할을 수행중

○ **(개선)** 위안화 부채에 대한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부담금 비율을 완화(채권액의 0.02~0.2% → 0.01~0.1)

□ (인센티브) 기업들의 위안화 결제 활성화

○ **(현황)** 위안화 결제의 이점에 대한 홍보부족 및 기존 홍콩을 경유한 결제방식에서 직거래 방식으로 전환에 따르는 교육 비용, 관련 S/W 교체 비용 등으로 인해 위안화 결제를 주저

○ **(개선)**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

- 최고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포럼 개최 등을 통한 홍보 추진

-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은행을 중심으로 결제시설 교체비용을 저리융자

* 위안화 가격을 지속 제시함으로서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은행으로서 11월초 까지 금융위에서 10여개 은행을 선정할 계획

- 한국금융연수원을 통해 기업을 대상으로한 위안화 결제 교육프로그램을 신설·운영

□ (인센티브) 수출보험 지원

○ **(현황)** 달러화에 비해 미약한 위안화 지위로 인해 위안화 결제 신뢰성을 제고할 지원제도가 필요

○ **(개선)** 위안화 통화로 수출대금 결제시 단기수출 보험* 한도 우대

* 상품선적후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수출계약 체결후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수출대금 미회수시 손실을 보상

8. 물류

가. 현황

□ 전자상거래 무역의 활성화

○ 스마트 기술의 보편화, 글로벌 운송 시간 단축 및 비용 감소 등으로 무역부대비용이 저렴한 전자상거래 무역 비중이 중국, 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확대

* 중국 EC 무역규모 및 비율: ('12) 2.3조 위안(9.5%)→('16e) 6.4조 위안(18.5%)
* EU EC 무역 규모 : ('12) 335억불 → ('13전망) 462억불 (전체의 10.6%)

○ 중국의 해외직구 확대: '14년 235억불 규모로 성장

* 중국 직구 규모(십억$) : ('10) 2 → ('12) 8.1 → ('14e) 23.5 → ('18e) 168

○ 이에 따라 중국시장을 노리는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의 적극적인 중국 진출

* 2014년 아마존이 상하이 자유무역구에 중국 시장을 겨냥한 국제무역 본부를 정식으로 설립

○ 중국은 Alibaba, Tmall 등 중국의 전자상거래 Mall 및 결제시스템(Alipay)을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전문기업 육성

* 알리바바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AliExpress '13년 설립(정부지원)하고, 199개국에 5천여 상품을 무료 배송

* '14.11.11 싱글 데이에 해외 판매 확대. 아마존 차이나 8천만종 상품을 해외 6개국으로 직배송

○ 글로벌 전자상거래 및 ICS 거대 기업인 아마존의 한국진출 확정

* 아마존은 3월중 한국 지사를 설립하고 업무를 시작할 계획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의 GS타워에 970평 규모의 사무실 임차 계약을 2024년 2월까지 맺고 200-300명 규모의 직원 모집

□ 전자상거래 무역 활성화에 따른 물류 서비스 선점 경쟁

○ 신속한 상품 배달을 서비스 경쟁의 핵심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물류서비스에 대한 요구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짐

*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은 2013년 5월 알리바바 CEO 은퇴후 18일만에"스마트물류네트워크(CSN, China Smart Logistics Network)"을 기치로 한 물류회사인 차이냐오(菜鳥·새내기라는 뜻의 인터넷 신조어) 창업하고 55조원의 투자계획 발표

○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의 한국 물류사업 진출 선언('15.3 중앙일보)

* 결제·물류 통합서비스가 시작되면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제품 해외직구의 전 과정이 중국주도로 수행될 가능성이 높아짐

* 예를 들어 항저우에 사는 중국인이 알리바바의 해외직구몰인 '티몰 글로벌'이나 알리페이로 결제 가능한 한국 기업 온라인몰에서 '이민호 백팩'을 주문·결제하면 알리페이가 업체에 정산해주고 차이냐오는 대행업체를 통해 업체의 창고에서부터 중국 세관 통관, 중국 내 배송까지 일사천리로 해결

○ 이는 마치 애플이 하드웨어인 아이폰/아이패드, 소프트웨어인 iOS, 앱 유통에 앱스토어, 콘텐츠 유통시장인 아이튠스를 통한 애플만의 스마트폰 생태계를 독점 하듯이 알리바바가 동북아의 전자상거래 및 결제 시스템, 물류 산업을 아우르는 생태계를 독점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임

□ 새로운 전자상거래 무역 플랫폼의 구축을 위한 전자상거래 물류 Hub 전략

○ 미국-중국이 자국 시장을 기반으로 주도하는 전자상거래-물류-결제의 융합무역 추진에 대응하여 한국은 지정학적 입지와 최첨단 IT를 무기로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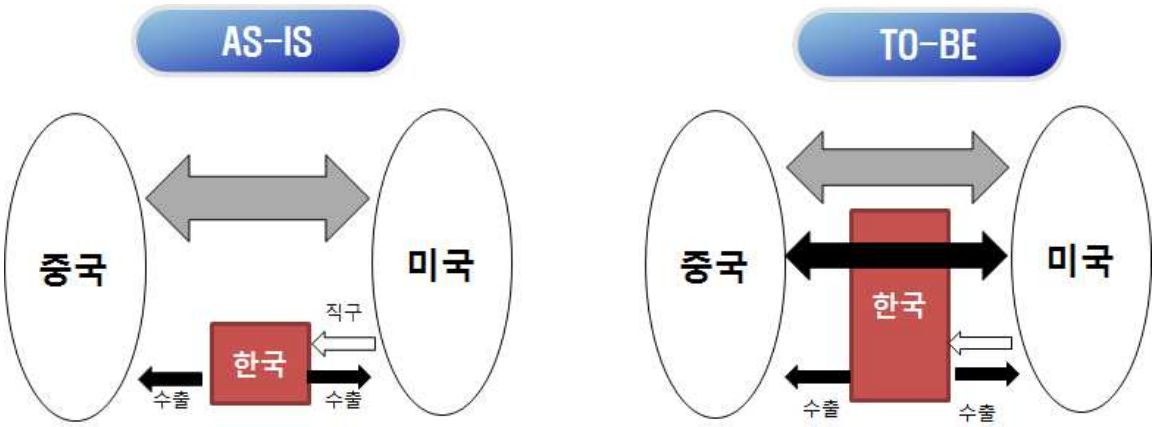
○ 중국시장 인접성, 항공특송 경쟁력, 한국제품에 대한 선호를 활용한 동북아 전자상거래 물류 Hub 기지 건설

* 최근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인천공항을 통한 동북아 환적수요 증가

*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A社는 미-중 직항노선 및 편수 부족으로 노선이 많은 인천공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미→한→중 수출모델에 관심 증가

○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한국 시장 진출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해외시장 진출의 환적 허브 전략

<그림 4-6> 환적허브 전략 모델



※ 일본, 동남아, 러시아, CIS 등으로 확대 적용 가능

○ 이러한 환적허브 전략은 중간 매개자로서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더불어 한국의 전자상거래, 결제, 물류시장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개념이 혼재되어 있음

□ **주요국 현황**

○ **(싱가포르)** 아세안 지역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 창이공항, 싱가폴항 등 우수한 인프라, 금융・법률 등 물류산업을 뒷받침하는 서비스 산업의 발달 등을 통해 아시아 물류허브로 기능

○ **(상하이)** 중국경제 중심지로서, 거대한 배후 수요시장을 갖추고 있으며 물류인프라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통해 물류허브로 부상

○ **(홍콩)** 중국의 전통적 대외 수출 통로로서 물류 중심지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중국 물류인프라 개선에 따라 위상이 축소되는 추세

□ **한국의 비교 우위**

○ **(약점)** 협소한 내수시장, 높은 인건비, 도로중심 운송체계, 다단계 물류 시스템(화주-대형운송업체-주선・운송업체-소형 운송・주선업체-지입차주), 낮은 3자물류 이용율 등의 한계가 내재

○ **(강점)**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류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한국은 전자상거래 분야에 다양한 강점을 보유

- 한·미 및 한·중 FTA 체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등에 따른 미-중 직접 교역에 대한 상대적 우위

- 한국을 거점으로 중국 등 해외시장에 수출하고자 하는 외투기업의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물류 수요도 증가 예상

- 최근 중국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가 확대* → 한국생산제품에 대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 및 관련 물류 수요 확대 예상

* ('13) 2천억 RMB → ('18) 1조 RMB

- 한국은 신속하고 신뢰성있는 상품배달 서비스를 요구하는 전자상거래에 강점을 보유

- 발전된 ICT 능력 및 인천공항의 철저한 보안 검사에 따른 안전성 보장

- 중국 전역 및 세계 주요공항과 연결되어 있는 인천 공항의 우수성

나. 기본방향

1) 중점추진 전략분야 및 유망 투자 모델

□ **중점추진 전략분야 : 동북아 전자상거래 물류 허브**

○ 중국의 물류 인프라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환적 물류수요가 급감하는 등 물류전반에 걸친 허브전략에는 한계

⇒ 한국의 우수한 IT 인프라기술 역량, 인천공항의 우수성 등을 활용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물류 허브로 특화

□ **유망 투자 모델**

① **(수출)** 국내외 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수요 증가 → 글로벌 물류기업의 국내투자(물류창고 등) 확대 → 한국에서 전자상거래 물류 수익 창출

○ 외투 기업 등의 전자상거래 물류수요를 글로벌 외투기업이 국내투자를 통해 효과적으로 서비스함으로서 상호간 수익창출이 가능

② **(환적)** 글로벌 물류기업의 국내투자 → 전자상거래를 통한 中美간 거래(중국기업 → 미국고객, 미국기업 → 중국고객)시 우본의 국제특송(EMS)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배송 → 환적 관련 수익 창출

○ 미-중간 직접 EMS는 통관절차가 까다로우나, 한-중 EMS의 경우 한·중 양국 우정당국간 협약을 활용하여 신속한 배송이 가능

③ **(결제)** 전자상거래 관련 결제를 국내결제기업을 통해 처리

○ 해외기업이 전자상거래 거래와 관련하여 각종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내결제기업으로 결제하면 결제 기업이 관련 서류증빙을 대행하는 서비스가 가능

2) 특화 육성 지역 : 인천 국제공항 및 배후지역

○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수준의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으로 인프라가 우수

* CAPACITY : 현재 450만톤 → '17년 1천만톤

○ 현재 인천공항이 직구 물량 15억불을 처리하고 있어 전자상거래 물류 허브로서 경험이 풍부

다. 추진과제

(투자 모델 1) 국내외 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수요 증가 → 글로벌 물류기업의 국내투자(물류창고 등) 확대 → 한국에서 전자상거래 물류 수익 창출

□ (인프라) 인천공항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단지 구축 지원

○ **(현황)** 항공특송을 통한 원활한 배송을 위해서는 공항 배후 물류단지 구축이 필수적이나 현재 인천공항은 관련 인프라가 미흡

- 특히 전자상거래를 통한 신속한 배송을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에 특화된 물류장 구축 수요가 증가 예상

○ **(추진방향)** 해외 물류기업 투자유치, 국내 물류업체 공동펀딩 등을 통한 외투기업의 국내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의 투자를 촉진

- **(외투지역 지정)** 인천공항에 물류단지를 구축하는 해외 물류기업에 대해서는 개별형 외투기업 지정을 적극 추진

* 외투기업이 복합물류터미널에 1천만불 이상 투자하는 경우

- **(현금지원)** 복합물류단지의 경우 현금지원 평가시 수출효과, 국내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 매출 확대효과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현금지원이 적극 이루어지도록 추진

* 현금지원 평가기준 :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 효과,고용창출효과와 고용의 질,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수출, 매출효과 포함), 입주지역의 적정성 등

- **(윈윈 펀드 활용)** 물류단지 투자하는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윈윈 펀드와 공동투자를 통해 투자비용을 절감하도록 추진

* 외투기업의 투자에 공동투자함으로서 투자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펀드로 현재 1천억원 규모로 조성 운영중

- **(국내 공동 펀딩)** 국내 벤처캐피탈, 국내 물류기업, 전자상거래 기업간 공동펀딩을 통해 공동물류창고 구축 등을 추진

〈물류단지 구축위치〉

□ (인프라) 통합물류정보 플랫폼 구축

○ **(현황)** FEDEX, DHL 등 글로벌 대형 물류업체의 경우 물류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 중소 물류업체의 경우 저렴한 배송비용에도 불구 전자상거래에 필수적인 물류정보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여 전자상거래 활용도가 낮은 상황

* 이랜드의 경우 일부 수출입 물량에 대해 원가 절감을 위해 중소 해외배송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나 시스템 구축 미비로 인해 신속한 물류상태 파악에 한계

○ **(추진방향)** 창고에서부터 최종 도착지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 물류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자상거래 관련기업에 정보 제공

- **(외투유치)** 실시간 물류시스템 구축이 미비한 해외물류업체가 한국투자를 통해 실시간 물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투자유치 지렛대로 활용

* 글로벌 물류시스템을 기구축하여 한국 투자유인이 적은 글로벌 물류기업보다 중소 해외물류업체를 주요 유치타겟으로 할 필요

- **(중소 물류업체 육성)** 중소 물류업체가 저렴하게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서 중소 물류업체의 전자상거래 참여를 활성화

(투자 모델 2) 글로벌 물류기업의 국내투자 → 전자상거래를 통한 中美간 거래(중국기업 → 미국고객, 미국기업 → 중국고객)시 우본의 국제특송(EMS)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배송 → 환적 관련 수익 창출

□ (인센티브) 환적 EMS 수수료 인하

○ **(현황)** 환적 EMS 수요가 미→일 수요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한 환적 수요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

* '14년 14백건으로 전체 환적 EMS 수요의 99%

- 또한 환적 EMS 수수료가 높아 소액 상품 또는 소규모 전자상거래 업체가 활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

* 서울에서 중국 배송시 EMS의 경우 0.5kg 중량의 화물을 중국에 배송시 요금 7,000이나 차이냐 호를 이용하는 4800원

○ **(개선)** 중국 또는 아시아 시장에 배송을 목적으로 하는 EMS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적극 지원을 검토

□ **(인프라) EMS 처리장소 확대**

○ **(현황)** 향후 환적수요 증가에 따른 EMS 수요 증가도 예상되나 현재 EMS 처리 장소가 우본 국제우편물류센터(인천 중구 운서동) 1곳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

○ **(추진방향)** EMS 처리 장소를 추가 지정을 검토하여 예상 환적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 **(규제개선) 특송업체 과태료 부과제도 개선**

○ **(현황)** 수입 목록통관시 제출한 통관목록이 저가로 신고되거나 품명정보가 불분명한 경우 특송업체에게 과태료 부과

- 그러나 특송업체는 화주가 작성·제공한 화물 정보를 그대로 신고하며, 가격의 적정성, 진위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움

- 일반 수입신고의 경우 가격신고가 잘못되면 수정신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상황

○ **(개선)** 일반 수입신고처럼 수정신고 기회를 부여하거나 화주·수입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을 검토

□ **(규제개선) 사전수입적하목록신고를 사후 거래확인서로 대체**

○ **(현황)** 해외물류업체들은 과거 한국수출 물량과 중국 등 인근지역 수출물량을 해외에서 포장하여 각각 해당 지역에 배송

→ 최근 경비절감을 위해 국수출 물량과 중국 등 인근지역 수출물량을 모두 한국에 벌크로 들여와 국내에서 재포장을 하는 방법을 추진

- 그러나 이 경우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관세면제를 위한 사전수입적하목록 신고가 없어 조세감면 혜택이 어려운 상황

○ **(개선)** 국내에서 포장하는 수입물류에 대해서는 사전수입적하목록신고를 사후 거래확인서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추진

(투자 모델 3) 전자상거래 관련 결제를 국내결제기업을 통해 처리

□ (제도개선) 전자상거래 결제기업 인정제도 도입

○ **(현황)** 사전수입적하목록신고를 사후 거래확인서로 대체하는 경우 사후 거래확인서의 신뢰성에 문제

○ **(개선)** 국내 결제기업을 공인 결제기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결제기업이 국내수입용 물품임을 보증함으로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최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결제시장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

* 수입목적임을 구매자가 결제시 기록하게 하고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해당정보(구매자 인적사항, 구매목적 등) 제공 요구시 제공

□ (인프라) 인천공항에 재포장 처리단지 구축

○ **(현황)** 벌크를 최종목적지에 재분류 및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공항인근에 재포장 집적지가 필요하나 관련 인프라가 미구축

○ **(개선)** 안천공항 물류단지 인근에 환적을 위한 재포장 처리단지를 구축을 검토

9. 복합레저

가. 현황

1) 주요 국가 복합MICE산업 현황

□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서비스부문에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아시아의 대표적 허브 국가로 발전하였으며, 특히 국제회의 개최빈도 급증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MICE 산업국가로 부상

○ '11~'13년 세계 국제회의 개최 순위 1위(UIA)를 차지하였으며, '13년 아시아 최대 컨벤션 도시로 선정(ICCA)

- 국제협회연맹(UIA: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의 국별 국제회의 개최 통계에 의하면, 국제회의는 국제기구의 회의가 잦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해왔으나 2006년부터 싱가포르가 상위권에 진입하기 시작해 2011~13년간 국제회의 개최 건수 1위를 차지하였음.

- 뿐만 아니라 2012년, 2013년 연속 국제회의 컨벤션협회(ICCA)에서 아시아 최대 컨벤션 도시로 선정

○ 싱가포르가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인 MICE 국가로 부상하게 된 배경으로는 다국적기업들의 진출로 인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제공되는 시장환경을 가지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

- 또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아시아 최고 수준의 우수한 사회기반시설도 MICE 산업이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

○ 그 밖에도 우수한 관광 인프라, 연관 산업의 발전, 지리적 위치, 소통의 용이성, 싱가포르 정부의 적극적인 MICE 산업 육성정책 등이 강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특히, 환경적인 요인 이외에도 싱가포르 정부의 적극적인 MICE 산업에 대한 지원 또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싱가포르는 이미 국제적인 수준의 MICE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정부는 센토사섬(Sentosa island), 마리나만(Marina Bay)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복합 리조트를 개발하면서 공격적으로 시설 확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 MICE 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주요 기관 중 하나인 싱가포르 관광청은 BTMICE(Business Travel+MICE) 부서를 설립하여 MICE 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관광청 산하의 싱가포르 전시 컨벤션 뷰로는 컨벤션 및 회의 개최 지원, 전시 및 컨퍼런스 개최 지원, 비즈니스 관광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일본

○ 싱가포르와 더불어 UIA 집계 2010-2013년 세계 국제회의 개최 순위 2~3위를 유지

- 국제협회연합(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UIA)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2013년 국제회의 개최 건수가 58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두 단계 하락한 4위를 차지

○ 정부(JNTO)와 지자체 중심으로 각 지역의 특화 산업, 관광산업과 연계된 성장 전략을 시행하여 지역산업 성장에 기여

2) 복합MICE허브로서 한국의 비교 우위

□ 현황

○ 2012년 기준 24.8조원 정도로 추산되며, 국제회의, 전시회 모두 개최건수 기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회의(Meeting)부문 규모가 18.9조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Convention(4.0조원), Exhibition(1.0조원), Incentive(0.9조원) 순

- 한국의 국제회의 개최건수는 2000년 53건에서 2012년 229건, 전시회 개최건수는 같은 기간 132건에서 560건으로 증가

○ 또한, 국제협회연합(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UIA)에 따르면, 2013년 한해 한국은 총 635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세계 3위, 세계시장점유율 6%를 차지하였음.

- 한국은 2011년 6위(469건), 2012년 5위(563건)에 이어 올해도 순위가 두 단계 상승하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 차지

□ **약점**

○ 경쟁 국가에 비해 지리적 위치(싱가포르), 글로벌기업 HQ 보유 규모, 복합리조트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의 측면에서 열위

○ 또한, 현대경제연구원(2014)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전시·회의 시설, 숙박시설 등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홍보 활동의 효과성, MICE 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규모 등 또한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강점**

○ 뷰티와 엔터테인먼트 등 특정분야에서의 국제적 경쟁우위

- 중국의 부상으로 중국과 미국·일본의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한국이 기업회의 장소로 각광 받을 것으로 예상(中·日 대비 강점)

- FTA 체결로 한국을 거점으로 하는 글로벌기업투자가 증가하는 경우 이에 따라 한국에서 MICE 수요 확대 가능

- 아울러 최근 신 한류열풍으로 한류뷰티 관광객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와 연계한 관광수요 증가 예상(싱 대비 강점)

* 외국관광객 쇼핑품목 중 향수/화장품이 50.1%로 가장 큰 비중 차지, 특히 중국인의 경우 향수/화장품 구매율이 73.1%('13년 한국관광공사)

- 최근 정부가 적극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카지노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도 아직 합법화되어 있지 않은 일본에 비해 유리(日 대비 강점)

○ 동북아 거점으로서의 접근성, 첨단 IT 기술의 MICE 산업 적용 가능성 등은 장점으로 활용 가능

○ 현대경제연구원(2014)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주요 국가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

- 한국은 주요국가들과 비교할 때 시설 임대료와 행사 준비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나. 기본 방향

1) 중점추진 전략분야 및 유망 투자 모델

□ 중점추진 전략분야 : 기업회의, 뷰티·엔터테인먼트 특화형 MICE허브

○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뷰티・엔터테인먼트 분야와 MICE 사업간 융합을 통해 복합형 MICE 산업 허브를 구축

○ 한국을 거점으로하는 글로벌 기업투자 확대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회의 개최수요에 특화한 MICE 전략을 추진

□ 유망 투자 모델

① 기업회의 특화

○ 한국이 중국 등 아시아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하는 해외기업 투자 확대 → 한국법인이 아시아 헤드쿼터 기능 수행 → 한국에서 기업회의 개최 → 효과적 경영전략 수립 및 회의비용 절감

② 뷰티산업·엔터테인먼트 연계

○ **(뷰티 : 전시)** 미용, 스파 분야 중국 등 해외기업이 한국에 투자 → 국내에서 국내 한류 관광객과 아시아 바이어를 대상으로 전시 등을 개최 →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수익 창출

○ **(뷰티 : 인센티브 관광)** 뷰티 분야 외투기업들이 한국에 투자 → 국내 복합레저(관광)시설과 연계하여 인센티브 관광상품 개발 → 인센티브 관광객을 대상으로 매출 확대

○ **(엔터테인먼트)** 외투기업들이 국내에서 MICE 개최 → 한국 MICE 개최를 계기로 카지노, 한류 공연 등 경험 → MICE 개최 만족도 제고

2) 특화 육성 지역 : 인천 경자구역

□ MICE 인프라, 지리적 접근성 등 이점을 가진 인천 경자구역을 기업회의, 뷰티·엔터테인먼트 특화형 MICE 허브로 집중 육성

○ 국제비즈니스 환경, 인천공항·인천항 인접,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4개소 건립예정으로 외국 관광객 유입에 최적조건으로 평가

다. 추진과제

(투자 모델 1 : 기업회의 특화) 한국을 아시아 거점으로 하는 외투기업이 한국에서 기업회의를 개최하여 효과적 경영전략 수립 및 비용절감

□ **(인프라) 송도지역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

○ **(현황)** 송도지역이 기업회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컨벤션, 호텔, 쇼핑 등이 복합된 관광단지 구축이 필요

○ **(개선)** 인천 연수구 지역*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국제회의집적시설(송도 컨센시아 등)로 지정하여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감면,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

* 인천공항에 인접해 있으며 송도컨벤시아 쉐라톤 호텔, 송도몰, 인천대입구역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기업회의 특화에 적합

** 국제회의 복합지구 개요

(근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정) 복합지구 - 시도지사가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집적시설 - 문체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정
(혜택) 관광특구에 따른 예산지원 및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 감면, 용적률 완화 등

□ **(인센티브) 글로벌기업의 국내 기업회의 개최 지원**

○ **(현황)** 현행 현금지원제도는 지원범위*에 글로벌기업의 국내 기업회의 개최 관련 비용이 불포함

* 공장시설R&D시설 토지건물의 매입비임대료, 건축비, 자본재연구기자재 구입비, 전기통신·기반시설 설치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 **(개선)** 현금지원범위에 국내에서 개최하는 외투기업의 국제기업회의도 포함하여 국내 기업회의 개최를 활성화

□ **(인센티브) 글로벌기업에 대한 전략적 홍보 프로그램 운영**

○ **(현황)** 현재 MICE 홍보는 공공분야 국제회의 중심으로 기업회의 분야는 미약

○ **(개선)** 홍보대사 임명 등을 통해 국내외 외투기업 기업회의 담당자 홍보 추진

- **(홍보대사)** 국가별 주요 글로벌기업 CEO · 임원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유치 관련 자문 및 컨설팅 등을 지원

- **(국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회의기획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미팅 등을 통해 N/W를 구축하고

- **(해외)** 외투기업의 본사, 기타 글로벌기업의 회의기획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홍보 레터 송부, 초청 행사, 관련시설 견학 등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 (인센티브) 체계적 전문인력 육성

○ **(현황)** 현재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기업회의 맞춤형 프로그램은 미약

* 기업회의는 해당 산업분야에 전문지식과 함께 해당 기업특성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

○ **(개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제회의 전문인력 교육인턴십 프로그램을 기업회의 관련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확대

<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주요 교육·인턴십 프로그램(예시)>

구분	교육명	시행 기관	대상	내용
기존	한국MICE 아카데미	MICE협회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에 필요한 실무 소양교육
	MICE고급자 아카데미	MICE협회	경력 3년 이상 업계 실무자	컨벤션 마케팅, 경영 기법, 선진노하우 등
	통합 OJT(On the Job Training)	MICE협회	중소규모 업체 신입직원	국제회의 핵심분야 현장 실습
신설	글로벌기업회의 아카데미	MICE협회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경력단절여성 등	글로벌기업회의 실무 소양교육

(투자 모델 2 : 뷰티·엔터테인먼트 연계) 뷰티 관련 외투기업이 한국에서 전시인센티브 관광 상품개발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엔터테인먼트와 연계를 통해 MICE 개최 만족도 제고

□ (인프라) 뷰티·엔터테인먼트 클러스터 구축

○ **(현황)** 뷰티 분야 외투기업이 한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상품전시, 카지노, 한류공연 등 엔터테인먼트를 융합한 효과적 마케팅을 위해서는 관련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

○ **(추진방향)** 카지노 등 복합레저시설 구축이 예정된 미단시티를 중심으로 뷰티산업 관련 전시장 및 공연장 등 인프라를 동시 구축

- 아울러 송도 연수구의 국제회의 복합지구와 shuttle 버스, 운행 등을 통해 연계를 함으로서 시너지 효과 도모

□ 플래그쉽 산업관광 프로그램 개발

○ **(현황)** 뷰티분야 외투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인센티브 관광객 확대 및 관련 관광 프로그램 필요

-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플래그쉽 산업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성공적 운영지원을 통해 관련 관광산업이 발전하는 전략이 필요

* 독일의 경우 자동차 전시장, 생산라인 견학, 프랑스의 경우 와이너리 견학 등이 대표적

○ **(개선)** 글로벌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을 활용한 플래그쉽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지원시설 투자를 지원

- **(프로그램)** 국내 뷰티분야 대기업(아모레퍼시픽 등)과 협력을 통해 산업시찰 + 상품체험·전시가 결합된 산업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 **(휴양시설)** 산업단지내 시찰형 산업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관련 시설에 인접하여 휴양·위락시설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산집법상 복합시설로 전환이 용이하게 되도록 적극 지원

* (예) 자동차 전시장을 둘러보거나 순서를 기다리는 관광객들을 위한 기념품점, 식당, 카페, 오락실 등을 운영

□ **(기타) 전시·엔터테인먼트 연계형 대형 행사(뷰티 페어) 개최**

○ **(현황)** 뷰티 관련 외투기업이 한류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상품 광고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한류와 연계한 홍보기회의 제공이 필요

○ **(추진방향)** 글로벌 이미지를 구축한 국내 상품전시회와 한류 공연등이 연계한 대형 행사 개최를 통해 아시아 지역 대표적 뷰티산업 관련 행사로 육성하고

- 뷰티산업 분야 외투기업이 상품 전시회에 적극 참여를 지원함으로서 한류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제도개선) 복합리조트 관련 법령 체계 정비**

○ **(현황)** 복합리조트 관련 법령이 관광법, 공연법, 숙박시설법 등으로 산재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

* 관광시설 일반 - 관광진흥법, 공연장 - 공연법, 호텔 - 관광숙박시설 진흥을 위한 특별법 등

- 특히 관광진흥법은 관련규정이 간소하여 복합리조트업의 대형화 산업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

* 주요 국가 복합리조트 관련 법률 현황 : 미국(Casino Control Act) 및 싱가포르각 200여개 조항 / 한국(관광진흥법) 16개 조항

○ **(개선)** 복합리조트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복합리조트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체계를 단일화하고 효과적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10. R&D

가. 현황

□ 대표적 해외 R&D 허브 현황

○ **(美 실리콘밸리)** 연중 고온건조한 날씨, 스탠퍼드·버클리와 우수한 인재 공급, 벤처 캐피탈 등 최고의 창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자생적 발달

- 미서부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실리콘 밸리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혁신의 상징이자 혁신클러스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지역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첨단산업 중심지

- 주요 성공요인으로 혁신에 가치를 두고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정신, 유능한 엔지니어와 사업가들, 모험 자본 투자자(Venture Capital), UC 버클리, 스탠포드 등 세계 유수의 대학, 좋은 날씨와 주변 자연환경 등이 지적

○ **(中 중관촌)** 북경대, 칭화대의 우수 인재 공급, 대규모 수요시장, 글로벌 기술시업의 투자확대 등으로 성장세 지속

- 중국 최초의 첨단기술개발구로서 MS, IBM, 모토롤라, Intel 등 65여개 다국적 기업의 R&D 센터가 입주해 있으며,

- 청화대, 북경대, 인민대, 북경이공대학교 등 61여개의 대학과 중국과학원 산하 연구소 40개 등, 북경시 전체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47%가 밀집

- '88년 이후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북경시 전체 공업 생산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는 중국 정부의 클러스터 육성정책인 火炬計劃(Torch Program) 등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싱가포르 바이오폴리스)** 글로벌 국가이미지, 외국인 비차별적 인재정책, 입지지원 인센티브, 연구-임상-사업화의 全단계 지원인프라 등 장점

- 싱가포르 정부산하개발공사(Jurong Town Corporation: JTC)는 세계의 바이오 허브 구축을 목표로 2001년 12월 '창조적인 마인드가 24시간 만나는 곳'이라는 기치 아래, 원노스(One-North)라는 최첨단 정보화 클러스터 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며,

- 특히, 바이오·메디컬 도시인 바이오폴리스는 약 18만 5천㎡의 부지에 바이오기술을 위한 공공연구소, 민간 바이오 기업, 병원 및 서비스기업들을 연계 유치하기 위한 첨단 BT 연구단지임.

- 현재 노바티스(Novartis)나 글락소(GlaxoSmithKline)와 같은 세계적인 바이오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으며,

- 싱가포르의 바이오연구개발을 관장하는 싱가포르과학기술연구원(A*STAR) 산하 기관이 입주해있으며, 바이오메디컬연구소(BMRC)와 과학기술연구회(SERC)는 각 7개의 산하 연구기관을 통하여 부분별 기초 R&D를 주관

- 바이오폴리스가 바이오·메디컬 R&D 허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최신 시설과 특화된 서비스 외에도 실험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주는 바이오 인포머틱스(Bio-infomatics) 시스템과 완벽한 유비쿼터스 환경, 연구원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으로 평가
  - 연구시설뿐만 아니라 주거공간, 학교 등에도 무선인터넷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며, 주변기관과의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5개 건물로 둘러싸인 중앙공간에는 친수공간을 도입하여 근무자들이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

- 원노스의 생명과학분야 특화단지인 바이오폴리스에서는 세계적인 바이오 분야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토지임대 인센티브를 제시함
  - 원노스의 토지는 30년, 50년, 60년, 99년 임대방식으로 공급되는데, 노바티스의 경우 30년 토지 무상임대 조건으로 입주해 있으며, 30년 후 재임대 옵션을 가짐

- 생명과학분야 특화단지로서 바이오폴리스는 전원만 연결되면 바로 가동된다는 뜻의 '플러그 & 플레이(Plug & Play)' 정신으로 운영됨
  · 민간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기본설비와 실험용 동물자원 등이 지원되고 있어 입주와 동시에 실험이 가능하며, 실험용 동물의 관리는 싱가포르과학기술연구원이 담당
  · JTC와 EDB는 원노스 내에 EXCITE@one-north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들이 제품을 상품화하기 이전에 아이디어를 실사이즈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

- 바이오 및 R&D 특정분야 육성을 위해 최근 싱가포르 인력부(Ministry of Manpower) 산하의 유능한 해외 인재 유치팀 'Contact Singapore'를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inistry of Manpower) 산하기관인 EDB의 인력자원팀과 통합해 해외 유명과학자의 유치를 도모함

□ 대내외 환경변화와 시사점

(1) 대외 환경 변화

○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을 통한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

- 1990년대 이후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라 산업발전 패턴이 변화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혁신 과학기술의 창출과 효율적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좌우

* R&D의 경제성장 기여율('90~'04) : (韓) 30.4%, (美) 22.8%, (日) 67.3%

- 세계 각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및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 창출된 지식의 효율적인 확산·활용을 위하여 국가적·지역적 혁신역량을 결집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

* 주요 선진국은 대학의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베이-돌법('80, 美) 및 대학기술이전촉진법('98, 日) 제정, 지역사회로의 지식이전 정책 시행('97~, 英)

○ 개방형 혁신의 가속화에 따른 새로운 R&D 패러다임 부상

- 기술개발의 복잡성이 확장되고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폐쇄적인 기술혁신 시스템으로는 아이디어의 발굴과 선도적 R&D에 한계

- 혁신의 공간적 확산을 위하여 기존의 R&D 및 사업화 추진방식을 지역 간·국가 간을 아우르는 '개방형'으로 전환할 필요

○ 기술·산업 간 창조적 융·복합 트렌드 확산

- 국가 간·기업 간 경쟁격화, 기존 산업의 포화, 소비자 니즈 다변화 등의 대응책으로써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융·복합의 중요성 증대

* "지식정보화 사회가 진전될수록 칸막이 식 영역구분은 무의미..." (엘빈토플러)

* 애플社는 제품(휴대폰, 카메라, MP3 플레이어 등)과 서비스(전화, 인터넷, 음악 등) 간 다양한 융합이 집적된 'iPhone'을 통해 세계적인 스마트폰 열풍 주도

- 주요 선진국은 다양한 정책으로 융·복합 시대를 준비 중

* 인간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융합기술 정책('02년~, 미국), 유럽지식 사회를 위한 융합기술정책('04년~, 유럽), 신산업 창조전략('04년~, 일본)

- 가격경쟁력 우위의 개도국과 기술경쟁력 우위의 선진국 사이에 있는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융합 신산업을 창출·선점할 필요
  · 융합을 통해 발생하는 산업간 수평·수직적 통합과 영역 재창출로 새로운 제품과 산업을 출현시키고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2) 대내환경 변화

○ 창의성을 바탕으로 과학과 문화·산업이 융합되어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 글로벌 경제위기와 신흥 산업국가의 추격 등으로 성장의 한계를 내재한 대기업 주도의 성장 중심 추격형 경제에서 벗어나,

-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능력이 큰 벤처·중소기업과 상생·협력하고, 창의성과 혁신에 기반한 창조경제로의 전환 모색

○ 연구개발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의 기능적·공간적 연계를 통해 과학기술 성과가 지속적으로 비즈니스화 되는 성장 거점으로 조성

- 기초과학 중심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개발·응용연구 중심의 연구개발특구를 연계하여 국가과학기술 역량 확대·강화

○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 잠재성장률 저하 및 성장과 고용의 불균형은 여전히 국가적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

-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80년대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90년대 이후부터 점차 하락세를 지속

*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이(%) : ('80~'89) 7.9 → ('90~'97) 7.0 → ('98~'07) 4.5 → ('08~'09) 3.8

- 이는 노동·자본 등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효과가 감소하는 기간 동안 기술진보 등 생산성 향상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 또한 제조업 부문의 고용창출력 둔화로 '고용없는 성장' 심화

□ 한국의 R&D 환경

○ **(약점)** 협소한 내수시장, 영어소통 환경조성 미흡, 취약한 기초 R&D 역량, 개방적 R&D 인프라 부족 등 한계

○ **(강점)** 국내 대기업 수요, IP제도, 데스트 베드 시장으로서 가치, FTA 관련 글로벌 기업 투자확대 가능성 등의 강점 보유

- 글로벌 대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대기업의 GVC를 활용한 해외 기업의 고급 R&D 수요 견인이 가능(싱·홍 대비 강점)

-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환경 구축(中 대비 강점)

* 지재권 보호 수준은 일본, 싱가폴에 이어 아시아 3위 수준으로 평가

- 한국시장의 빠른 신기술 수용성과 높은 기대수준 등으로 인해 R&D를 통한 신제품 테스트 베드로서 높은 가치

- IT 등 일부 주력분야의 경우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연구인력 보유

- 한국을 거점으로 FTA를 활용한 글로벌기업의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R&D 수요도 증가 예상

나. 기본 방향

1) 중점추진 전략분야 및 유망 투자 모델

□ 중점추진 전략분야 : 제조·창업 혁신형 R&D 허브 추진

○ 한국을 거점으로 중국 등 글로벌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투기업의 R&D 수요를 활용한 제조업 혁신형 R&D 허브구축을 추진

○ 아울러 IT분야 기술력, 우수한 인력과 테스트베드 이점을 활용한 R&D 창업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R&D 허브 구축 시너지 효과 제고

□ 유망 투자 모델

① 글로벌기업이 한국에 투자하여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 → FTA 등을 활용한 매출규모 확대 → R&D 수요 증가 → R&D 센터 투자

○ 한국이 글로벌시장 공급거점으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외투기업이 효과적 경영전략 수립, 시장 대응 등을 위해 기업 핵심기능인 R&D 활동도 국내에서 수행

* 미 코닝의 경우 중국시장진출 수요 확대에 따라 시설투자 확대(9천억 규모)와 함께 원천기술 R&D센터 투자를 확대

② 해외 VC 등이 국내 기술 기업 창업 투자 → 국내 우수한 인력, 한국의 테스트베드 이점, R&D 지원제도 등 활용 → 투자수익 확보

③ 중국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수요 증가 → 국내 기술기업과 합작투자 및 한국내 우수한 R&D 인력 활용 수요 증가 → 한국 R&D센터 투자

○ 중국기업이 국내 R&D 센터 투자를 통해 국내 우수한 기술활용이 가능

2) 특화 육성 지역

□ **판교(IT+창업), 송도(바이오+교육), 부산(해양플랜트)**

○ R&D 인력, 연구·제조 인프라, 외국인 정주여건 등이 우수한 판교, 송도, 부산을 국제 R&D 클러스터로 육성

○ 지역별 배후산업, 산학연 생태계 현황을 고려하여 차별화

다. 추진과제

(투자 모델 1) 글로벌기업이 한국에 투자하여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 → FTA 등을 활용한 매출규모 확대 → R&D 수요 증가 → R&D 센터 투자

□ **(제도개선) 국내 R&D의 개방성 제고**

○ **(현황)** 국내 글로벌기업의 R&D 센터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R&D 사업에 대한 참여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국내 법인으로 등록된 외국 R&D 기관은 원칙적으로 국내 R&D 사업 참여가 가능하나 유·무형의 진입장벽 존재

* 산업기술 R&D 기업주관 과제 중 외국 R&D기관이 주관하는 과제 비중이 1.9%, 지원금액 비중이 1.7%에 불과 ('12-14년)

○ **(개선)** 외국 R&D 기관의 국내 R&D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

- **(사업신설)** 외국 R&D기관 전용트랙*을 단계적 확대하고, 해외 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의무화

* 산업부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 內 글로벌융합트랙 예산 확대
('14년 23억 → '15년 53억 → '16년 90억 이상)

- **(참여지원)** R&D 과제 공고·제안서, 장비활용 포털 (e-Tube) 등을 영문화하고, 주한외국기업 협회 등과 연계하여 영어로 R&D 사업 설명회 개최

- **(평가)** 외국 R&D기관 소속 연구인력이 국내 R&D 평가위원*, 기획 자문위원으로 적극 활동하도록 위원 중 최소 1명이상 포함

* 외국인 투자기업(외투비율 50%이상) 소속 평가위원을 현 58명에서 5배 이상 확대
(산업계 평가위원 중 외국인투자기업 소속 위원 비율 : '15년 1% → '17년 5%)

- **(공동 R&D)** 국제공동연구 전용사업*, 선진국 공동 R&D 프로그램 등 확대신설 등을 통해 국내외 기업기관의 R&D 참여 확대

* 산업부 R&D 예산 중 국제공동연구 전용사업은 2.4% 수준 (총 825억원): 산업기술 국제협력 ('15년 626억원), 에너지국제공동연구 ('15년 199억원)

□ **(제도개선) 우수인력 유치 기반 구축**

○ **(현황)** 글로벌기업이 국내에 핵심기술을 연구하는 R&D센터 설치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용이한 우수한 인력 획득이 필수

- 특히 해외 우수인재 확보가 필요하나 이를 유인할 적절한 인센티브와 고급인재의 수요에 맞는 정주여건은 미흡한 상황

○ **(추진방향)**

- **(우수인재 발굴)** 업종별 핵심인재 밀집 지역*에 **인재 유치사절단 파견**, 교포공학인, KOTRA 무역관, 등 네트워크 활용하여 **해외 인력-국내기관 매칭**

* SW (미국 실리콘밸리, 인도), 엔지니어링 (미국 휴스턴, 영국, 노르웨이) 등

- **(채용 지원)** 해외인재 채용시 인건비 보조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국내 산업계 수요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사업 추진

*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 ('15년 26억원 → '17년 100억원, 중기청), Korea Research Fellowship ('15년 25억원 → '17년 100억원, 미래부)

- **(정주환경)** 외국 R&D인력에 대한 비자 제도, 정주여건 등을 개선하여 **우수 외국 인력의 장기 정착을 유도**

〈정주환경 조성 주요내용〉

◆ **(비자)** 고급 R&D인력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영주비자 (F-5)를 즉시 부여받을 수 있도록 체류관리지침을 개정 (법무부)

* 현행 주재(D-7), 기업투자(D-8) 비자는 2~5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영주권과 관련된 별도의 비자 특례가 없음

◆ **(의료)** 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이용편의를 위해 의료통역사 양성* 및 주요 의료기관에 배치 확대 ('14년 60명 양성→'15년 90명 계획, 복지부)

*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주요국 언어 능통자를 대상으로 의료지원서비스 교육을 실시・의료 전문 통역사로 양성하여 국내 국제의료병원에 배치 및 활용

◆ **(교육)** 외국인학교 설립시 정부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부터 교사(校舍) 및 시설 임차를 허용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 현재는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학교 시설은 설립자가 직접 소유 또는 국가(또는 지자체)로부터의 임차만 가능하도록 규정

□ (인프라) 국제 R&D 클러스터의 조성

○ **(현황)** 글로벌 기업의 효과적인 R&D 수행과 한국의 R&D 허브로 도약을 위해서는 국내 R&D 인프라를 활용한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

○ **추진 방향**

〈판교(IT)〉

- **(입주공간)** 판교 제2 테크노밸리에 외국 R&D센터 전용 연구공간을 마련하고 (국토부) 글로벌 기업의 IT융합형 센터 유치

- **(창업생태계)** VC 등 투자기관 지원시설 구축, 창업 인큐베이터, 임대공간 제공 등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을 유인하고 글로벌 기업과 협업 촉진

* 세계적 SW 기업인 독일 SAP는 판교 밸리 인근에 Design Thinking Center를 설립하여 한국 SW 개발자, 유망 창업기업을 지원할 계획

- **(기업유치)** 판교의 우수한 IT기반, 혁신주체 등을 활용하여 IoT, 스마트제조 등 IT기술과 융합이 필요한 첨단 분야의 외국기관을 중점 유치

〈인천(바이오)〉

- **(인력공급)** 유치된 외국기관이 우수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송도 등 수도권 대학과 산학협력을 지원

* 채용연계형 산업인턴 사업 ('15년 30억원, 대학 3~4학년 학부생의 지역기업 인턴활동 지원) 추진시 외국기업은 입주지역에 무관하게 지원토록 개선

- **(사업화 지원)** 병원, 제조기반 등 관련 시설을 인근에 집적화하여 연구결과물이 빠르게 임상, 대형제조로 연계되도록 지원

〈부산(해양플랜트)〉

- **(인센티브)** 국내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외국 엔지니어링사에 **조선3사의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발주**

* 美 Worley Parsons는 부산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 엔지니어링 전문가 20여명 파견하여 국내 기관과 공동프로젝트 수주, 국내 설계인력 양성 등 추진예정

- **(인프라)** 외국 기관에 연구 인프라를 개방*하고 영국, 노르웨이 연구소, 전문인력 등과 기술교류활동을 강화

* 주요 장비 성능, 이용방법 등을 영문화, 장비이용시 통역 서비스 제공 등

(투자 모델 2) 해외 VC 등이 국내 기술 기업 창업 투자 → 국내 우수한 인력, 한국의 테스트베드 이점, R&D 지원제도 등 활용 → 투자수익 확보

□ **(제도개선) R&D 창업 생태계(자본유치-창업지원-인력확보) 구축**

○ **(현황)** 중국의 자본을 활용하여 국내 IT 등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자본력이 취약한 벤처기업 지원, 창업 지원을 통해 시너지 효과 가능

○ **(추진방향)** 미국·중국 등 글로벌 자본 및 글로벌 창업보육 센터 유치, 국내 외국인 창업지원을 추진

- **(해외 자본 유치)** 미국·중국 등의 글로벌 VC, 창업자본 등을 국내에 적극 유치하여 한국 내 **글로벌 창업 활성화**

◆ **(글로벌 VC)** 전세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실리콘밸리 VC, 일본 VC 등 선진국 벤처투자 자본 국내 유치

◆ **(중국자본)** 한중 FTA, 韓流 등으로 최근 한국 투자에 관심이 많은 중국자본 유치를 통해 중국 시장 진출과 연계한 창업 촉진

◆ **(한국형 요즈마 펀드)** 국내 공공기관과 해외 VC간 공동펀드조성 확대

- **(창업성장 지원)** 글로벌 기업·투자기관의 **창업보육센터를 적극 유치**하여 선진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스타트업 지원**

◆**(인큐베이팅)** 최근 글로벌 기업의 한국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창업보육으로 연계하여 투자유치, BM개발, 해외진출 등을 지원

◆**(해외진출)** 글로벌 투자기관의 해외 네트워크와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 전용펀드를 활용*하여 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지원

- **(외국인 창업)** 혁신적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외국인 창업 지원** 강화

◆ **(창업지원)**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창업하고 제3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창업이민센터, 창업휴학제 등 지원 강화

◆ **(송도)** 외국 공대, 연세대 국제캠퍼스, 외국 바이오 기업 등이 밀집된 송도지역을 글로벌 창업허브로 육성

(투자 모델 3) 중국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수요 증가
→ 국내 기술기업과 합작투자 및 한국내 우수한 R&D 인력 활용 수요 증가
→ 한국 R&D센터 투자

□ **(제도개선) 중국 등 아시아기업과 기술협력기반 마련**

○ **(현황)** 중국기업의 국내 R&D 센터 투자확대에 따라 중국기업의 협력 R&D 수요가 증가 예상

- 그러나 중국 등 아시아 지역국가와 협력 R&D 프로그램은 취약

○ **(추진방향)** 중국 등 아시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N/W 구축 추진

- **(R&D 프로그램)** 유럽 다자간 기술협력 프로그램인 EUREKA*를 벤치마킹, **아시아 중심의 ATI(Asia Technology Initiative) 결성 추진**

* 41개 국가가 참여하는 '범유럽 공동 R&D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민간에서 기획한 공동 R&D 과제를 참여기관 해당 정부가 승인하는 형태로 추진

〈ATI 주요 개념〉

○ 아시아 R&D기관간 **공동 기술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각국 정부가선별적으로 과제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우선 **1단계**로 한·중·일 3국 공통현안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동북아 기후변화 대응 기술 파트너쉽**」 구축 추진
- **중장기**적으로 **ASEAN, EAS (동아시아정상회의) 등 정상회의** 계기에 의제화하여 참여국 확대

○ 한-중-일 협력사무국* (국제기구, 서울) 내에 ATI 운영조직을 신설
* 한-중-일 3국 외교부에서 3국 공동번영을 비전으로 설립한 국제기구로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3국간 협력을 지원하고 촉진

- **(N/W)** 주한 외국 R&D기관이 국내 우수한 혁신기관과 협업할 수 있도록 **외국 기관에 대한 홍보강화 및 교류기회 확대 추진**

* 외국기관 R&D 활동 조사를 정례화하여 주요 R&D 정책에 반영하고, 외투 R&D 포럼을 개최하여 기관간 상호 교류 활성화

11. 오일 허브

가. 현황

□ 주요 오일허브 거래소 현황

○ **(미 걸프만)** 세계최대 오일 허브 거래소 NYMEX, 세계최대 석유소비국이자 주요 석유생산국으로서 미국시장 등을 바탕으로 발전

* 1위: 미국(19.8%), 2위: 중국(11.7%), 3위: 일본(5.3%), 4위: 인도(4.2%), 5위: 러시아(3.6%)

○ **(ARA*)** 18세기부터 유럽 석유공급기지로 발달, 다국어 구사역량, 친기업적 제도 환경, 관세 자유지역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발전

*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안트워프

○ **(싱가포르)** 아시아의 대표적인 거래소인 SGX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롱섬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조성, 확기적 규제완화, 금융역량 활용 등을 통해 성장

□ 금융허브로서 한국의 비교 우위

○ **(약점)** 금융 인프라(오일 파생상품, 관련 거래소 등) 미약, 오일 저장시설 용량 미흡, 관련 외국 전문인력 정주여건 등이 미흡

○ **(강점)** 입지·자연환경, 운임, 정제비용 등에서 강점을 보유

- **(입지·자연환경)** 중국은 많은 안개일수, 낮은 수심, 발해만 결빙 등이, 일본은 태풍, 지진 등 잦은 재해와 높은 물류비용 등이 약점

* 대련, 닝보 등 VLCC 입항이 가능한 중국 항구는 간조시 입항 제한, 대다수 액체류 저장시설의 국영석유회사 전용 사용으로 상업용 저장시설은 미비

- **(운임)** 중동(오만)으로부터 수송거리가 비슷한 동북아 3국의 주요원유 수입항까지 VLCC 운임 및 항비는 한국이 가장 저렴

구 분	여수(한국)	청도(중국)	기이레(일본)
운임($/B)	1.37	1.38	1.43
수송거리(mile)	5,599	5,539	5,605

- **(정제비, 잉여정제력)** 규모의 경제효과로 가격경쟁력 확보, 약 50만B/D의 잉여정제력으로 중국, 일본에 비해 제품 수출에 여력('05년 기준)

* 중국은 내수 부족으로 정제능력 확충에 주력하고 있으며, 일본은 잉여정제물량 수출이 필요하나 고가의 항만 물류비 해결 과제

나. 기본방향

1) 중점추진 전략분야 및 유망 투자 모델

□ **중점추진 전략분야 : 동북아 지역 오일 허브**

○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지역 석유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세계 석유시장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재편중

○ 동북아 석유시장 급성장으로 싱가포르가 동서남아 지역 오일 허브로 위상이 변화되고 있어 동북아 지역 허브로서 새로운 기회가 창출

⇒ 동북아 지역을 타겟으로 한 오일 허브전략을 통해 성공가능성 제고

□ **유망 투자 모델**

① **(저장시설·물류)** 한국 입지 강점 등을 통한 석유물동량 증가 → 해외 물류기업이 석유 저장시설 및 국내 항만, 입·출하시설, 선박 등에 투자 → 오일 관련 물류 서비스를 통해 수익 창출

○ 해외물류기업이 국내 물류 서비스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국내 석유 물동량 확대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물류 수익 향유 가능

② **(트레이드·금융)** 한국 입지 강점 등을 통한 석유물동량 증가 → 오일 관련 트레이드·금융 수요 증가 → 글로벌 트레이더·금융기관 한국에 투자 → 트레이드·금융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익창출

○ 해외 오일 관련 트레이드·금융기관 등이 국내투자를 통해 석유물동량 증가에 따라 파생되는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창출 가능

2) 특화 육성 지역 : 울산·여수

□ 석유화학 산업기반과 정제시설 등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석유 관련 물동량이 많은 울산과 여수를 동북아 오일 허브로 특화 육성

* 여수의 경우 원유 350만 배럴, 석유제품 470만 배럴 등 총 820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터미널을 보유

* 울산항 액체화물 처리량은 15,400만톤('13년)으로 세계4위(국내 1위) 수준

다. 추진과제

(투자 모델 1) 한국 입지 강점 등을 통한 석유물동량 증가 → 해외 물류기업이 석유 저장시설 및 국내 항만, 입·출하시설, 선박 등에 투자 → 오일 관련 물류 서비스를 통해 수익 창출

□ (규제개선) 화주의 자유로운 운송수단 선택 확대

○ **(현황)** 석유제품 운송에는 5만톤급 이상 대형선박이 필요하나 해운법, 관세법 등을 통해 국내항간 선박 운행을 규제

○ **(개선)** 해운법상 내항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 허가신청기간을 단축하여 트레이더의 원활한 화물수송 지원(해수부 고시, '14.6월)

- 중장기적으로는 정유사와 탱크터미널, 탱크터미널과 탱크터미널간 파이프라인 연결 추진

□ (규제개선) 원유 반출입 관련 과세/환급체계 개선

○ **(현황)** 외투기업이 투자한 물류터미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과세체계 구축이 필요하나

- 현재 유류 가공수출 관련하여 관세 및 유류세를 납부하고 환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석유 트레이더가 부담해야하는 상황

* (관세) 원유 수입시 부과되어 국내 정제가공후 보세구역 진입시 환급되고 (유류세) 정제가공후 부과되어 보세구역을 지나 수출용 선박 선적시 환급

○ **(개선)** 관세 과세보류를 통해 세금 납부·환급 절차가 필요 없도록 정유시설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관세청/산업부, ~15년)

- 보세공장 전환에 따라 정유사의 행정비용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등을 통해 업체 자율성* 최대 보장

* 보세공장은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원재료 등 물품의 반출입, 사용, 처분에 대해 전산신고·관리하고 세관은 재고조사를 통한 사후 적정성 확인

□ **(규제개선) 석유류 블랜딩 등 부가가치 활동 허용 확대**

○ **(현황)** 외투기업이 저장시설 투자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 목적 석유제품에 대한 자유로운 색상보정, 블렌딩 등부가가치 활동 허용이 필요

- 그러나 수출용의 경우도 제품의 블렌딩방식은 여전히 규제

* 현재는 최종 제품의 품질기준뿐만 아니라 석유/석유화학제품/첨가제 등의 혼합/첨가 방식까지 규제

○ **(개선)** 정제시설의 보세공장 지정 및 탱크터미널 밀집지역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통해 자유로운 블랜딩 허용

□ **(규제개선) 탱크 보관 석유제품의 유종수량 변경 간소화**

○ **(현황)**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탱크에 보관중인 석유제품의 유종·수량 변경시 7일전에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승인을 의무화

- 위험도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석유제품에 대해 신고가 의무화됨

○ **(개선)** 저장탱크에 보관중인 유종·수량 변경시 신고·승인 규제를 고위험도 유종으로 변경시에만 적용(소방방재청 고시, '14.12월)

□ **(인프라) 상업용 저장시설 확보**

○ **(현황)** 물류 외투기업이 국내 투자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중심으로 한 석유 물동량 증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상업용 오일 저장시설 확보가 전제조건이나 현재 충분한 시설 확보가 미흡

○ **(추진방향)** 글로벌 오일물류터미널 기업을 포함한 1.5조원 투자를 통해 '20년까지 연간 4억B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탱크터미널(총 36.6백만B)을 건설**

* 한·중·일 3개국 총 석유소비량 16.4백만B/D의 6.7% 수준

(투자 모델 2) 한국 입지 강점 등을 통한 석유물동량 증가 → 오일 관련 트레이드·금융 수요 증가 → 글로벌 트레이더·금융기관 한국에 투자 → 트레이드·금융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익 창출

□ **(규제개선) 국가석유비축자산을 활용한 석유트레이딩 활성화**

○ **(현황)** 비축유 활용범위 제한*으로 비축자산의 트레이딩활용 제약

* 「비축유및비축시설운용기준」: 트레이딩과 대여는 총비축물량의 각 15% 이내 (통상 트레이딩 실적은 15% 수준, 대여 실적은 3~5% 수준)

○ **(개선)** 비축유의 트레이딩과 대여 활용범위를 "총 비축물량의 각각 15% 이내에서 30% 이내로 통합"하여 석유시황에 따른 탄력적 운용

- 비축시설 대여 요건에 **"국내기업의 해외생산 원유, 석유제품의 국내 도입"**도 추가하여 비축시설 대여 활용범위도 확대

* 현재 총 해외 업체를 대상으로 4,000만배럴 규모 저장시설을 국제공동비축에 활용중

□ **(규제개선) 석유트레이더 법적지위 마련**

○ **(현황)** 석유트레이더가 국내에 진출시 국내 법인설립과 저장시설 요건(최소 5천KL이상)을 구비하여 석유 수출입업 등록 필요

- 트레이더는 법인설립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도 법정요건을 구비한 수출입업 등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개선)** 국내 법인설립을 희망하는 트레이더를 위해 정제업, 수출입업, 판매업 등 석대법상 3가지 업태 외에 트레이더에 적합한 업역 신설('14.12월)

□ **(인센티브) 트레이더 등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 **(현황)** 글로벌 트레이더의 유치를 위해서는 교육·주거 등 정주요건 정비 외에 국내 법인설립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필수적

* 싱가포르의 경우 연간 1억USD이상 거래, 싱가포르내 기업지출규모 3백만SGD 이상, 3명이상 트레이더 고용시 10% 법인세율 적용(통상 법인세율은 17%)

○ **(개선)** 해외 트레이더들의 국내 유치를 위해, 국내법인 설립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검토(산업부/기재부, '14.12월)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기재부고시)'중 '산업지원서비스업에 '석유류트레이딩업'(매매계약 등 단순 중개업 제외)을 추가방안 검토

□ **(인프라) 트레이딩 전문인력 양성**

○ **(현황)** 동북아 석유물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수의 트레이더가 필요하나 싱가포르 트레이너의 역내 이전에는 한계

- 현재 국내 트레이딩 전문과정은 거의 없는 상황이며, 정유사나 소규모 수출입업자가 필요 인력을 자체적으로 육성하는 상황

* 현재 전문과정으로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의 오일트레이더 과정이 유일

○ **(추진방향)** 글로벌 상품트레이딩(가칭) 전문과정을 마련하고 자격증 부여 등을 통해 트레이딩 전문인력 양성(산업부/교육부, '14년~)

- 과정에 대한 지원자/기업들의 관심 제고를 위해 해당과정 이수자들에게 국가자격증 부여 및 공공부문 조달 등 참여

□ (제도개선) 석유거래 관련 제도 정비

○ **(현황)** 글로벌 트레이더들은 일반적으로 거래물품을 담보로 하는 은행대출과 신용공여시스템을 통해 사업을 하고 있으나 국내 금융기관의 관련 서비스는 거의 없는 상황

○ **(추진방향)** 석유화학제품 등을 대상으로 한 동산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위해 은행권과의 협력 및 관련 제도의 정비 추진

□ (인프라) 역내 금융인프라 확대

○ **(현황)** 오일 허브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파생상품 개발과 함께 가격평가기관, 청산소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나 국내 여건은 미비

○ **(개선)** 저장시설 구축, 제도개선 등과 병행하여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를 위한 가격평가, 청산·거래소 등 인프라의 적기 조성

- Platts, Argus 등 해외 주요 가격평가기관 유치 추진('15년~)

- 장외 파생상품거래의 청산을 담당할 국내청산소 육성(금융위, '16년~)

- 장외거래 활성화 정도를 감안하여 파생상품 상장 추진(금융위, '16년~)

12. 의료관광

가. 현 황

□ 해외 사례: 싱가포르

○ 싱가포르의 의료관광산업이 발전하기까지는 전 세계적인 시장구조 변화가 그 배경으로 작용

-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선진국이 당면한 의료서비스 관련 불만사항이 추진요소(Push factor)로서 작용

- 아시아 신흥국 측에서의 추진요소를 살펴보면, 이들 국가의 경제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부유층 및 중산층이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서 싱가포르 의료관광의 수요가 발생

- 유인요소(Pull Factor)로서는 의료기술과 서비스 수준이 선진화됨과 동시에 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 특히 IT 발전으로 인해 해외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졌으며, 항공 등 이동수단의 발전이라는 요인도 존재

○ 아시아의 주요 의료관광국으로 성장한 싱가포르는 의료서비스의 성장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가능

- 이미 2000년에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최고 의료시스템 보유국가로 발표했으며, 전 세계 191개국 중에서는 6번째라고 발표

- 국제경영개발연구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은 2010년 세계경쟁력보고서(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를 통해 의료기반시설부문에서 싱가포르가 55개국 중 3위를 차지했다고 발표

- 이와 같이 싱가포르는 표준화된 서비스와 수준 높은 의료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싱가포르 관광청은 의료관광을 싱가포르 관광의 신성장동력으로 간주하고 부처 내에 별도로 'Health Care'부서를 마련하는 등 의료관광 부문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 또한, 싱가포르를 아시아 의료허브로 성장시키고자 매우 체계적인 방식으로 중장기에 걸쳐 산업육성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7대 정책분야를 선정

- 7대 정책은 마케팅, 의료규범, 인적자원, 커뮤니케이션, 전문지식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사항이 마련되어 있어 보다 종합적으로 산업육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음.

- 특히 싱가포르 고유의 의료브랜드 육성에 관한 부분은 매우 주목해볼 만한 정책

□ 국내산업 현황

○ **(개요)** 국내 의료관광 산업은 분야의 지속적 확대와 함께 관광객 수 기준으로 빠른 성장세 시현 중

- 의료관광은 치료 및 건강회복, 질병예방, 건강증진, 미용 등 행복한 삶의 증진을 위한 웰니스 및 관광·쇼핑 영역까지 확대

- '13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은 총 211,218명(전년대비 32.5% 증가)이며, 2009년 이래 60,201('09)~211,218('13) 연평균 36.9% 증가하고 있음.
  - 입원진료를 받았던 외국인환자는 20,137명(9.5%)으로 '09년 이후 연평균 50.6% 증가세를 보임.
  - 건강검진 환자의 비중은 매년 감소세로 건강검진 이후 외래 및 입원진료로 이어지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음

<표 4-6> (2009-2013) 진료유형별 외국인(실)환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실환자	비중	실환자	비중	실환자	비중	실환자	비중	실환자	비중		
입원	**3,915**	**6.5**	**7,987**	**9.8**	**11,945**	**9.8**	**14,809**	**9.3**	**20,137**	**9.5**	**36.0**	**50.6**
외래	56,286	93.5	63,891	78.1	95,810	78.3	128,711	80.7	172,702	81.8	34.2	39.3
건강검진			9,911	12.1	14,542	11.9	15,944	10.0	18,379	8.7	15.3	22.9
계	**60,201**	100	**81,789**	100	**122,297**	100	**159,464**	100	**211,218**	100	32.5	36.9

* '09년은 외래와 건강검진 구분 없이 조사되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0-'13년(4년간)에 해당됨

○ **(국적별 현황)** '13년 러시아 환자가 2만4천명으로 일본을 제치고 최초 3위로 부상

- '12년 환자유치 1위 국적인 중국은 2위인 미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13년에도 1위 유지

* '13년 방한 외래관광객 중 중국 관광객은 30.7%이며, 전년대비 52.5% 증가하였고, 일본 관광객은 전년대비 21.9% 감소하였음. 또한, 러시아 관광객은 175,360명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하였음(문화체육관광부)

- 정부 간 환자송출 협약의 성과로 아랍에미리트 환자는 전년대비 236.5% 증가한 1,151명이 유치되었으며, 이들의 총 진료비는 204억원으로 전년(43억원)대비 374.4% 증가

- 또한, 카자흐스탄(118.0%), 몽골(94.0%), 우즈베키스탄(86.2%) 등 G2G 협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전략국가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한편, 미·중·일 편중 현상이 계속 완화(73.9%→68.6%→68.1%→61.5%→50.0%)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의 다양화·내실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표 4-7> (2009-2013) 주요 국적별 외국인환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연평균
	실환자	비중	실환자	비중	실환자	비중	실환자	비중	실환자	비중	증가율	증가율
중국(1위)	4,725	7.8	12,789	15.6	19,222	15.7	32,503	20.4	56,075	26.5	72.5	85.6
미국(2위)	13,976	23.2	21,338	26.1	27,529	22.5	30,582	19.2	32,750	15.5	7.1	23.7
러시아(3위)	1,758	2.9	5,098	6.2	9,651	7.9	16,438	10.3	24,026	11.4	46.2	92.3
일본(4위)	12,997	21.6	11,035	13.5	22,491	18.4	19,744	12.4	16,849	8.0	△14.7	6.7
몽골(5위)	850	1.4	1,860	2.3	3,266	2.7	8,407	5.3	12,034	5.7	43.1	94.0
베트남(6위)	327	0.5	921	1.1	1,336	1.1	2,231	1.4	2,988	1.4	33.9	73.9
카자흐스탄(7위)	128	0.2	346	0.4	732	0.6	1,633	1	2,890	1.4	77.0	118.0
우즈베키스탄(12위)	113	0.2	298	0.4	491	0.4	824	0.5	1,358	0.6	64.8	86.2
사우디아라비아(13위)	218	0.4	380	0.5	920	0.8	1,082	0.7	1,294	0.6	19.6	56.1
아랍에미리트(16위)	17	0	54	0.1	158	0.1	342	0.2	1,151	0.5	236.5	186.9
인도네시아(18위)	183	0.3	283	0.3	424	0.3	689	0.4	1,067	0.5	54.9	55.4

○ **(진료과별 현황)** 내과, 검진센터, 피부과, 성형외과 등의 비중이 높으며, 일반 외과 외국인 환자는 전년대비 56.7% 증가하여 7위로 상위 10개 진료과내로 진입

- 검진센터 이용 외국인환자는 전년대비 17.7% 증가에 그치면서 환자 비중은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11년 이후 한방분야 이용 외국인환자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안과를 이용한 외국인환자 비중도 감소 추세임

* (한방) '09년 2.9% → '10년 4.1% → '11년 6.3% → '12년 4.6% → '13년 3.4%

** (안과) '09년 3.0% → '10년 4.4% → '11년 3.8% → '12년 3.8% → '13년 3.4%

- 올해 3위로 오른 러시아 환자의 주요 진료과는 내과(28.4%)>검진센터(17.0%)>산부인과(7.2%)>일반외과(5.5%)>피부과(4.8%) 순임
  - 내과를 이용한 러시아 환자(12,878명)의 주요 질환은 소화계통질환(21.7%)>내분비대사질환(14.3%)>순환계통질환(12.9%)>암(12.2%) 순임

<표 4-8> (2009-2013) 진료과별 외국인환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실환자	비중	실환자	비중	실환자	비중	실환자	비중	실환자	비중		
내과통합	18,398	28.5	23,632	23.3	34,330	22.2	45,994	22.2	68,453	24.4	48.8	38.9
검진센터	8,980	13.9	13,272	13.1	19,894	12.9	23,898	11.5	28,135	10.0	17.7	33.0
피부과	6,015	9.3	9,579	9.4	12,978	8.4	17,224	8.3	25,101	9.0	45.7	42.9
성형외과	2,851	4.4	4,708	4.6	10,387	6.7	15,898	7.7	24,075	8.6	51.4	70.5
산부인과	3,965	6.2	5,656	5.6	7,568	4.9	10,905	5.3	15,899	5.7	45.8	41.5
정형외과	3,196	5.0	4,975	4.9	6,876	4.4	9,643	4.7	14,597	5.2	51.4	46.2
일반외과	1,903	3.0	2,793	2.7	4,304	2.8	6,530	3.2	10,232	3.7	56.7	52.3
이비인후과	2,484	3.9	3,549	3.5	5,080	3.3	7,313	3.5	10,069	3.6	37.7	41.9
안과	1,921	3.0	4,507	4.4	5,821	3.8	7,933	3.8	9,421	3.4	18.8	48.8
치과	2,032	3.2	3,828	3.8	5,220	3.4	7,001	3.4	8,878	3.2	26.8	44.6
비뇨기과	1,760	2.7	2,629	2.6	4,027	2.6	5,616	2.7	7,906	2.8	40.8	45.6
신경외과	1,674	2.6	2,177	2.1	3,053	2.0	5,144	2.5	7,897	2.8	53.5	47.4
한방통합	1,897	2.9	4,191	4.1	9,793	6.3	9,464	4.6	9,554	3.4	1.0	49.8
그외진료과	7,388	11.5	16,096	15.8	25,485	16.5	34,496	16.7	40,092	14.3	16.2	52.6
계	64,464	100	101,592	100	154,816	100	207,059	100	280,309	100	35.4	44.4

* 진료과별 실환자 : 1명의 환자가 복수의 진료과를 방문한 경우, 방문한 진료과별 1명으로 표기

** 내과통합 : 내과, 감염내과, 일반내과, 감염내과, 내분비대사내과, 류마티스내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신장내과, 알레르기내과, 혈액종양내과, 호흡기내과, 가정의학과(11개 진료과)

*** 한방통합 : 한의과, 한방내과, 사상체질의학과, 한방부인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피부과,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소아과, 한방이비인후과, 한방안과(11개 진료과)

○ **(지역별 현황)** 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역별로는 서울(63.2%)>경기(12.2%)>부산(5.2%)>인천(4.9%)>대구(3.5%) 순임

- 강원(95.3%), 충남(71.2%), 제주(68.5%), 충북(65.6%), 인천(63.8%)의 전년대비 증가율 두드러짐

- 반면, 대구(4.5%→3.5%, △1.0%), 대전(3.4%→2.6%, △0.8%), 부산(5.8%→5.2%, △0.6%)의 외국인환자 비중은 전년대비 0.5%p 이상 감소

<표 4-9> (2009-2013) 지역별 외국인환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실환자	비중	실환자	비중	실환자	비중	실환자	비중	실환자	비중		
서울특별시	36,896	61.3	50,490	61.7	77,858	63.7	99,422	62.3	133,428	63.2	34.2	37.9
경기도	11,563	19.2	10,913	13.3	17,092	14.0	19,347	12.1	25,673	12.2	32.7	22.1
부산광역시	2,419	4.0	4,106	5.0	6,704	5.5	9,177	5.8	11,022	5.2	20.1	46.1
인천광역시	4,400	7.3	2,898	3.5	4,004	3.3	6,370	4.0	10,432	4.9	63.8	24.1
대구광역시	2,816	4.7	4,493	5.5	5,494	4.5	7,117	4.5	7,298	3.5	2.5	26.9
대전광역시	169	0.3	1,693	2.1	1,963	1.6	5,371	3.4	5,476	2.6	2.0	138.6
제주특별자치도	223	0.4	720	0.9	740	0.6	1,752	1.1	2,952	1.4	68.5	90.7
충청남도	5	0.0	997	1.2	1,367	1.1	1,715	1.1	2,936	1.4	71.2	392.3
강원도	279	0.5	567	0.7	1,349	1.1	1,498	0.9	2,925	1.4	95.3	79.9
전라북도	695	1.2	1,909	2.3	2,104	1.7	2,194	1.4	2,228	1.1	1.5	33.8
광주광역시	274	0.5	989	1.2	1,118	0.9	1,648	1.0	1,900	0.9	15.3	62.3
경상북도	126	0.2	407	0.5	517	0.4	1,066	0.7	1,561	0.7	46.4	87.6
울산광역시	43	0.1	614	0.8	782	0.6	925	0.6	1,086	0.5	17.4	124.2
충청북도	95	0.2	303	0.4	386	0.3	491	0.3	813	0.4	65.6	71.0
경상남도	122	0.2	354	0.4	556	0.5	646	0.4	749	0.4	15.9	57.4
전라남도	76	0.1	336	0.4	263	0.2	725	0.5	739	0.4	1.9	76.6
계	60,201	100	81,789	100	122,297	100	159,464	100	211,218	100	32.5	36.9

○ (진료비)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와 함께, 1억원 이상 고액환자는 또한 증가추세를 보임.

- 2013년 현재 1인당 평균진료비는 186만원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하였으며,

- 입원환자(20,137명)와 중증상병 외래환자(7,313명)을 합한 중증환자는 27,450명으로 전체 환자의 13.0%

· 중증환자의 진료수입은 1,986억원으로 총 진료비의 50.5% 차지

· 중증환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는 723만원('12년 728만원)으로 비중증환자 평균진료비(106만원)의 6.8배에 달함

* 중증환자 비중 : '11년 12.1% → '12년 12.3% → '13년 13.0%

** 중증환자 진료수입 : '11년 691억원 → '12년 1,430억원 → '13년 1,986억원

*** 중증상병 : 건강보험공단의 중증진료로 분류되는 암, 심장, 뇌혈관질환 및 중증화상

· 중증환자의 국적은 중국(5,863명, 21.4%)>러시아(5,037명, 18.4%)>미국(4,923명, 17.9%)>몽골(2,439명, 8.9%)>일본(1,132명, 4.1%) 순이며, 국적내 중증환자 비율은 아랍에미리트(26.8%)>카자흐스탄(22.9%)>러시아(21.0%)>몽골(20.3%)>우즈베키스탄(18.8%) 순임

- 1억원 이상 고액환자는 117명으로 전년대비 42.7% 증가하였으며, 100만원 이상 지출한 환자는 33.9%로 매년 꾸준히 증가

* '09년 18.4% → '10년 26.3% → '11년 26.9% → '12년 31.0% → '13년 33.9%

<표 4-10> (2009-2013) 진료비 구간별 외국인환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실환자	비중	실환자	비중	실환자	비중	실환자	비중	실환자	비중		
1억원 이상	10	0.02	21	0.03	27	0.02	82	0.1	117	0.1	42.7	84.9
5천-1억원미만	29	0.05	77	0.10	122	0.10	232	0.2	273	0.1	17.7	75.2
1천-5천만원미만	777	1.34	1,634	2.08	4,862	4.02	4,473	2.8	6,190	2.9	38.4	68.0
500-1천만원미만	1,225	2.11	2,413	3.07	3,735	3.09	6,065	3.8	9,083	4.3	49.8	65.0
100-500만원미만	8,657	14.88	16,453	21.0	23,863	19.7	38,353	24.1	55,933	26.5	45.8	59.4
50-100만원미만	6,656	11.44	10,755	13.7	20,049	16.6	20,886	13.1	39,061	18.5	87.0	55.6
50만원 미만	40,818	70.17	47,167	60.1	68,337	56.5	89,373	56.1	100,561	47.6	12.5	25.3
계	58,172	100	78,520	100	120,995	100	159,464	100	211,218	100	32.5	38.0

* ('09-'11년) 진료비가 있는 환자 내의 비중임

- 중국 환자가 지출한 총 진료비는 1,016억원으로 전체 진료수입의 25.8%를 차지(1인당 평균진료비는 181만원)
  · 러시아 환자가 지출한 총 진료비는 879억원이며, 전체 진료수입의 22.3%를 차지해 환자수 규모는 4위, 진료수입 규모로는 2위에 해당
  · 1인당 평균진료비가 가장 높은 국적은 아랍에미리트 1,771만원으로 전체 평균진료비(186만원)의 9.5배 이상
  · 전년대비 진료수입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적은 아랍에미리트(370.4%)이며, 그 다음 국적은 카자흐스탄(121.7%)

□ **한국의 강점**

○ **(의료기술·서비스 수준)** 의료기술(9위), 의료시설·장비(2위), 의료 서비스(4위)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 보유(OECD)

○ **(중국 최인접국)** 한국은 중국 관광객의 최다 방문국이며, 의료관광객중 중국인 차지 비율도 1위

○ **(IT 융합산업 창출)** IT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향후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헬스케어·웰니스 관련 융합 산업 주도국 도약 가능

□ **미흡한 부분**

○ 일회성 방문을 넘어선 지속적 흐름 창출, 산업간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등의 비전 실현을 위해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 구축 필요**

- **(규제 완화)** 의료관광 서비스 고도화, 테스트 베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규제완화 필요

* 의료관광 규제완화로 5.9조 부가가치 유발('20), 1.5만개 고용창출 가능(송용주·송용규, 2014)

- **(IT 융복합 연계)** 관광객 유치만이 아닌 글로벌 新시장 주도를 위한 IT융복합 신산업 및 외투유치 유망 분야로의 인식 전환 필요

나. 기본방향

1) 중점추진 전략분야 및 유망 투자 모델

□ 중점추진 전략분야 : 동북아 헬스케어 허브

○ 지속적 수요창출 및 중심국 도약을 위해서는 인프라 개선,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서비스 전반을 고도화할 필요**

○ 의료관광-IT간 융합의 시너지 효과에 기인하는 신산업 창출 가능 분야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관련 생태계의 선제적 조성 필요**

□ 유망 투자 모델

① 의료관광 서비스* 고도화 위한 인프라 구축 성격의 의**료특구 및 의료관광단지 조성**

- 관광특구 등 기존 마련된 인프라를 지역적 기반으로 적극 활용

* 숙박, 관광, 쇼핑, 웰니스, 의료시설, 기타 편의시설

② 관광객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관광 서비스 고도화**

* 원격진료를 통한 개인맞춤형 관리, 체류관련 각종 편의 제고, 웰니스 관련 서비스 다양화 및 심화 등

③ **의료관광-IT융합 新산업** 글로벌 선도를 위한 시스템 기반 **생태계** 구축

<생태계 주요 구성요소>

- (연구개발) 개별기업 혹은 글로벌 협업형 R&D 센터가 기술·제품 개발, 상용화 등 연구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 마련
  - (유망국) 美 등 글로벌 (타겟) 글로벌 헬스케어·웰니스 시장 (활용요소) 중국 시장 인접 테스트 베드
- (스타트업 지원) Start-up Campus, 글로벌 벤쳐캐피털의 국내 유망 강소기업 육성 후 해외 진출
  - (유망국) 中, 美 등 글로벌 (타겟) 글로벌 시장 진출 (활용요소) 벤처기업의 창업열 및 높은 기술 수준
- (Data Hub) 글로벌기업 데이터 센터가 데이터 축적 후 이를 활용한 신산업 발굴
  - (투자유망국) 미국 등 글로벌 (타겟) 중국 및 글로벌 시장 진출 (활용 요소) 신산업 생태계

2) 특화 육성 지역

□ 투자 모델에 따라 FEZ, 창조경제센터, 관광특구, 지역 특화발전 특구 등 기 구축 특구를 최대한 활용

○ **(관광특구 등)** 관광 특구,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활용을 통해 의료 관광단지의 효과적 조성 추진

○ **(경자구역 등)** IT융합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경자구역 등 활용

○ **(창조경제센터)** 글로벌 협업형 R&D 센터*의 기반 인프라로 활용

* 복수의 기업, 학교, 연구소 등이 멤버쉽 형태로 참여하여 지재권을 공유하고 각자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형태

다. 추진과제

(투자모델 1) 의료형 특구 및 의료 관광단지 조성 *** 글로벌 투자유치 -> 중국관광객 대상 서비스 제공**

□ (인프라구축) 관련 특구인프라 구조 조정

○ (현황) 지역별 특구의 중복, 차별화 부재, 규제 상존 등으로 인해 본격적 의료관광 단지 개발을 위한 기반이 미비한 상황

⇒ 관광 특구 등 기 마련된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관련 체제에 대한 점검 필요

○ (개선) 관련 특구에 대한 제로 베이스에서의 접근을 통해, 중복해소, 차별화, 규제 완화 등 차원의 종합적 개선 방안 마련

* 전문가 간담회, 주민 공청회 등 적극 활용

□ **(인프라구축) 의료형 특구 조성을 위한 의료관광-IT융합사업단 발족**

○ (현황) 다부처 공동사업 및 정부-민간 협력 등을 통해 의료형 특구 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게 위한 추진 체계가 부재

○ (개선) 위원회*를 의사결정 기구로 하는 의**료관광-IT융합사업단 발족 추진**

* 정부, 분야별 민간 전문가, 벤쳐 캐피털 등이 참여

<참고 ① : 의료형 특구>

○ 질병의 치료부터 성형/미용에 이르는 타겟별 의료관광 서비스 고도화, 수출 및 투자유치를 위한 도시형 테스트 베드의 거점

○ 글로벌 협업의 R&D센터의 구축, 법·규제 개혁을 위한 의료기기 안전성 평가, 시범 원격진료 사업을 통한 의료관광객 사후 관리 등, 동북아 거점으로서 의료관광의 메카가 되기 위한 특구 사업

<참고 ② : 지역특화 의료관광단지>

○ 관광, 쇼핑, 검진, 미용시술, 디톡스, 스파, 웰빙 체험, 단/장기체류 서비스 등 의료관련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관광단지

○ 자연 환경, 지역 특성화 여건 등을 반영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예) 평창의 경우 천식 등 호흡기 환자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

(투자모델 2) 맞춤형 의료, 관광, 웰니스 서비스 등 의료관광 서비스 고도화
*** 글로벌 투자유치 -> 중국, 러시아, 동남아, 미주 관광객 대상 서비스 제공**

□ **(규제개선) 원격진료 조기 허용**

○ (현황) 현재 의료 관광객에 한해서 사전/사후 관리를 위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계류 중**

* 현재 환자-의료인간 원격진료는 국내법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제한된 서비스(시술/쇼핑 등)만 제공 가능

○ (개선) 법안 논의개시 및 조기 통과를 위한 노력 필요

<원격진료 필요성>

○ 고객 대상의 다양한 사전/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의 플랫폼

- 사전/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재방문을 위한 상담, 자국에서의 연계 서비스를 위한 의료정보기록의 교류를 위한 시스템 구축 허용 등을 위해 원격진료 필요
- 특히, 자국 복귀 후에도 연계된 서비스가 가능케 하여 고객의 만족도/충성도를 상승시켜이를 재구매 및 재방문 등으로 확대 가능

□ (규제개선)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유인알선 범위 확대

○ (현황) 유치업은 현행법상 **병원 알선만 가능**하여, 연계 서비스(뷰티케어, 웰니스 등) 제공을 통한 추가적 부가가치 창출 및 산업 활성화에 한계

* 의료법상 해외“환자”의 개념이 도입되어 있어 연계 서비스 까지 포함되는 “의료 관광객”의 개념과 괴리

○ (개선) 연관 산업으로의 알선도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필요

□ (규제개선) 단기 체류자에 특화된 의료보험 상품 개발 허용

○ (현황) 의료 관광객 의료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보험 상품 제공이 가능한 근거 법령이 부재

* 성형수술 관광객의 경우 자국에서 가입한 여행자 보험에 수술시 사고에 대한 보상 등이 미포함

○ (개선) 의료관광 상품에 단기 체류 관광객 대상 보험 상품 편입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혹은 의료관광특별법상 포함 필요

□ (규제개선/인센티브) 숙박서비스 관련 미분양 아파트 활용 허용

○ (현황) 숙박, 회복, 요양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 창출 및 활용에 있어 현실적 어려움 존재

○ (개선) 미분양 아파트를 외국인 단기 임대에 활용이 가능토록 관련 법규를 개선, 하고 취/등록세 등 차원의 인센티브 마련

(투자모델 3) 시스템 기반의 의료관광-IT융합 新산업생태계 구축
*** 글로벌 투자유치 -> 국내 의료관광객 대상 시스템·서비스 제공**
*** 글로벌 투자유치 -> 국내 생태계를 거점으로 해외 진출**

□ (인프라구축/인센티브) 글로벌 협업 형 R&D 센터 활성화

○ (현황) 산업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일련의 R&D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R&D 센터 활성화가 필요

- 동 분야는 기존의 기술개발 위주의 R&D 센터와 달리, 시장분석, 유통채널 확보 등 사업화 차원의 접근이 함께 이루어지는 기제가 요구

- 따라서 개별 기업의 R&D 센터와는 달리 다양한 기업들이 협업하여 상기 활동들을 함께 수행하는 체제가 필요

○ (개선) 글로벌 협업 형 R&D 센터 활성화를 위한 구체방안 마련

- 인프라 구축 방식, 활동 분야, 운영 방안(정부참여 방안 포함) 등

* (인프라 구축)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베이스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인센티브) 멤버쉽 Fee를 FDI로 인정하고, 입지지원 등 인센티브 수혜가능성 제고

13. 법률회계

가. 현황

□ 세계 법률회계 시장 현황

○ **(법률) 소수의 영미계 로펌이 시장을 주도**하며 대형화·국제화 추세

- '12년, 글로벌 100대 로펌 중 **미국·영국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글로벌 10대 로펌의 **외국 변호사 고용 비율이 50% 이상**

* '14년, Baker & McKenzie의 매출액은 2.8조원으로 국내 법률시장(3조원)과 비등

○ **(회계)** '13년, 딜로이트, EY, PwC, KPMG 등 **글로벌 4대 회계 법인**의 매출액은 125조원으로 **세계 시장의 67%를 점유**

- '12년, 국내시장 역시 글로벌 4대 회계법인과 제휴한 **빅4 회계법인이 국내 시장의 58%를 점유**

* '13년, 국내 4대 회계법인 매출은 1.2조원으로, 글로벌 4대 회계법인의 0.93% 수준

□ 환경변화: 한·미 FTA 개방분야

○ **(법률서비스)** 한 · 미 FTA 발효와 함께 1단계 개방이 이루어졌으며, 협정 발효 2년차에 2단계 개방을 이행하였음.

- 외국법자문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009년 9월 26일 시행)에 따라 한·EU FTA 및 한· 미 FTA 법률서비스 단계적 개방 약속을 이행 중임.

- 1단계 개방 약속 이행: 외국법자문사의 법률(미국법 및 국제공법) 자문서비스 제공을 허용(외국법자문사법 제3조~제9조(자격승인 조항) 및 제10조~제14조(등록 조항))하고, 미국 법률회사가 국내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외국법자문사법 제15조~제16조(설립인가 조항) 및 제18조(등록 조항))함.

- 2단계 개방 약속 이행: 외국법자문사법 개정(2011년 4월 30일)을 통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국내 법률회사가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것(제휴)을 허용(동법 제34조의2)함

- 2014년 2월 현재 미국에 본점사무소를 두고 국내에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총 14개이며, 미국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외국변호사는 52명으로 한· 미 FTA 발효 이후 미국 법률회사 및 변호사의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 진출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업무의 범위를 고려할 때 2단계 개방까지는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에 큰 변화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나, 3단계 개방이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국내외 법률회사간 경쟁과 협력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3단계 개방은 협정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무회사와 미국 법무회사와의 합작투자를 허용하고, 합작법무회사가 대한민국 변호사를 파트너 또는 소속 변호사로 고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임.

○ **(회계서비스)** 한·미FTA 발효와 함께 1단계 개방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2단계 개방 이행은 2017년 3월 15일 이전까지 이행해야 함.

- 한· 미 FTA 회계서비스 시장개방 약속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한· EU FTA가 먼저 발효(2011년 7월 1일)됨에 따라 한·EU FTA 발효 시기를 기준으로 회계서비스 시장개방을 이행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짐.

- 우리나라는 한· EU FTA 및 한· 미 FTA 회계서비스 1단계 개방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2011년 6월 공인회계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개정함.

- 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 12(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조항에 2단계 개방 약속을 이행하는 규정이 도입되었으며, 2단계 개방 일정에 따라 시행될 예정임.

- 2014년 2월 현재 국내에 사무소를 설립한 미국 회계법인은 전무하며, 미 주지역 최대 한인 회계법인인 CKP가 2014년 3~4월에 한국 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사무소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

<표 4-11> 한미 FTA 법률·회계 서비스 분야 주요개방 약속

	한미 FTA 타결내용		근거조항
법률	1단계	협정 발효일 이전에 미국 자격 취득 변호사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자문사(FLC)로 법률(미국법·국제공법)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미국 법무회사가 대한민국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	한·미 FTA 서비스 협정문, 한국의 미래유보(Annex II)
	2단계	협정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무회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의 제휴 허용	
	3단계	협정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무회사와 미국 법무회사와의 합작투자를 허용하고, 합작법무회사가 대한민국 변호사를 파트너 또는 소속 변호사로 고용하는 것을 허용	
회계	1단계	협정 발효일 이전에 미국 내에 등록한 미국 공인회계사 또는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미국회계법인이 대한민국에 설립한 사무소를 통해 미국 또는 국제 회계법 및 기준에 대한 회계컨설팅 서비스 공급을 허용하고 미국 등록 미국 회계사가 대한민국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	한·미 FTA 서비스 협정문, 한국의 미래유보(Annex II)
	2단계	협정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미국 내에 등록한 미국 공인회계사가 대한민국 회계법인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 ※ 대한민국의 공인회계사가 대한민국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50%를 초과해서 보유해야 하며, 미국 등록 미국 공인회계사 1인은 대한민국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10% 미만까지만 보유 가능	

□ 법률회계 허브로서 한국의 비교 우위

○ **(약점)**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영미계 법률회계법인과 비교할 때 **자금력, 정보력, 국제화 정도 등에서 절대 열위**

* 법률회계 서비스업은 연평균 약 6억 달러 수준의 무역 수지 적자('11～'13)

○ **(강점)** 법률회계법인이 영세함에도 불구, **지정학적 가치, FTA 효과 등**에서 **동북아 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성장잠재력 충분**

- 무역 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중간 지대에 위치하여 **지정학적으로 국제 법률회계 관련 서비스 공급의 최적지**

- **FTA 허브로서**, 국제 거래를 중심으로 국제소송·중재, 국제회계 업무 등과 같은 **기업 자문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 한-EU, 한-미 FTA에 따른 **법률회계 시장의 개방**은 **동북아 법률회계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회요인**

나. 기본 방향

1) 중점추진 전략분야 및 유망 투자 모델

□ **중점추진 전략분야 : 국제중재 허브 구축**

○ 영미에 의해 독과점적으로 지배된 법률회계 시장에서 상대적 우위를 지닌 **국제중재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

- **한국 로펌의 중재 역량은** 외환위기 때 외자의 기업사냥 후 발생한 론스타·IPIC건과 같은 분쟁을 통해 학습한 결과 **아시아 최고 수준**

- **대한상사중재원은** 홍·싱에 비해 정부 지원이 부족함에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중재 사건을 처리**하는 등 **향후 발전 가능성 내재**

* '13년, KCAB(한국) 338건, HKIAC(홍콩) 260건, SIAC(싱가포르) 259건

- 고액의 분쟁 가액, 중재인 체재비용 등 **경제효과가 크고, MICE·관광산업과도 연계 육성이 가능**한 유망 분야

* '13년, ICC 등에 접수된 한국기업 분쟁가액은 총 18.5조원(론스타·IPIC건 약4조)

** 1회 중재심리 시 중재인, 대리인, 분쟁당사자 등 평균 3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 참여

⇒ **한국 로펌의 전문성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잠재력 등을 기반으로 한국을 국제중재 사건의 핵심 중재지로 육성**

□ **유망 투자 모델**

① **(중재유치)** 최적의 국제중재환경 마련 → 국제중재사건의 심리가 이루지는 장소가 서울이 되도록 사건 유치 → 외국 로펌 유치

○ 영미법계인 홍·싱에 비해, **대륙법계인 한국은** 아시아권 중재서비스의 주요 수요자인 **중국·일본·인도네시아 등의 사건 유치 유리**

② **(MICE·관광)** 컨퍼런스, 국제회의 개최 및 교육 서비스 제공 → MICE·관광 관련 산업 수입 증대

<국제중재 사례>

- **(국제상사중재)** '08년, IPIC가 현대오일뱅크의 주식매각을 추진하자 현대중공업이 우선매수청구권을 주장하며 싱가포르를 중재지로 ICC에 중재제기
- **(국제투자중재)** '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BIT를 근거로 ICSID에 중재를 제기한 사건

2) 특화 육성 지역

□ 중재 인프라 및 MICE 시설, 관광숙박 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강남 삼성동 일대**를 중재 허브로 육성

○ **대한상사중재원이 위치**하고 있는 **무역회관**을 **인근의 MICE·관광 인프라를 활용**하여 동북아 **국제중재 중심지로 탈바꿈**

다. 추진과제

❖ **투자 모델 1**

▶ 최적의 중재환경 마련 → 국제중재사건 유치 → 외국 로펌 유치

□ **(제도개선) 변호사법과 중재법, 중재규칙**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고 이용자의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 정비**

○ 외국변호사의 **중재업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변호사법(§109) 개정** 또는 **외국법자문사법에 해당 내용 반영**

* (현행) 변호사가 아닌 자의 중재 대리를 금지 → (개정) 해당 부분 삭제

○ 중재법 개정을 통해 **국제중재판정의 집행과 승인 절차** 및 국제중재기관의 **중재규칙 제·개정 절차의 간소화**

* 중재법 §41(중재규칙의 제정 및 승인) 삭제, §37(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개정

□ **(규칙개발)** FTA 체결에 따라 해운, 물류, 건설, 국제투자, M&A, 지식재산권 등 **증가하는 분쟁에 적합한 맞춤형 중재규칙 개발**

○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해외직구, 해외 SOC, 의료산업** 등 특화가 필요한 틈새시장 적극 공략

* AAA는 지재권, 금융 등 다양한 분쟁 해결을 위해 50여개의 규칙 개발·운영 중

□ **(인센티브)** 해외 유명 국제중재인 위촉을 위하여 **중재인 수당을 인상**하고, **수당 소득세 면제**, **비자 면제** 등 혜택 부여

*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은 ICC 대비 60% 수준의 수당 지급

** 싱가포르는 '20년까지 비싱가포르 거주 중재인에게 소득세 면제하고, 심리를 위해 입국하는 중재인·변호사·통역사 등에 Social Visit Pass(60일) 발급

□ **(인프라) 중재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고, **대한상사중재원 확대 개편**

○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취소, 중재인 선임**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에 전담 재판부를 신설**

* 영국, 홍콩 등은 중재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별도 설치·운영

○ 대한상사중재원이 위치한 **무역회관을 중심**으로 **사무공간 및 심리시설을 확충**하고, **서울국제중재센터 공간도 연계 활용**

* 대한상사중재원은 230여평, 서울국제중재센터는 130여평 규모인데 반해, 싱가포르는 1,500여평(맥스웰챔버스), 홍콩은 500여평(정부소유 무상임차) 규모

❖ **투자 모델 2**
▶ 컨퍼런스, 국제회의 개최 및 교육 서비스 제공 → MICE+관광 관련 산업 수입 증대

□ **(교육서비스)** 분야별·단계별로 다양한 중재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중재인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교육 강화**

○ 국내외 로스쿨, 대한상사중재원 등의 협조를 통해 **국제중재, 조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해외의 교육 수요 흡수**

* 하버드 로스쿨, 페퍼다인 로스쿨 등의 ADR 교육 프로그램을 국내에 유치

○ 대형 국제중재심리에 필요한 **통번역·속기인력을 집중 양성**하여 **중재지로서의 편의성 향상**

□ **(MICE·관광) 국제중재행사를 개최**하여 중재지로서의 한국의 이점 등을 적극 홍보하고, **MICE·관광 산업과 연계 발전 유도**

○ '16년 대한상사중재원 5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대규모 국제중제행사를 개최**하고, **MICE 산업과 연계하여 국제중재회의 정례화**

* ICCA, IBA Arbitration Day에는 매년 4,000여명의 중재 전문가들이 참가, 홍콩과 비엔나에서 매년 열리는 Vis Moot 대회에는 2,000여명의 중재인과 학생들이 참가

○ 대한상사중재원·한국관광공사간 협조를 통해 **중재관광 상품 개발 지원**

14. 교육 서비스

가. 현황

□ 일반현황

○ 세계화, 정보화, 지식경제의 확산 등의 세계환경 변화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등은 부가가치가 높은 교육서비스의 산업 육성을 요구

- 특히 선진국들은 교육서비스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서 이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교육선진국들은 새로운 교육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제적으로 그 질을 인정받아 교육후진국들의 학생들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선진국)** 미국,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등은 축척된 노하우, 기술 경쟁력, 우수한 정주여건을 바탕으로 전세계 유학 수요의 절반 점유

* 전세계 유학생 450만명 중 절반이 미국,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5개국에 집중 (Education at a glance, OECD 2014)

- 미국의 교육서비스 산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며, 싱가포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을 유치하여 교육 및 연구 허브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 호주, 핀란드, 영국 등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식경제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고도의 고등교육단계의 직업교육 활성화와 자격제도의 개발을 통해서 교육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있음.

- 일본은 '구조개혁특구' 제도를 중심으로 교육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후발 경쟁국)** 싱가포르, 중국, 카타르 등은 재정·세제지원 등을 통한 해외 유명대학 유치로 교육 시장에서의 인지도 확대 및 수익성을 창출

- 싱가포르는 1998년 지식기반 산업은 세계허브 달성을 목표로 'Industry 21'을 발표하면서 특구화 전략을 추진한 바 있음.
  - "Industry 21"은 싱가포르 정부가 경제성장 촉진 및 21세기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가속화를 위한 지식기반산업 육성 계획이며, 동 계획의 10대 집중육성분야 중 하나로 교육부문의 발전 계획이 포함됨.
  - 이후 싱가포르는 외국의 우수 대학 분교를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외국 대학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촉진시키고 있음.
  - 싱가포르 대학과 외국 대학간의 교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Industry 21"의 교육부문 발전 비전과 목표에 따라 지식기반사회에서 중요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의 우수 대학과 교육부문에서는 학과 교육과정 및 교수진을 교류하거나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두고, 연구부문에서는 공동연구와 연구자 교류를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자국의 교육시장을 일정한 조건을 두고 개방하였으며, 주요 특구를 중심으로 교육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을 연계 추진함.
  - 중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추진되어 오던 자국 내 대학간 M&A를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장학금 제도와 정착 보조비 제공 등의 전략적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시행함.
  - 특히 WTO 가입 이후 중국은 해외대학의 중국 분교 유치 및 합작법인 설립, 외국대학과의 교류 활성화, 유학생 유치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또한 주요 특구사례로서 장쑤(江蘇)성 쑤저우(蘇州) 고등교육구(Higher Education Town) 지정을 통해 공업원구에 중국대학을 비롯한 중국대학·외국대학 간의 합작대학을 집적시킨 Higher Education Town을 조성한 바 있음.
  - 중국의 외국 대학 유치 지원제도: (1) 설립에 대한 지원으로는 ▶학교부지 및 건설비용 무상제공, ▶본국으로의 과실송금(수입금 등) 허용 및 영리학교법인 설립 인정, ▶민간기업(영리법인)과의 합작설립 허용 등이 있음. (2) 운영에 대한 지원으로는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혜택 및 의료보험 제도 등의 도입, ▶해외 학생 유치 장려금 등이 있음.

- 카타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제공을 통한 인재 양성과 교육을 국가 성장 산업의 하나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 허브(hub) 비전을 세우고 추진 중임.

· 교육 허브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단지인 Education City 조성 계획을 수립, 2003년 10월 공식 출범됨.

· 카타르 국왕은 교육도시 운영 주체인 카타르 재단(Qatar Foundation)을 직접 설립하였으며, 카타르재단은 외국 대학 유치에 핵심적 역할을 함(학교시설 제공, 재정적 지원 수행).

· 카타르는 조성된 Education City에 세계 우수 교육기관을 선별적으로 유치·입주시키고 있으며, 그 외에도 카타르 국립학교(Qatar Academy)와 각종 교육 및 연구기관을 설립함.

· 카타르의 외국 대학 유치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정부·외국대학간 협력을 통한 분교 유치 방식(정부(카타르재단)가 학교시설 제공, 재정적 지원 등을 수행하며, 외국 대학은 교수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활용하는 점임.

○ **(한국)** 교육서비스 분야는 공공성 및 시장규제가 강하며, 他 산업 대비 개방성이 매우 낮고 특히 고등교육 부분의 경쟁력이 취약

* 국가경쟁력 순위(WEF 2014) : 대한민국 경쟁력 순위(26위), 초등교육의 질(44위), 고등교육 시스템의 질(73위)

- 제주도, 경자구역 등 일부지역에는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가능하나, 제도적인 한계*로 글로벌 우수 학교 유치에는 일정부분 한계

* 비영리 외국법인만 설립 가능, 과실송금 불허, 학교 설립시 일률적 예산 지원 등

□ 한국의 비교 우위

○ **(약점)** 비영어권이라는 제약요인 및 정규 교유과정에 대해서는 영리법인 설립 불가라는 규제 등으로 글로벌 최고학교를 유치, 단기간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강점)**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권 유학생 유치경험, 한류 확산 및 FTA 네크워크 구축을 통한 역동적 시장을 보유

-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아시아 지역내의 창업 연계형 교육분야 허브로써 비즈니스 모델 창출 가능

나. 기본방향

1) 중점추진 전략분야 및 유망 투자 모델

□ **중점추진 전략분야 : 영리형 특화 기술전문 교육기관 유치·양성**

○ 학위를 수여하는 정규 교육과정과는 달리 성인 대상의 기술전문 교육기관은 외국인 직접투자 및 수익 사업 가능

○ 국내 유학수요와 함께, 영화, 드라마 및 광고 등을 통해 한류에 관심많은 동남아권의 음식, 미용, 뷰티 분야 유학수요 흡수 가능

□ **유망 투자 모델**

① **(특화 기술 전문학교 유치)** 요리, 디자인, 사진·영화 등 특화된 해외유명 전문 기술학교(디플로마 과정)를 영리형 법인 형태로 유치

② **(한국형 기술아카데미 설립)** 글로벌 기술 아카데미(전문기술 교육기관) 설립을 통한 양질의 창업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수익 창출

다. 추진과제

(투자 모델 1) 해외 유명 기술 전문학교 유치 및 설립을 통한 국내 유학수요 흡수 및 동남아 유학생 유치

□ **(규제개선) 기술 전문학교 강사에 대한 국내 체류 비자발급 허용**

○ **(현황)** 국내에서 '강의'를 목적으로 한 비자는 대학초빙강사(E-1) 및 외국어 강사(E-2)만 가능

- 따라서, 대학이 아닌 외국계 기술 전문학교 설립시 해당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

<르 꼬로동 블루 사례>

- 프랑스 요리 전문학교인 르 꼬로동 블루(Le Cordon Bleu, 세계 3대 요리학교)는 직접투자를 통한 별도의 요리 전문학교를 설립코자 하였으나, 프랑스인 강사진의 비자 발급 불가로 별도의 법인 설립 중단
- 숙명여대내 경영전문대학원 공개강좌 형태(대학내 편제)로 프로그램 운영 중('02~), 외국 강사진의 경우 대학초빙강사(E-1) 형태로 국내 체류

○ **(개선)** 강의를 목적으로 한 기술 전문학교 강사에 대해서는 외국어 강사와 동일하게 비자발급 허용

○ **(기대효과)**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외국계 유명 기술전문학교 설립 및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수익성을 담보한 기술교육 시장 창출

- 아울러, 궁극적으로 외투확대, 유학수지 개선, 해당 영리법인에 대한 과세 및 동남아 유학생 유치 등 기대

(투자 모델 2) 외국인 대상의 직능기술 종합아카데미 설립을 통한 동남아 맞춤형 전문 기술인력 양성 및 연계산업 활성화 도모

□ **(인프라 구축)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 직능교육기관 설립**

○ **(현황)** 동남아 지역의 한류 확산으로 한국의 음식, 미용, 화장품 등에 대한 동남아권의 관심과 직업기술 교육수요 증가

* 국내 뷰티(네일아트, 피부관리 등)관련 직업교육 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현지에서 한국형 뷰티샵 등 운영수요 증대

- 그러나, 국내 직능 프로그램은 사설학원 중심으로만 구성, 양질의 국제화된 종합 기술교육 서비스가 제한적

* 크리스찬 쇼보(프랑스), 비달 사순(영국), 야마도 미용단기대학(일본) 등과 같이 한국의 뷰티 및 패션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교육기관 부재

○ **(개선)** 한류와 연계, 전문 커리큘럼을 강화한 종합 기술 및 직능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동남아 맞춤형 창업연계 기술교육 실시

○ **(기대효과)** 교육 및 한국 브랜드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동남아 대상의 새로운 교육 서비스 시장 창출 가능

- 아울러, 졸업생의 현지 창업·취업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출확대 및 국내 연관 산업의 활성화 가능

* 애플은 전세계 International School에 Mac 및 교육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 어릴 때부터 애플에 친숙한 졸업생은 애플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음

제5장 관련 제도적·물적 인프라 구축

1. 인센티브 제도

□ 대여형 현금지원제도 도입

○ **(현황)** FTA 플랫폼 구축에 따라 글로벌기업의 국내진출이 확대 되면 한국투자를 위한 자금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이를 지원하기 위해 현금지원제도를 운영중이나 현재 지원형태는기업이 필요 용처에 소비하고 반납할 필요가 없는 교부형으로서 막대한 예산소요가 발생하여 지원기준이 까다로워지는 문제

○ **(개선)** 기존 교부형 현금지원 기준에는 못미치나 경제기여도가 높은 외투기업에 장기 무이자로 대여하는 대여형 현금지원제도를 도입

- 또한 대여형의 경우 지급한도를 교부형보다 확대함으로서 교부형 지원 가능 기업이 교부형과 대여형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

* (예시) 현금지원 한도 : 교부형(현행)의 경우 투자금액의 최대 30%, 대여형의 경우 투자금액의 최대 70%

- 이를 통해 현금지원제도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다양화

□ 수출형 외투지역 제도 도입

○ **(현황)** FTA 플랫폼 구축에 따라 한국을 거점으로 글로벌시장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외투기업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현재 외투지역 지정제도는 국내 투자규모 중심으로서 외투기업의 수출에 따른 경제기여도에 대한 고려가 미흡

○ **(개선)** 수출규모를 고려한 외투지역 제도를 도입

* (예시)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요건(제조업) : (기존) FDI 3천만불 이상 → (수출형) FDI 2천만불 이상 + 연평균 수출액 1천만불 이상

□ 지식서비스 업종에 대한 외투지역 지정기준 완화

○ **(현황)** 글로벌기업의 투자확대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지식서비스업*의 투자 수요 확대와 함께 입지지원에 대한 요구도 커질 것으로 예상

* 상품중개업, 전기통신업, 정보서비스업, 법무・회계 관련업, 마케팅 관련업, 경영컨설팅, 전문디자인, 재산권 중개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각종 교육훈련업 등

- 그러나 현재 개별형 외투지역 제도는 지식서비스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동일하게 지정요건이 FDI 3천만불로 되어 있어 시설투자 수요가 많지 않은 일부 지식서비스의 경우 부적합

* 법무・회계 관련업, 마케팅 관련업, 경영컨설팅, 전문디자인, 재산권 중개업, 각종 교육훈련업 등

○ **(개선)** 지식서비스업종의 경우 물류(2천만불) 또는 관광업(1천만불) 수준으로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요건을 완화를 검토

□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도입 검토

○ **(현황)** 글로벌기업의 투자확대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업*의 투자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상품중개업, 전기통신업, 정보서비스업, 법무・회계 관련업, 마케팅 관련업, 경영컨설팅, 전문디자인, 재산권 중개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각종 교육훈련업 등

- 현행 조특법은 고부가가치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이 있으나 제조업 중심으로서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미비

* 전자전보 및 전기분야, 엔지니어링 서비스, 어업관련, 신물질・정밀화학 관련, 생물산업 관련, 어업관련, 광학의료기기 관련, 환경・에너지 관련 분야 등

○ **(개선)** 지식서비스업중 부가가치 창출이 높고 글로벌 기업의 효과적인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대상으로 포함을 적극 검토(조특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개정)

□ 헤드쿼터 지원확대

○ **(현황)** 한국을 거점으로 하는 글로벌기업의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한국에 헤드쿼터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효과적 인센티브가 미흡

- **(조세지원)** 조세감면* 수준이 낮아 헤드쿼터·R&D센터 유치 인센티브로서 효과가 미흡

* 글로벌기업 헤드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임직원에 대해 단일 소득세율(17%) 적용(5년)

- **(현금지원)** 현재 헤드쿼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급규모가 투자금액(FDI 규모) 기준으로 되어 있어 인적구성 중심의 헤드쿼터의 경우 현금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

○ **(개선)** 글로벌기업 헤드쿼터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현금지원 지급기준을 개선

- **(조세지원)** 국내 헤드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의 수에 따라 법인세를 일부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 (예) 글로벌 헤드쿼터 인정기업으로서 헤드쿼터 최고책임자를 포함 국내 상주 헤드쿼터 담당 외국인 인력이 7명 이상인 경우 설치 기업의 법인세를 2년간 50% 감면

- **(현금지원)** 현금지원을 헤드쿼터 구성 인원을 기준으로 지급규모를 평가하는 등 헤드쿼터 특성에 맞도록 현금지원제도를 개선

□ 외투기업 인센티브 중앙-지방 매칭비율 다변화

○ **(현황)** 현재 중앙-지방간 일원화된 매칭 비율은 지자체 간 투자여건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실제 외투 유치에 있어 장애로 작용

* 지자체간 재정자립도, 외투 유치여건(산업기반) 등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율이 적용되는 상황

* (최근사례) 최근 수도권 지역에 유치된 R&D 센터와 관련 중앙-지방간 현금지원 매칭관련 이견으로 절차 지연 중

○ **(개선방안)** 재정 자립도, 외투 유치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를 일정 그룹으로 분류하여 매칭 비율을 차별화 추진

- 정책적 특수한 필요*가 있는 경우, 현금 지원 매칭시 중앙 정부가 추가 부담하는 방안 등도 포함하여 검토

2. 규제개선

□ 외국인 고용 허용비율 확대

○ **(현황)** 외국인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비율을 국민고용자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초기 외투기업 또는 소규모 외투기업의 경우 경영활동에 애로

○ **(개선)** 현재 적용중인 외국인력 고용 특례제도를 확대를 통해 외국인 고용 허용비율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표 4-12> 외국인력 고용 특례제도 개선방향(예시)

외투기업		현행	개선
연간매출액 10만불 이상		2명 이상의 내국민을 고용한 경우 외국인 1명 고용을 허용	내국인 고용과 상관없이 3명까지 허용
특수언어 지역 수출 외투기업	수출규모 50만불이하	외국인 1명 고용 허용	외국인 3명 고용 허용
	수출규모 50만불 이상	내국민고용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 허용	내국인 고용인원과 동수의 외국인 고용 허용

□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활동 제한 완화**

○ **(현황)** 한국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필요

- **(취업 기간)** 그러나 현재 외국인은 국내 취업기간이 3년에 불과(고용기업이 2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년 연장이 가능)

- **(재취업 기간)** 또한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한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국내 재취업이 불가

○ **(개선)** 고급 외국인 인력이 자유롭게 국내외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하도록 허용

- **(취업 기간)** 일정규모 이상 외투기업의 임직원, 숙련 기술인력,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의 경우에는 비자체류기한 상한에 맞춰 취업기간을 연장(3년 → 5년)

- **(재취업 기간)** 6개월내 국내 재취업 금지규정을 철폐하여 고급 외국인 인력이 자유롭게 국내외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하도록 허용

□ **지재권 침해소송 관련 입증책임 제도 개선**

○ **(현황)** 지재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시 주로 IP 침해를 통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 규모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

- 침해자의 이익에 관한 정보는 침해자의 내부정보이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권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개선)**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침해자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특허법령 개정)을 추진

* 현재 피고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나, 향후 영업비밀도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출가능하도록 개선

□ **산업안전관리자 관련 제도 개선**

○ **(현황)** 산업안전보건관리법은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관리감독자 외에 기술적 사항을 조언하는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음(사업장 규모 50인 이상인 경우)

* 문화컨텐츠, 복합레저,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시설 관리, 보건, 도소매, 개인 서비스업 등

- 그러나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의 경우 기술적 측면에서 위해요소가 낮으므로 관리감독자외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할 필요성도 낮음

- 또한 안전관리자를 각 부문별 관련 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대학 전공학과 이수자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서비스업의 경우 새로운 인력채용이 불가피

○ **(개선)** 서비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 적용되상이 되는 사업장 규모를 100인 이상으로 상향하고

- 1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기존 인력중에 지정을 하고 별도의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서 인건비 부담을 완화

□ **취업규칙 변경시 노조 등 의무동의 규정 완화**

○ **(현황)**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내용에 근로자 입장에서 불이익이 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무동의가 필요하나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간접 비용이 소요

○ **(개선)**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에 유리한 제도도입을 통해 불리한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

- 노동조합 등과 협의 절차를 거치면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 국내 외화 실수요를 위한 외화 대출 용인

○ **(현황)** 한국에 글로벌기업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환차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화 대출 등 외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현행 규정은 해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이 아닌 경우 외화 부채 최소화를 위해 외화 대출을 금지

○ **(개선)** 외투기업의 경우에는 판매·구매 등 실수요에 필요한 외촤 대출의 경우 일정한 한도내에서 가능하도록 개선

3. 외국인투자 유치 및 지원체계 개편

□ 옴부즈만 기능 강화

○ **(현황)**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효과적 외투기업 애로 수렴전달을 위해서는 개별부처와 해소방안을 협의하는 협력체계 구축 강화가 필요

- 또한 발굴된 애로사항이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각종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회의체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

○ **(개선)** 분야별·지역별 협력체계 및 외투위 등 회의체를 활용한 제도개선을 추진

- **(분야별)** 조세, 환경, 노동 등 외투기업의 주요 관심 분야별로 해당부처, 주한외국기업상의, 옴부즈만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을 추진

* 조세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협의회」 구성· 운영(분기별 개최)

- **(지역별)** 산업부 고위공무원과 옴부즈만이 합동으로 개최하고 주한외국기업상의가 참여하는 지역별 외투기업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 **(회의체)** 발굴된 애로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개선가능 사항에 대해서는 무역투자회의 등 회의체에 적극 상정

□ 중국 등 전략지역에 대한 유치조직 강화

○ **(현황)** 한중 FTA를 활용한 중국기업 및 중동외교 성과에 따른 투자유치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걸맞는 유치조직*이 필요

* 중국의 국내 직접투자(억불, 신고기준) : ('12) 7.2 → ('13) 4.8 → ('14) 11.9

* 담당조직(전략지역유치팀 : 7명)은 타 조직(제조업유치팀 : 12명, 서비스산업유치팀 : 10명) 에 비해 인력이 부족

○ **(개선)** 현지 전문가 인력을 확대하고 현재 서비스업 유치팀을 중국중동 유치팀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 중국 지역 코트라 투자유치 활동무역관의 투자전담 직원 확충
* (예시) 현재 직원 6명, 전문위원 2명 → 직원 7명, 전문위원 5명

□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 **(현황)** FTA 효과 홍보 등을 통한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유치 기여자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필요하며 법적근거(외촉법 제14조의3)도 마련되어 있으나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

○ **(개선)** 해당 지자체, 경자구역 등 유관기관 및 민간의 투자유치 유공자에게 경제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지급을 추진

□ 외국인투자유치 정보체계 개편

○ **(현황)** 현재 KOTRA IK 사이트가 운영 중이나, 잠재 투자가, 기진출 외투기업 대상 실질적 유용성이 큰 정보 제공 강화 필요

○ **(개선)** FTA 관련 정보, R&D 사업 공고, 애로해소 처리 현황 등 실질적 필요가 큰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외투 포털 확대개편
(KOTRA, 외투포탈 확대개편, 11월)

- 실제 투자 결정에 참고 가능한 FTA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애로해소 처리 현황을 온라인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조치

□ 조세감면 체계 일원화

○ **(현황)** 외투기업들이 국내에서 세제감면을 받고자 하거나 세제관련 애로를 건의하고자 하는 경우 창구가 분산되어 있는 문제

- 조세 감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절차는 KOTRA를 통해 대행가능

* 조세감면은 기재부에 별도로 신청하고 협의 진행

○ **(개선)** 관계부처 협의 절차를 KOTRA에 위탁·대행하도록 창구 단일화를 통해 외투기업 편의 제고(기재부,「조특법시행령」개정, '16.1월)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전략 추진방안 연구

KOTRA자료 15-037

발행인 : 김재홍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5년 9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ISBN : 978-89-94348-74-2 (93320)

Copyright ⓒ201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